

#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2009

신윤정, 이현주, 김태완, 최성은, 최숙희, 권지은, 이수형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 출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연구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 머리말

2009년 7월부터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양육 수당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정 내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제까지 국내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은 주로 보육시설을 다니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장애와 혹은 입양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육수당은 보편적인 측면에서 재가 양육지원을 위한 최초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양육 수당 제도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가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책임이 각 개별 가정을 떠나 국가 사회 전반에 걸친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양육수당 제도는 만0~만1세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양육수당의 근본적인 취지를 다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육 수당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육 수당 정책 시나리오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각 시나리오의 특징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양육 수당 정책이 확대되어 적용 될때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육 수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성을 전화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는바, 양육 수당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실제적으로 양육 수당이 정책 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 수당 급여 액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양육 수당 도입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저

하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수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정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언을 제공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 양육과 관련된 지원 정책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양육 수당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정책간의 중복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 정책의 특수한 목적 하에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정 내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양육 수당과는 중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양육 수당 정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 양육 수당 정책 전달체계의 구성을 정교하게 하는 것이 요청되는바, 이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전달체계 구성안을 제시하고 이에 수반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 하였다.

양육 수당 정책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우리나라 영유아 지원 정책이 시설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육 수당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이행 초기에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유아 지원 정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연구진은 본 연구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주신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원내 검독자로서 귀중한 조언을 전해 주신 이삼식 박사와 오영희 박사께 감사드린다.

2009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 목차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17
제3절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의 실태 및 현황 .....	18
제2장 양육 수당의 국내외 정책 사례 .....	25
제1절 외국의 정책 사례 .....	25
제2절 국내 양육 지원 정책 .....	47
제3장 자녀 양육 행태 및 시민 의식 분석 .....	69
제1절 양육수당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분석 .....	69
제2절 양육수당에 대한 시민 의식 분석 .....	104
제4장 양육수당 정책의 추진 방안 .....	121
제1절 양육수당 정책의 목표와 비전 .....	121
제2절 양육수당 정책의 시나리오 .....	126
제5장 양육수당 전달체계 구축 방안 .....	147
제1절 전달체계 구성의 원칙 .....	148
제2절 관련 제도의 전달체계 검토: 보육료지원 전달체계 .....	150
제3절 양육 수당 전달체계의 구성 .....	153
제4절 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	156
제6장 결론 .....	166
참고문헌 .....	176
부록 .....	179
<부록 1> 전화조사결과 집단별 차이 분석 표 .....	181
<부록 2> 양육 수당 정책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설문지 .....	224

## 표목차

<표 1- 1> 영유아 연령별 육아지원시설 미이용현황 (2007년) .....	19
<표 2- 1> 각국의 양육 수당 내용 .....	26
<표 2-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연령별 월 지급액 및 연령기준(2008년기준) .....	49
<표 2- 3> 양육 수당과 다른 제도들 간의 중복성 요약표 .....	56
<표 2- 4> 광역지자체 양육수당 지원 현황 (2008년 8월 현재) .....	59
<표 2- 5> 중소도시 양육수당 지원 현황 (2008년 8월 현재) .....	60
<표 2- 6>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현황 (2008년 8월 현재) .....	62
<표 2- 7> 대도시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 (2008년 8월 현재) .....	64
<표 2- 8> 중소도시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 (2008년 8월 현재) .....	65
<표 2- 9> 농어촌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 (2008년 8월 현재) .....	67
<표 3- 1> 양육 수당 정책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 주요 조사 내용 .....	71
<표 3- 2> 양육 수당 대상자 비율 .....	73
<표 3- 3> 응답자 특성 빈도 분석 .....	73
<표 3- 4> 응답자 특성 평균 분석 .....	75
<표 3- 5>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이유 .....	77
<표 3- 6> 과거 보육시설 이용 경험 .....	79
<표 3- 7> 양육 수당의 활용도: 양육 수당 대상자 .....	82
<표 3- 8> 취업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	83
<표 3- 9> 희망 양육 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	86
<표 3-10> 양육수당 도입시 가정에서 양육 여부 .....	87
<표 3-11> 양육수당 도입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유 .....	88
<표 3-12> 양육 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 행태 변화 .....	90
<표 3-13> 양육 수당의 활용도: 양육 수당 비대상자 .....	93
<표 3-14> 취업 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	94
<표 3-15> 희망 양육 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	96



<표 3-16> 보육료 무상지원 및 양육수당 부재시 양육 행태 .....	98
<표 3-17>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	99
<표 3-18> 집에서 키우는 이유 .....	100
<표 3-19> 양제도간의 형평성 .....	101
<표 3-20> 심층면접 내용 .....	106
<표 3-21> 심층면접 결과: 희망하는 양육 관련 정부 정책 .....	120
<표 4- 1> 2009년도 보육료 무상 지원과 양육수당 정책 정부 계획 .....	121
<표 4- 2> 양육수당의 취지 · 대상 · 이념 · 책임 .....	125
<표 4- 3> 양육수당 지원 확대 범위 .....	127
<표 4- 4> 양육 수당 시나리오별 주요 내용 .....	128
<표 4- 5> 영유아 인구 추계 (2009~2012) .....	132
<표 4- 6>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인구 추계 .....	132
<표 4- 7> 서울과 지방의 영유아 인구 및 비율 .....	133
<표 4- 8> 새로마지 플랜 2010: 차등보육 · 교육비 지원계획 .....	134
<표 4- 9> 연령별 빈곤 아동 비율 추계치 .....	134
<표 4-10> 대상자 수와 예산 추계: 시나리오 I (연령 확대 안), 차상위 15% 적용 ·	136
<표 4-11> 대상자수와 예산 추계: 시나리오 I(연령 확대 안), 연령별 아동빈곤율 적용 ·	136
<표 4-12> 대상자수와 예산 추계: 시나리오II(연령 및 급여수준 확대 안), 차상위 15% 적용	137
<표 4-13> 대상자수와 예산 추계: 시나리오 II (연령 및 급여수준 확대안), 연령별 아동빈곤율 적용	137
<표 4-14> 대상자수와 예산 추계: 시나리오 III (연령 및 소득기준 확대 안) .....	139
<표 4-15> 대상자수와 예산 추계: 시나리오 IV (연령, 소득 기준, 급여 수준 확대 안) ·	139
<표 4-16> 양육 수당 시나리오별 특징 및 장단점 분석 .....	146

## 그림 목차

[그림 4-1] 2009년도 보육료 무상 지원과 양육수당 정책 정부 계획 .....	122
[그림 4-2] 양육 수당 시나리오 I: 연령별 확대 안 .....	128
[그림 4-3] 양육 수당 시나리오 II: 연령 및 급여 수준 확대 안 .....	129
[그림 4-4] 양육 수당 시나리오 III: 연령 및 소득기준 확대 안 .....	130
[그림 4-5] 양육 수당 시나리오 IV: 연령, 소득기준, 급여 수준 확대 안 .....	131
[그림 4-6] 양육 수당 대상자수 추계 (2009~2012) .....	141
[그림 4-7] 양육 수당 예산액 추계 (2009~2012) .....	141
[그림 4-8] 양육수당 연령 확대에 따른 단절적인 지급 문제 .....	142
[그림 5-1] 양육수당 전달체계안의 개요 .....	155
[그림 5-2] 양육 수당 전달 체계를 위한 전산 인프라 구축 방안 .....	158
[그림 5-3] 바우처의 효과가 현금지원의 효과와 동일한 경우 (소비 비제약 수혜자, unconstrained) .....	162
[그림 5-4] 바우처가 현금지원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소비제약(constrained) 수혜자) 기타소비재 .....	163

## 요 약

- 양육수당 정책은 이제까지 정부의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이 시설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하고 국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보편적인 성격의 정책을 지향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타당성을 근거로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이러한 유형별 정책 시나리오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양육수당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며 양육 수당 정책의 전달체계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양육 수당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음
- 2002년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의 형식으로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공화국, 호주 등 11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중 스웨덴과 핀란드의 양육수당 정책을 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였음
- 중앙정부에서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장애아동수당,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수당, 입양 자녀 양육 수당, 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 수당, 인적·특별 세제 공제, 근로장려세제가 있음. 지자체 정책으로는 출산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출산 축하금 제도와 양육비 지원정책이 있음
  - 양육수당의 경우 보육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보육서비스 미이용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기타 제도들은 제도별로 목적과 목표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양육 수당과의 서비스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의 목적을 영유아를 가정 내에서 건전하게 양육하여 건

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양육수당의 대상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로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로 하였음. 양육수당의 책임은 영유아의 보호자 뿐 만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양육수당의 이념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였음 첫째, 양육 수당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함, 둘째, 양육 수당은 영유아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가정내에서 양육되어야 함
- 이러한 양육수당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아동 연령, 소득 기준, 급여액수를 기준으로 2009~2012년 기간에 대한 양육 수당 정책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 시나리오 I (연령 확대안): 소득기준과 수당액수는 2009년도 정부안으로 고정하고 연령을 매년 1세씩 확대함
  - 시나리오 II (연령, 급여수준 확대안): 소득기준을 2009년도 정부안으로 고정하고 연령과 급여 수준(10만원, 15만원, 20만원, 23만원)을 확대함
  - 시나리오 III (연령, 소득기준 확대안): 급여액을 2009년도 정부안인 월 10만원으로 고정하고 연령과 소득기준(소득하위 50%, 60%, 70%, 80%)을 확대함
  - 시나리오 IV (연령, 소득기준, 급여수준 확대안): 연령, 소득기준, 급여수준을 모두 확대함
- 각 시나리오별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시나리오 I 은 제한된 예산으로 정책 체감도가 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그러나 보육료 지원 대상과의 비형평성, 보육시설 서비스에 대한 가수요 발생, 낮은 급여수준 등의 단점이 있음
  - 시나리오 II는 정책 체감도가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여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요보호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효율성을 증대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 시나리오 Ⅲ은 양육수당 정책의 보편성을 지향함과 동시에 소득기준을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과 일치시켜 양 제도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 시나리오 Ⅳ는 양육수당의 보편적인 지원 형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급여액을 현실화하여 선진국형 양육지원 제도를 지향한다는데 특징이 있음
- 시나리오별 대상자 수와 예산 추계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상자 수는 시나리오 Ⅰ과 시나리오 Ⅱ에서 2012년까지 약 20만명 이하 수준으로 별다른 큰 증가를 보이지 않으나, 시나리오 Ⅲ과 시나리오 Ⅳ의 경우 2009년 약 50만명 수준이었던 대상자 수가 2012년에는 1백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확대됨
  - 예산 추계액의 경우 시나리오 Ⅰ에서는 2012년까지 약 2천 억원 수준까지 상승하며 시나리오 Ⅱ에서는 2012년까지 5천 억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시나리오 Ⅲ과 시나리오 Ⅳ의 경우 2009년에 예산이 약 3천 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시나리오 Ⅲ이 약 1조 2천억원, 시나리오 Ⅳ가 약 2조 9천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양육 수당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만0~만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자녀의 연령, 가정내 양육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여성은 거의 전무하였음
  - 조사 대상자의 절대 다수가 양육수당을 자녀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양육수당은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자녀 양육의 질 향상이하는 합목적적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보임
  - 적정 수준의 양육 수당 급여액수로 대부분이 월평균 자녀 1인당 지출하는 양육비로 응답하여 향후 양육수당 급여액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 기회가 제공되면 자녀를 보육시설 혹은 대리 양육자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취업 의향을 저하시키는데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과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겠다는 응답이 높아 보육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수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심층 면접 결과 자녀를 가정에서 키우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연령을 지적하였으며 대부분 현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음. 대부분의 응답자가 양육수당을 자녀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급여수준은 실제로 양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수준을 희망하고 있었음
- 양육 수당의 전달체계는 보육료 지원의 전달체계를 고려하여 양 제도의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양제도의 집행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을 검토한 후 보육료 지원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보육료 지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양육수당 전달체계를 제안함
- 양육수당을 바우처 혹은 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육수당지원의 정책목표, 기타 유사한 목적의 보육지원 혜택의 여부, 수혜 대상자 그룹의 특성, 가계 보육비지출의 특성, 바우처로 지급하였을 때 양육관련 소비가 증진되는지 여부, 바우처 시행시 추가적인 행정비용의 규모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양육수당 전달 체계를 설계하면서 고려해야 할 전산 인프라는 주민서비스 포털, e-보육행정시스템, 새울시스템과 그 내부의 복지행정시스템으로 각 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양육 수당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고안해야 할 것임
- 연구의 결론에서는 양육 수당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인 고려 사항을 지원대상의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양육수당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여성 취업과 관련한 문제, 기타 양육지원 정책과의 중복성 문제,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양육 수당의 정책 체감도 증대 측면에서 논의하였음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은 그동안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 혹은 장애아 등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져 왔을 뿐 보편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보육 지원 정책은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1월 19일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차등보육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시작되었다.

시설 이용 영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양육 지원 정책은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정에게 전담하고 있으며,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은 정부 지원으로 부터 사각지대에 속하게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보육시설의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기를 원하지 않고 영유아를 양육 담당자 스스로 키우기 원하는 부모에게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사이에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은 보육 시설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인 경우 불필요하게 보육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책의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영유아가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설의 양적 부족과 질적 수준의 미흡함에 의해 야기된 측면이 없지 않으며, 영아의 경우 혈연에 의한 양육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적인 습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

다. 취약지역의 경우 주변에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접근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접근성이나 시설의 양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는 없으나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질적 수준의 보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영아에 대해서는 영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시설 보다는 혈연과 부모가 더 적절한 양육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실정이다.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개인 양육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을 고려함에 있어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 보육 시설 인프라 실정과 영아를 가정 내에서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문화적인 환경을 감안하여 보육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 수당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육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정책은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있지만,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에 근본적인 제도 도입의 취지를 두어야 할 것이다.

양육 수당 정책은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보육 시설 서비스 지원 정책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외국의 아동 수당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과의 정책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양육 담당자의 욕구 충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라는 면에서 서구의 아동 수당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양육 수당 정책은 이제까지 정부의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이 시설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국가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보편적인 성격의 아동 수당 정책을 지향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수당 지원의 정책적 논리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유형별 정책 시나리오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며 이러한 양육수당 정책이 가져올 효과성을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양육 수당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전달체계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양육수당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기술하고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의 실태와 현황 및 이를 둘러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보육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장에서는 양육수당의 국내외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모색한다. 외국의 정책 사례로서 OECD 국가 중 보육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국가 현황을 검토하고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양육수당 정책 내용을 심도 깊게 파악한다. 이러한 외국의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서 양육수당 정책이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 중에서 어떠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가 파악한다. 국내 정책으로서는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이러한 국내 양육 지원 정책들이 양육수당과 중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한다.

3장에서는 양육수당 정책의 시나리오별 분석을 수행한다. 양육수당 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네 가지 유형의 양육수당 정책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와 예산액을 추계한 후 이를 기초로 각 시나리오별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양육수당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를 수행한다. 동 전화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0~만5세 양육모를 대상으로 2008년 12월 30일 ~ 2009년 1월 16일 약 3주 동안 실시하였다. 동 조사를 통해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한 양육 행태, 양육수당이 가져올 효과성, 양육모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파악한다. 양적

조사인 전화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보다 심도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동 심층 면접은 서울시, 전북 전주시,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18명의 양육모를 대상으로 2008년 10월 27일 ~ 11월 26일 약 한달간 실시하였다. 동 심층면접을 통해 보육시설 미이용의 이유, 양육 수당의 효과성, 희망하는 양육 수당 정책 유형 등을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양육수당의 효율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양육 수당 전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달체계의 일반적인 구성 원칙하에 양육수당 전달체계 구성안을 마련하였으며 현금지원과 바우처 형식간의 선택, 전산 인프라의 정비 등 양육 수당 전달 체계 구축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6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양육 수당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인 고려 사항을 지원대상의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양육수당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여성 취업과 관련한 문제, 기타 양육지원 정책과의 중복성 문제,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양육 수당의 정책 체감도 증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 제3절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의 실태 및 현황

본 절에서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보육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지원책 마련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시설을 이용 혹은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양육 담당자의 선택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 이면에는 양육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환경적인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보육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007년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비율은 만0~만1세가 각각 84.7%와 72.1%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어린 영아의 경우 대부분이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고 가정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2세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와 이용하지 않는 영아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만3~만5세 유아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강해져서 만5세 유아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는 전체에서 단지 14.5%만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비율은 감소한다고는 하지만 프랑스와 스웨덴 등 공보육 기능이 확립된 국가의 경우 영유아의 80% 이상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영유아의 보육시설 미이용 비율은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만0~만1세 영아의 경우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각 연령대에서 각각 약 7.8%와 17.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2~만4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율이 약 30%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표 1-1>). 이렇듯 전체 영유아 중에서 보육료를 지원 받는 영유아의 비율이 특히 만0~만1세 영아에서 낮은 이유는 상당수의 만0~만1세 영아가 설사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1-1> 영유아 연령별 육아지원시설 미이용현황 (2007년)

(단위: 명, %)

연령	보육시설이용 (A)	유치원이용 (B)	영유아인구 (C)	시설미이용 영유아수 (D=C-(A+B))	미이용비율 (D/C)
만0세	68,908		449,027	380,119	84.7
만1세	122,663		439,640	316,977	72.1
만2세	222,258		449,410	227,152	50.5
만3세	237,919	93,005	476,281	145,357	30.5
만4세	207,305	170,726	490,314	112,283	22.9
만5세	179,562	271,326	527,610	76,722	14.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통계연보 2007, 통계청(2008) 국가통계포털추계인구

&lt;표 1-2&gt; 보육료 지원 영유아 현황 (2007)

(단위: 명, %)

연령	영유아인구 (A)	시설이용 영유아수 (B)	지원영유아수 (C)	전체영유아대 비비중(C/A)	시설이용 영유아대비 비중(C/B)
만0세	449,027	68,908	34,985	7.79	50.77
만1세	439,640	122,663	78,245	17.80	63.79
만2세	449,410	222,258	141,917	31.58	63.85
만3세	476,281	330,924	154,957	32.53	46.83
만4세	490,314	378,031	139,376	28.43	36.87

자료: 통계청(2008) 국가통계포털추계인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육통계

우리나라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보육 서비스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보육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보육시설의 수와 질의 불충분성, 보육 서비스 비용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문제를 들 수 있다.

보육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공공보육시설의 경우 대기자 수가 넘쳐 나는 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양적으로는 충분하나 민간 보육시설을 찾는 수요자가 부족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625개 중 557개(89.1%)에 입소 대기자가 있고 전체 대기자수는 7만 3,015명으로 시설 한개소 당 평균 대기자 수는 1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자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할 때까지 소요되는 대기시간은 약 2년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 2,561개 중 대기자가 있는 보육시설은 285개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대기자 수와 대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지현 서울시의회 의원 자료)

이러한 보육시설의 양적인 부족은 특히 취약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확충된 공공보육시설은 취약지역 보다는 도시 지역에 주로 설치되

었으며,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영리성 추구를 위하여 취약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시설의 양적인 부족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심각하며 이러한 양적 부족의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서문희 외(2006)는 농어촌의 경우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있어 아직도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남 화순군과 경북 의성군에 보육시설이 없는 6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이 없는 면에 거주하는 영유아 중 일부는 거주지와 다른 면에 위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동 시간이 매우 길어서 영유아나 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고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용시 차 타는 시간은 편도 평균 33분이고 최대 90분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17%가 편도 1시간 이상 차를 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의 공급 문제는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하다. 특히 민간 보육 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은 공공 보육 시설 서비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민간 보육 서비스의 질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낮은 이유는 정부의 보육재정 지원 방법의 불공평성과 민간 보육 시설의 관리·감독의 미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은 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 투자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민간 보육 시설은 시설 설치를 개인이 부담하고 정부로부터는 저소득층 영유아 대상의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조금 정도 만을 지원 받아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 정부는 보육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수행함으로써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운영 수준을 점검하지 못했다. 상당수의 영유아가 민간 보육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미흡하였으며 시설장 및 보육교사 양성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해 국공립 보육 시설과의 서비스 수준 격차를 심화시켜 왔다고 지적되고 있다 (유희정 외 2006).

민간 보육 시설의 질적 저하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육 시설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면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간의 보육 시설 증가는 주로 민간시설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보육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11.3% (1,029개소)였으나 2000년 6.7% (1,295개소), 2002년 6%(1,330개소), 2003년 5.5%(1,329개소), 2006년 5.6% (1,643개소)로 절대적인 개소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총 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유희정 외, 2007).

보육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보육 서비스 가격의 문제이며 이는 보육 서비스 수요자에게 보육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할지라도 이러한 보육시설 이용 비용은 여전히 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대상이라 할지라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계층은 법정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지원 대상자는 보육료의 일부만을 지원 받고 있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은 여전히 보육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남 화순군과 경북 의성군에 보육시설이 없는 6개 면지역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지역 영유아의 65~70%가 보육료 전액 지원 영유아이고 18% 정도만이 보육료·교육비 혜택이 없는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약 40%, 영아의 약 55%의 보호자가 보육·교육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한 영유아 중 29%가 보육료 비용이 비싸서 보육시설 이용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희 외 2006).

다음은 보육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살펴 보도록 한다. 영아의 경우 특히 보육 시설 이용률이 낮으며 개인양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장 여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영유아의 연령이 유아로 높아질 경우, 시설 이용률이 증가하며 만5세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의 유아가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아의 경우, 본인 외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혈연 혹은 비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지원 이용률이 24.5%인데 반해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시설이용률은 14.6%

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취업모인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아 취업모의 경우 71.5%가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28.5%에 불과하다(서문희 외, 2004).

영아가 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가 종일 보살피기 힘들(31.7%)과 모취업으로 인한 대리 양육 (30.5%)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었다(서문희 외 2007). 이러한 사실은 영아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돌 볼 수 없으며 주변에 영아 자녀를 맡아 줄 혈연 혹은 비혈연에 의한 개인 양육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기관 양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자녀가 유아로 성장함에 따라 낮아지고, 시설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유아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84%이며, 이러한 경향은 취업모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서 취업모 유아 자녀의 경우 90.6%가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 역시 조사 대상 직장여성의 70.9%가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서비스 이용률은 15.3%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2005)

이렇게 영아의 시설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부모가 시설 서비스를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적정한 양육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 외에도 접근성의 문제, 시설 서비스의 질 문제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모 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로 만0세의 경우 취업모의 72.4%, 미취업모의 67.1%가 조부모라고 응답하였으며, 만1세의 경우도 역시 취업모의 69.9%, 미취업모의 64.2%가 조부모를 부모 이외의 바람직한 양육자라고 응답하여 혈연에 의한 양육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4). 서문희 외(2007) 연구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자녀 대리 양육방법으로 조부모를 지정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만0세 아의 경우 70.0%, 만1세아의 경우 61.7%가 조부모를 가장 바람직한 대리 양육 방법으로 지적하였다.

이완정(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자녀 연령별로 개인 양육자와 기관 양육자 중 어떠한 유형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만 2세까지의 영유아는 기관 양육자보다 개인 양육자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3세 유아는 기관 양육자와 개인 양육자를 선호하는 정도가 반반씩이었으며, 만 4,5세 유아는 기관 양육자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월소득 130만원 이하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보육료가 부담스럽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영유아에게 개인 양육자 보다 기관 양육자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130만원 이하 집단은 보육료 지원 대상인 경우가 많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양육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친인적으로부터 양육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79.3%)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보육시설 비용 부담 (20.7%)을 응답한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자녀가 시설을 다니지 않는 가장 이유로는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개인 양육서비스가 영아 양육에 적절하다는 응답 이외에, 보육기관의 접근성과 서비스 질의 불충분도 지적되었다. 서문희 외 (2007)에 따르면 영아 자녀를 기관에 맡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이 멀기 때문 (42.4%), 기관을 믿고 맡길 수 없음 (26.0%)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음 (20.3%)으로 지적되었다. 유아의 경우,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교육 과정이 마음에 안들어서”와 “비용 부담”을 들고 있으며, 영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어려서”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비용 부담” 및 “교육과정이 마음에 안들어서”가 가장 많은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희 외, 2004).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녀가 보육 시설을 다니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모가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 및 혈연 및 비혈연 등 개인이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육 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서문희 외(2007)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에게 가정 내 양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2005) 조사 결과 역시 부모나 가사 대리인에게 자녀를 맡겨도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33.6%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장 양육 수당의 국내외 정책 사례

### 제1절 외국의 정책 사례

2002년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의 형식으로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공화국, 호주 등 11개 국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CESifo, 2002). 이들 국가들은 가족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양육수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의 복지 정책 시스템하에서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된 다양한 유형의 양육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3세 이하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바,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녀가 만3세 이후로 성장한 후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양육 수당은 많은 경우 근로 조건과 연계되어 지급되는데,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경우, 최근에 근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자녀에 한해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룩셈부르크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보호자가 근로하지 않는 조건에 한해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은 주당 30시간, 헝가리는 1일 4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여러 국가 중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육 수당 정책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육수당 정책은 양 국가에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과 함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보편적인 형태로 아동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 양육 수당 제도가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아동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아동 수당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의 하나의 정책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수당 정책의 유형을 고찰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보편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란드, 영국,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표 2-1> 각국의 양육 수당 내용

	가정에서의 부모육아 급여(가정육아와 양육수당)	자산조사
오스트리아	아동급여는 산후부모휴가와 연계, 자격조건은 기존 고용기록. 한 부모에 대해 18개월간 지급가능, 다른 부모에게 6개월 더 가능, 다른 부모의 소득과 고용상태와는 무관. 파트타임과는 연관	양육수당의 경우 조사
체코	만4세까지의 한 아동에 대해 전일육아에 대해 부모수당. 지급율은 개인사회보조율 + 10%, 저소득층 부모는 특정조건에 대해 자격이 있음(예 월 최대 5일 육아)	근로부모에 대해 조사(최대 개인사회보조액의 1.5배)
핀란드	가정양육수당과 보충(자산조사와 한명의 아동에게만 지급가능)은 만3세 이하 아동을 육아하는 부모에게 지급, 만6세 이하 아동 수에 따라 증액, 헬싱키 지역 부모는 추가적인 보충급여 자격(자산조사 無)	공공탁아시설비용은 가족 수에 기초한 소득의 초과분의 1%, 동일 소득 한도가 가정육아와 민간탁아시설의 보충에도 적용되지만, 수당에는 적용되지 않음
프랑스	2명이상 아동(1명은 만3세 이하)을 가진 가족에 대한 부모교육급여(APE)는 최근 5년간 적어도 2년 이상 지속된 고용에 대한 부모휴가에 대해 지급	아동의 수와 연령에 기초한 상한 있음
독일	만2세 이하 자녀를 적어도 1명이상 개인적으로 육아하는 부모에게 연방 양육수당 지급, 고용보호조치는 3년까지 지속되는 휴가를 보장.	양육수당은 급여수준에 대해 자산조사, 해당 부모는 주당 30시간까지 근로 가능
헝가리	양육수당(만3세 이하 아동의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나 조부모), 아동육아보충(막내가 만3-만8세인 3자녀 육아 부모), 양쪽 모두 최소노령연금액과 동일, 2년 한도의 아동육아 급여(다음번 임신과 출산)는 기존 소득 한도의 70% 지급	아동육아 수당과 아동육아 보충은 1일 4시간 근로를 개입치 않으며(그러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는 과세대상), 아동육아 급여는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정지
아일랜드	신보호자수당은 한 부모가 자녀를 집에서 육아하기 위해 머무는 가족에 대해 제공되는 세금공제	근로 배우자의 소득에 기초, 한도이상의 경우 급여는 감소
룩셈부르크	부모는 반드시 근로를 해서는 안되고, 만2세 이하의 아동을 집에서 양육해야함	만일 가족소득이 한도 이하(자녀수에 근거)인 경우 아동육아급여에 대해 無월급 조건(부모 한쪽이 반일제이면 급여는 50%)과 無고용조건
폴란드	적어도 1명의 자녀의 육아 담당 부모대상, 만3세 이상 아동은 불가, 양쪽 부모에게는 24개월, 편부모나 쌍둥이는 36개월 가능, 고용에서 아동육아휴가 요구 가능	고정된 한도
슬로바키아 공화국	만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부모 육아	소득발생시 급여 정지
호주	만16세 이하 자녀를 전담 육아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소득보조, 다른 지원금과 중복 불가, 수령자는 급여 기간 동안 근로 가능(자산조사 결과)	승인된 육아와 부모지급에 대한 비용에 대해 가족 자산조사(등록된 육아 비용에 대해서는 無자산조사)

자료: CESifo, Childcare Benefit Schemes 2002

## 1. 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 양육 수당

### 1)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998년부터 정부가 보조하는 보육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만1~만2세 영아의 부모에게 아동급여를 처음으로 제공한 나라이다. 급여는 매월 면세된 형태로 아동에 대해 제공되는데 그 액수는 대략 보육센터를 한 달간 이용하는 금액이다. 아동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공공보육센터에 최대 주 32시간 이하로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지 않아야 한다. 파트타임으로 보육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도 소량의 급여를 받는다.

노르웨이는 아동가족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의 가족보육서비스 및 양성평등국(Department of Family, Daycare services and Gender Equality)에서 가족정책, 가족법, 양성평등, 보육시설을 담당한다. 유관기관으로 양성평등 옴브즈만, 양성평등센터, 국가보험행정국(National Insurance Administration)이 있다. 아동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업무, 남성과 여성을 위한 참된 평등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 아동청소년정책국(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Policy)는 일반적인 아동및청소년 정책, 아동및청소년 복지, 입양업무를 담당한다. 산하기관으로 아동위원(Cmmissioner for Children), 청소년및입양 사무국이 있다.

아동가족부의 예산 대부분이 아동수당(child benefit), 부모수당, 영아(small children)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현금수당(cash benefits)등 자녀를 가진 가족을 위한 수당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예산은 보육 시설과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해 사용된다. 노르웨이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아동수당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아동수당(Barnetrygd)

18세 이하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은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동수당은 면세이다. 18세 이하 아동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 아동수보다 1명 더

많은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만3세 이하 아동을 보호하는 단독 책임자는 부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양육수당(Kontantstøtte)

공공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1-만3세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sup>1)</sup>.

영아가 있는 부모에게 현금 수당지급(Cash Benefit for Parent with Small Children)은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대하여 보육시설에 보낼지 직접 돌볼지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금수당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단지 시간제로 등록한 만1-만3세의 유아에게 해당한다. 2004년 8월 현금수당은 매달 457유로를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되었다. 만약 정식으로 아이가 국가 운영 보육시설에 시간제로 등록되었다면 현금수당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주당 33시간이상 보육시설에 등록한 아이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만1-만3세 영유아의 부모에 대한 월 현금급여가 지급된다. 조건은 영유아와 수급자가 노르웨이 거주자이고, 주정부 지원의 탁아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급여 수준은 5가지가 있으며, 위의 탁아시설의 주당 이용시간과 영유아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편부모의 경우 근무시간이나 훈련과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아동육아급여가 지급된다. 1인 아동에 대해 최대 NOK 2,496(€ 300), 2인 아동은 NOK 3,256(€ 392), 3인 아동 이상은 NOK 3,690(€ 444)이 지급된다. 만1-만3세 아동을 둔 부모에 대해 지급되는 현금급여에 추가되어 지급된다.

## ③ 가족 수당(Family Allowance)

가족수당과 관련된 법은 1946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가족수당은 자녀양육 비

---

1) [www.nav.no](http://www.nav.no).

용을 지원해주고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공평한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오늘날 가족수당은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험지원을 의미한다.

정부지원 가족수당은 국가보험행정국과 지역사회보험국에서 운영한다. 가족수당계획하에, 노르웨이에 살면서 18세미만의 아이를 부양하는 사람들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매달 121유로(2004년기준)가 지급된다.

부모수당 및 입양에 따른 혜택(Parental and Adoption Benefits)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는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직장가정을 병행하는 가족을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모휴가는 부모가 아이 출생 후 1년간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52주를 받을 수 있다. 15세미만의 아이를 입양하는 가족은 아이가 출생할 때 제공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부모수당으로 52주동안 임금의 80%를 받거나 42주동안 100%를 받는다. 입양수당은 49주간 임금의 80% 또는 39주동안 임금의 100%를 받는다. 부모는 유급 휴가기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출산 전 부모휴가를 3주 받아야만 한다. 부성 할당제(paternality quota)에 따라 출산 후 첫 6주는 어머니가 받고 전체 부모휴가기간 중 4주는 아버지가 받아야한다. 부모휴가기간이 남을 경우 부모들은 남은 휴가기간 동안 부모 어느 한쪽이 받을지 또는 부모가 번갈아 받을지를 결정한다. 4주간의 부성할당제(paternality quota)는 아버지와 아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1993년도에 시작되었다. 부성휴가를 위한 4주는 어머니가 대신 받을 수 없고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 부모수당과 입양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은 여성들은 일시불로 4,198유로(2004년 기준)를 받는다. 따라서 모든 여성은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국가보험수당을 받게 된다.

## 2) 핀란드

핀란드의 가족업무는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의 가족사회국(Department for Family and Social Affairs)에서 담당하며, 여성(Gender Equality)업무는 재정기획국(Finance and Planning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핀란드 가족정책의 목적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기를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가 다양한 재정적 지원, 보육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자녀를 가진 가족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고 있다. 최근 자녀를 가진 가족들이 감소하고 있고 동시에 가족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동거가족, 한 부모 가족등, 다양한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능한 한 조기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양하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핀란드는 1948년에 가족정책지원시스템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동수당은 가족의 수입에 큰 보탬이 되었고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에 아동수당은 가족정책의 유일한 혜택이 되었고 이 경제적 지원이 GDP의 약 4%를 차지했다. 그 후 아동수당 지급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1990년대에는 그 실제 가치가 1970년대 초에 지급했던 아동수당의 3배나 되었다. 가족 지원 예산은 아동수당 33.1%, 보육지원 32.8%, 부모수당 10.8%, 아동가정양육수당 8.1%, 사설 보육시설아동지원수당0.2%, 주택수당 5.0%, 생활보조수당1.9%, 기타 8.1%로 배분된다.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출산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된다. 모든 수당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지급되며 휴가기간은 주말을 산입하지 않는다. 핀란드의 사회보장기관의 지역 사무국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부모가 26,720유로까지 소득이 있다면 수입의 70%까지 받는다. 연간 소득이 1,026유로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 최소 수당으로 1,145유로(2004년기준)이 지급된다.

아동가정양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은 지자체 운영 탁아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지급된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급된다. 2007년 4월 1일부터는 만3세 이상의 입양아동을 둔 부모에게 입양부모 급여를 받기 시작한 후 부터 2년이 지날 때 까지 혹은 입양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때 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가정양육수당은 학교 입학전 1년간 반일차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나 입학정규 나이에 앞서 1년간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동가정양육수당은 부모수당에 이어 지급된다. 가장 어린 자녀가 만3세에 이르거나 지자체 탁아시설에 다니게 되거나 가족이 민간탁아수당을 선택하게 될 때까지 지급된다. 아동은 부모 중 한명이나 다른 친척, 혹은 민간 탁아시설제공자에 의해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핀란드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 보장이 계속될 수 있는 EU/EEA에 속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아동가정양육수당은 자격이 되는 아동 전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보충적으로 오직 한명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도 있다.

수당의 지급을 위해서 보충급여의 자격요건과 그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족의 소득이 중요하다. 가구 월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보충급여는 다양하다. 가족의 수는 부모와 부모수당을 더 이상 받지 않으면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최대 2명까지의 아동이 포함된다. 보충급여는 가족 수에 의거하여 기본소득에 미달하면, 전액 받게 된다.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보충급여 전액에서 감하게 된다.

만약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난다면, 기본수당과 보충급여는 부모수당 기간동안에는 지급이 가능하며 부모수당보다 많게 된다. 부모수당은 보충급여의 양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간주된다. 아동가정양육수당은 우선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불된다. 매월 마지막 은행영업일에 지급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다. 수당은 1개월보다 적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가정양육수당은 부모수당이나 기타 연장된 부모휴가의 마지막날 다음의 첫 번째 월요일에 시작된다. 막내자녀의 나이가 만3세에 도달하거나 지자체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거나, 가족이 민간탁아수당을 선택하게 되면 수당지급은 정지된다.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에 대해 지급되는 부분은 학교 입학한 해의 7월 말에 지급이 정지된다. 연장된 의무교육체계 속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 아동이 만7세에 도달하는

해의 7월 말에 지급이 끝나게 된다. 몇몇 지자체는 특수 지자체 보충급여를 지급한다. 보충급여의 지급여부와 지원금의 출처를 지자체 스스로 할지 Kela<sup>2)</sup>를 통해서 할지는 지자체가 결정한다.

아동가정양육수당은 급여가 같은 가족구성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직업교대보상 뿐만 아니라 소득비례 실업급여 혹은 기본 실업수당, 노동시장 보조금, 혹은 훈련수당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부모 중 한명이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실업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동가정양육수당은 배우자가 받는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만약 부모 모두가 실업 관련 급여를 받는다면, 아동가정양육수당은 그 수당을 받는 부모 1명의 급여에서만 공제된다. 학생재정지원을 받는 부모는 아동가정양육수당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학생재정지원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소득의 외부 출처로 간주된다.

아동가정양육수당은 과세대상이다. Kela는 수급자의 개인의 징수율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개정된 세금카드를 획득하지 않은 한, 수급자의 근로 세금카드 기초 하에 결정된다. 만약 수당이 근로 세금카드에 의해 과세된다면, 근로 소득 관련 공제가 아동가정양육수당을 적용하지 않게 때문에 원천징수율은 2%p 씩 증가한다. 만약 부모급여와 같은 기타 급여와 동시에 아동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과세 목적으로 근로 세금카드를 이용한다면, 아동가정양육수당은 2차 직업 활동에 대한 비율 적용에 따라 과세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금당국으로부터 개정된 세금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Kela는 세금 원천징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개정된 세금카드를 세금당국으로 직접 발급된다. Kela에게 세금카드를 개인적으로 제공해야 할 유일한 때는 사업소득 카드나 소득 척도에 따른 세금카드를 사용할 때이다.

핀란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가족수당제도의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Kela(Finnish Social Insurance, Kansaneläkelaitos)는 핀란드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의미한다. 1937년 퇴직 연금을 목적으로 기금이 설립되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아동급여, 실업급여, 병가급여와 건강보험에 이르기까지 역할이 확대되었다. Kela는 보험료가 아닌 세금을 통해 기금이 적립되며, 적용 대상은 영구적인 핀란드 거주자 전부가 된다. Kansaneläkelaitos는 국민연금제도를 의미한다.



## ① 부모휴가(Parental Leave)

출산휴가가 끝난 후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사람이 부모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부모휴가 기간은 158일이다.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한 자녀 당 주말을 제외한 60일이 더 늘어나며 조산인 경우는 부모휴가 기간이 208일이 된다. 부모휴가 후 가족은 자녀가 취학할 연령인 만7세가 될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 종류의 육아 지원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무급육아휴가를 받아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것
- 사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
- 지자체 운영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

## ② 무급육아휴가와 아동가정육아 수당(Care leave and child home care allowance)

아이가 만 세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나 아버지 한사람이 무급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고 수당은 부모휴가수당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급된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만 세살 미만의 가정에 대해 시당국에서 아동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사설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낼 때는 사설아동보육수당(Private child-care allowance)이 지급된다.

아동가정양육수당은 만 3세 이하 아동을 집에서 돌보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탁아시설 대신 다른 곳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수당은 기본적으로 FIM 1,500(€ 252)을 지급하고,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 3세 이하이면 FIM 500(€ 84), 만3- 만6세이면 FIM 300(€ 50)이 추가되며, 자산조사 결과 월 최대 FIM 1,000(€ 168)이 보충 지급된다.

민간탁아수당은 가족이 개인적으로 아동의 육아를 조정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수당은 육아를 담당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기본적으로 아동 1명당 월 FIM 700(€ 118)이고, 자산조사 결과 아동 1명당 월 최대 FIM 800(€ 135)이 추가 지급된다.

부분양육수당은 만3세 이하의 아동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최대 주당 30시간으로 단축한 부모에게 월 FIM 375(€ 63)이 지급된다.

③ 출산휴가(Maternity Leave)

출산휴가기간은 주말을 제외한 105일이다. 어머니들은 출산전 30~50일, 출산후 55~75일을 출산휴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출산휴가(Special Maternity Leave)는 임신부가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등 태아에게 해로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의사의 지시 하에 임신 기간을 쉴 수 있다.

④ 부성휴가(Paternity Leave)

아버지는 18일간을 부성휴가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출산휴가를 받는 동안 아이의 출생을 같이 지켜보거나 아이를 돌 볼 수 있다. 부성휴가는 출산휴가 또는 부모휴가 기간 동안(어머니가 부모휴가를 받았다면) 받을 수 있다.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받을 경우 부성휴가는 12일 받을 수 있다.

⑤ 입양아부모휴가(Adoptive Parental Leave)

입양아부모휴가는 입양아의 나이에 따라 다른 기간이 적용된다. 신생아를 입양했을 경우 234일, 만7세미만일 경우 부모는 180일의 육아휴직이 주어진다.

⑥ 모자복지 클리닉(Maternity and Child Welfare Clinics)

모자복지 클리닉은 어머니와 태아, 영유아, 가족전체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무료로 보건센터에서 제공한다. 임신부 클리닉은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임신부건강진단서를 발급한다. 임신 4개월 말이 되기 전에 임신부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야하며 임신기간동안 임신부는 12-15회 검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보건 센터는 임신부에게 보통 임신 후 12주와 16주 사이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다. 자녀의 출생 후 지역 임신부 클리닉에서 공공보건 간호사가 출생아의 집을 방문한다. 즉, 아이와 가족은 아동복지 클리닉의 고객이 되는 것이다. 아기는 출생한지 만 1년이 되기 전에 클리닉에서 8번의 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 만1세부터 만2세까지는 매년 4번의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만2세 이상은 1년에 한번 검사를 받는다. 아동복지클리닉에서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아동의 예방접

종을 시행한다. 또한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발달상황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가족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한다.

#### ⑦ 아동지도 및 가족상담(Child Guidance and Family Counselling)

아동지도 및 가족상담은 가족문제와 자녀를 키우는 것,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자라도록 하는데 사회적, 정신적, 의학적 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아동지도와 가족상담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127개의 아동지도 및 가족상담소에서 약 31,000가족이 이 서비스를 받았다. 지도 및 상담서비스를 받는 주요 원인은 아동과 관련된 문제가 전체 사례중 59%, 가족문제 15%, 부모간의 관계 문제 11%, 가족간의 말다툼 중재 5%등 이었다.

#### ⑧ 주택 지원 (Housing Support)

주택지원의 목적은 가족에게 알맞은 크기와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얻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녀를 가진 가족을 위한 주택지원의 종류에는 주택수당, 정부대출금, 세금감면 주택융자금이 있다. 주택수당은 가족의 규모, 수입, 주택비용, 주택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저소득 가족에게 적당한 주택 가격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2. 보편적 아동수당

### 1) 프랑스

프랑스의 아동양육 수당 정책은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Family Allowance)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위한 복지 정책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일종의 고용 관련 제도로서 고용주가 재원을 부담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가 고용자 봉급의 5.4%를 부담하며, 정부는 전체 수입의 1.1%를 부담하며, 상속세 수입의 1%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족수당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18세 이하 2명 이상의 부양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면 가족 상황과 수입액에 따르는 제한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는 영유아수당(임신 5개월 이상의 임산부 혹은 만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육아휴직 수당과 중복수혜 불가), 자녀입양수당(소득 수준에 따라 입양 시부터 21개월까지 지급), 자녀간병수당(근무를 단축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경우), 학령기 자녀교육수당(6~18세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장애아동수당(20세 이하의 장애자녀를 둔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편부모수당(빈곤층 대상) 등이 있다.

자녀교육수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취업활동을 중지하거나 정규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경우에 가계 수입의 상실이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다. 1994년 이전에는 셋째아이에게만 해당되었으나 현재 모든 자녀로 확대되었으며,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2년 이상 일을 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시간제 근무일 경우에는 일부만 보조되며, 단 부모가 모두 시간제로 일할 경우 일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990프랑을 넘을 수 없다.

이 밖에 영유아수당은 자녀가 태어나서 만3세가 될 때까지 지원되는데, 자녀 1명당 매달 약 160유로(2003년 기준)가 지급된다. 또한 출산격려금으로 자녀 1명당 800유로를 지급하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를 사회보장기금에서 지원하고,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아동은 만2세나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 전일제 보육센터에 맡겨진다. 대부분 공립이며 유치원은 무상교육이므로 거의 모든 만3~만6세 아동이 공보육과 공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은 만0~만2세가 23%, 만3~만6세가 99%에 이른다. 대개의 경우 저소득층은 무료이고 중산층 이상은 최대 수입의 10~15%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정부는 부모가 집에 있는 경우라도 아동이 취학 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시설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 외 만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보모 고용 및 타 교육시설 이용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3세 이하 아동의 13%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① 아동가정양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 allocation de garde d'enfant a domicile, AGED)

아동가정양육수당은 만3세 이하 아동에 대해 지급된다. 가족소득이 1년 기준으로 純 FRF 220,784(€ 33,658)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대 수당액은 분기당 FRF 9,840 (€ 1,500)이다. 고소득에 대한 최대 수당액은 FRF 6,561(€ 1,000)이다. 만3세-만6세 사이의 아동에 대해서는 분기당 FRF 3,279(€ 500)이 지급된다.

② 민간 탁아수당(Private child care allowance; aide a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eee, AFEAMA)

민간 탁아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승인된 엄마 보조(maternal assistant) 고용의 경우에, 지급되는 모든 사회 비용은 총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공된다. 민간탁아수당 보충으로 총액은 아동의 연령, 가족의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 만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최대 FRF 1,290(€ 197), 최소 FRF 845(€ 129)이며, 만3세이상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최대 FRF 645(€ 98), 최소 FRF 423(€ 64)이 지급된다.

③ 부모존재수당(Allowance for parent presence; Allocation de presence parentale, APP)

부모존재수당은 아동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인 경우에 허용된다. 수당 액은 나머지 직업 활동에 의존하고, 부모 혼자 아이를 돌볼 경우에 보충 액이 있다.

## 2) 덴마크

덴마크는 만0~만17세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가족수당(Family Benefits)을 지급하고 있다. 만2세까지는 자녀 1인당 연간 1만 2,500DKK(덴마크 크로네)를, 만3세부터 만6세까지는 1만 1,300DKK를, 만7세부터 만17세까지는 8,900DKK

를 지원한다.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만0~만17세 자녀 1인당 3,916DKK 외에 추가적으로 자녀 수와 상관없이 3,980DKK를 지급하며, 이혼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다시 9,984DKK를 추가로 지원한다.

### 3) 스웨덴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업무는 산업고용통신부(Ministry of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에서 담당한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아동과 가족수당,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양질의 보육을 포함한다.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사이에 생활상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가족수당을 수행하고 분배하는 업무는 국가사회보장위원회(National Board of Social Security)에서 담당한다.

#### ① 아동수당(Child Allowance)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된다. 기본적인 아동수당(Basic child allowance)은 만 16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달 138천원(SEK950)이 지급되고 세 자녀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추가아동수당(Additional child allowance)이 지급된다. 셋째아이에게는 매달 37천원(SEK254)이 지급되고 넷째아이에게는 110천원(SEK760), 다섯째아이부터는 138천원(SEK950)이 지급된다.

#### ② 생활보조비 지급(Maintenance Support)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를 위한 생활보조비가 지역사회보장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매달 170천원(SEK1,173) 지급된다. 부모는 아이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국가에 되갚아야하며 그 금액은 부모의 수입과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 ③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부모보험은 임신수당, 부모수당, 임시부모수당의 세 종류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임신수당은 임산부가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며 최대 50일간 수입의 80%를 받는다. 부모휴가수당은 480일간 지급되며 390일간은 부모수입의 80%가 지급되고 나머지 90일간 매일 9천원(SEK60)씩 지급된다. 저소득 부모나 수입이 없는 부모는 최소한 매일 22천원(SEK150)을 받는다. 480일간의 수당지급기간은 부모가 공평하게 나뉘어서 받는다. 240일은 아버지가 받고 나머지 240일은 어머니가 받지만 휴가를 받은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240일중 180일까지 아버지(또는 어머니)에게 받도록 할 수도 있다.

1974년 이 제도가 시작된 이래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1974년 3%에서 2001년에는 13.8%로 증가하였다. 국가사회보장위원회는 부모휴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아버지와 아이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홍보물을 배포한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갖기 전에 부모보험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임에 참석하도록 요청받는다.

임시부모휴가는 질병이 있는 만12세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받는다. 매년 120일간 수입의 80%가 수당으로 지급된다. 2001년도에는 아버지들이 임시부모수당 수혜자의 41%를 차지했다.

### ④ 아버지 휴가(Dad's days)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는 10일간의 임시부모휴가(temporary parental benefit "Dad's days")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새로 출생한 아이를 돌보거나 다른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할 수 있다. 1974년 부모휴가가 시작된 이래 아버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이가 출생한 후 휴가를 받는 아버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⑤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주택수당 지급

주택수당은 지급전에 자산조사를 실시하며 주택가격과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액

이 달라진다. 한자녀는 89천원(SEK600) 두자녀는 133천원(SEK900) 세자녀 이상은 178천원(SEK1,200)가 매달 지급된다. 자녀가 있는 스웨덴 가정의 30%정도가 주택수당을 받는다.

#### 4) 스위스

스위스는 내무부(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연방사회보험국(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내의 가족센터(Centre for Family Affairs)에서 가족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업무는 내무부의 남녀평등연방사무국(Federal Office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족센터의 직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이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연방법에 따라 농업분야(agricultural sector)에 있는 가족수당시스템의 수행을 관리하나 그 외 다른 모든 가족수당은 주(州)당국의 책임하에 있다. 가족센터는 연방정부내의 가족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며 가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방정부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스위스 전역에 가족 및 아동정책과 연관된 기관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한다. 가족센터내에 연방가족조정위원회(Federal Coordinating Committee)를 운영한다. 센터는 아동보호와 관련한 예방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가족센터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포럼(the Forum Children and Families)에 참석하고 유럽위원회의 가족장관회의업무를 담당한다.

스위스의 가족정책은 가족을 장려하고 지원하기위해 만들어진 기관들과 모든 정책들을 포함한다. 오늘날 가족정책은 핵가족, 이혼가족, 한 부모가족, 입양가족, 동기간(adult sibilings)으로 구성된 가족, 노인을 모시는 가족 등 우리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가족형태를 포괄한다.

스위스 가족정책은 연방주의(federalism)와 보완주의(subsidiarity)의 원칙에 따른다. 이 원칙들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정책 업무는 시당국(municipalities)과 민간조직(private



organisations)에 의해 운영되고 다음 단계로 주(州)정부(cantons), 최종적으로 연방정부(federal authorities) 순으로 운영된다. 가족정책의 일부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헌법 116조에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인 지침과 별도로 헌법 116조는 가족수당, 산모 수당 등의 가족지원금에 관한 연방법의 권한을 정의한다. 헌법에 명시된 연방정부의 산모 수당계획은 아직 법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 ① 가족 수당(Family Allowance)

가족수당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지급한다. 이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연방법은 없지만 수당의 수준과 형태에 대한 다양한 법규들이 있다. 이 법규들 간에 주(州)마다 약간의 격차가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본질적으로 부모가 수당을 요청할 수는 없다. 수당을 받는 자격은 부모의 직업에 달려있다. 고용인들은 모두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일을 그만두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네바 등 10개주(cantons)에서는 자영업자들도 특별한 상황 하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농부, 농업분야 고용인, 연방정부 고용인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유급 고용인, 주정부와 시정부 고용인, 농업분야이외의 분야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수당을 지원한다.

#### ② 출산 보험(Maternity Insurance)

출산보험은 다양한 법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법은 임신부, 분만중인 여성,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보호하는 규정들을 포함한다. 출산 후 8주 동안 산모가 일하는 것을 법률상으로 금하고 있다. 스위스 계약법에는 고용주는 여성이 고용 후 1년이 되면 출산휴가동안 3주간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고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 월급을 지급받는 출산휴가기간이 길어진다. 근무경력이 충분히 오래지 않다면 출산휴가 전체기간동안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

## 5) 아이슬란드

지방정부는 편부모의 아동에 대해 탁아시설 비용을 보조한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편부모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며, 민간 탁아시설에 대한 지불은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는 유아원에 지불되는 것과 동일한 금액이다. 이러한 보조는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 6) 영국

근로가구 세금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의 일부로서 보육을 보조한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그들의 임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WFTC의 자격요건:

- 최소한 주당 16시간 이상 정상 근로;
-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적어도 1명;
- 장애 세금 공제(Disabled Person's Tax Credit) 미청구;
- GBP 91.45(€ 145) 미만의 소득;
- GBP 8,000(€ 12,668) 미만의 저축과 자산;
- 영국 거주자;
- 이민단속 대상이 아닌 자

## 7) 일본

일본은 소득조사에 기초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연간 소득 860만 엔 미만 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다. 유럽 국가와 비교해 일본의 아동수당은 매우 제한적이다. 유럽 국가는 보통 만0~만19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일본은 만0~만12세 아동만 적용대상에 포함된다.<sup>3)</sup> 지급되는 금액도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 선진국 중 가장 적다. 첫째와 셋째 자녀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은 일본이 제조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각각 1.0%와 2.0%이다. 2006년 4월부터 일본정부는 연간 860만 엔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0~만12세) 월 5,000엔, 셋째부터는 월 1만 엔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산모나 배우자가 가입한 건강보험조합 등 공적 의료보험에서 ‘출산·육아 일시금’으로 30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시금을 2006년 10월부터 35만 엔으로 인상되었다. 2006년 4월부터 도쿄 지요타(千代田)구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임신 5개월의 태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연간 860만 엔 소득제한도 없애고, 태아에 대한 아동수당으로 임신중인 여성 1명당 월 5천엔을 지급한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아 이까지는 월 5,000엔, 셋째부터는 월 1만 엔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요타구의 2004년 출산율은 0.82명이었다.

### 3. 양육수당 정책의 효과성 분석

OECD(2007b)<sup>4)</sup>에 따르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육아를 위한 노동시장 이탈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래 경력을 훼손하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육아를 전담하는 부모에게 제공된다. 따라서 육아를 전담하는 부모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게 된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아동가정양육수당은 탁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한 개념이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2002년까지)의 경우는 과거의 고용이 수당제공의 조건이다. 수당은 일반적으로 균일한 액수가 지급된다. 근로 대신에 집에서 육아를 담당함으로써 잃게 되는 소득에 대한 대체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아진다. 소득이 일정 한도 이상인 가구에 대해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 중요한 것은 장기간 근로에서 이탈

3) 1999년까지는 만0~만3세, 이후 2003년까지는 만0~만6세, 2004년에는 만0~만9세, 2006년 4월부터 만0~만12세 아동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4) OECD, "Can Parents Afford to Work? Childcare Costs, Tax-Benefit Policies and Work Incentives", *Benefits and Wages: OECD Indicators*, 2007.

했을 때 여성의 장래 직업경력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이다.

Jaumotte(2003a)에 의하면, 육아지원금과 유급 부모휴가는 파트타임보다 풀타임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여성의 고용참가율은 증가하고, 적어도 몇 개국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여성의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다. 실증연구 결과, 육아지원금은 확실히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여성 고용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동수당(child benefits)이 육아지원금(childcare subsidies)보다는 덜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성휴가, 부모휴가, 육아휴가는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 여성 고용율을 촉진한다. 일자리 보호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연속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유급 부모휴가가 OECD 9개국의 고용율을 증가시켰다는 실증 분석 결과도 있다(Ruhm, 1998). Jaumotte(2003a)은 다변량 계량분석(Multivariate Econometric analysis)을 통해 파트타임 비율, 육아, 유급휴가가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높이는 반면, 가구의 두 번째 소득자(APW의 67% 소득 수준에서 측정된)와 단독 개인 간 조세격차(tax wedge)는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낮춘다고 분석하였다. Chevalier & Viitanen(2002)의 영국 사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육아 보조가 여성의 고용참여율에 영향을 주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Gelbach(2002) 또한, 미국의 결과에서 육아 보조로부터 여성 고용참여율에 대한 강한 인과관계를 보였다.

Gauthier and Hatzius (1997)는 가족현금급여와 모성급여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들은 가족수당 형태의 가족현금 급여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반면, 모성급여는 출산율에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Jaumotte(2003b)에 의하면, 두 번째 소득자에 대한 중립적인 조세부과, 배우자간 근로 분담에 대한 세금 동기부여, 아동육아 지원금과 유급 모성 및 부모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아동육아 지원금과 달리 아동 급여는 소득효과에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아동육아 지원금은 육아부담을 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아동 급여는 아동급여가 탁아시설 서비스 이용 여부가 조건이 되지 않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여성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d'Addio와 d'Ercole은 OECD 국가에 대한 횡단면분석(cross-country analysis)을 통해 보육시설 활용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직접비용이 낮을수록, 파트타임 직업이 많을수록, 출산휴가 기간이 길수록(단기적), 그리고 보육기관 등록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 젊은 남녀 간에 가족과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 유의성이 낮았다. 또한 동태적 패널데이터 분석(Dynamic panel-data analysis)을 통해, 가족에 대한 현금 이전지출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대체율이 높을수록,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파트타임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실업률과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장기적) 출산율은 감소한다고 결론지었다.<sup>5)</sup> 전체 실업률이 높을수록 소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출산율이 하락한다. 실업률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여성에게 있어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여성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 출산 여부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파트타임 고용 등을 통한 근무시간의 유연성은 보육 구조의 부족을 보완하여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출산과 직장의 공존 가능성은 출산휴가 일수와 급여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여성의 부담을 한층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시적으로나마 출산으로 인한 휴직, 출산 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파트타임이나 불규칙적인 스케줄로 인한 업무상의 애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력관리의 손실 등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서는 소득, 인적자원, 경력관리 등에서 출산으로 인한 손실이 없어야 한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은 여성 고용 신장과 출산율 제고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보육과 양질의 서비스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 d'Addio, Anna Cristina and d'Ercole, Marco Mira,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Sep. 2005.

축진과 자녀에 대한 투자를 양립할 수 있게 한다. 보육이 적절하지 않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을 때, 혹은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때 부모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위해 불규칙적인 스케줄을 선택하기가 쉽고, 그 결과 부모 직업의 안전성을 떨어트리고 자녀의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여성은 지속적으로 직장을 가지기가 어려워지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쪽을 택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보육시설의 활용이 제한적이고 보육비용도 높아 직장여성 대부분이 가족이나 비공식적인 도우미에게 자녀의 양육을 의존하고 있다.

보육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가정의 재정 참여 없이 정부에 의해 거의 모든 보육이 제공되거나, 둘째, 가계의 소득, 가족 형태, 보육아동의 수와 연령 등에 따라 가정에 현금 이전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셋째, 보육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세제 관련 규정을 활용하는 정책을 들 수 있는데,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과 영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Blau와 Robin은 공공 보육시설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늘어나는 보육비용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sup>6)</sup> Ermisch는 시장에서 제공된 보육시설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경우에 출산율 감소를 완화시킨다고 분석하였다.<sup>7)</sup> 그리고 Røsen은 모성휴가의 연장이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결론지었다.<sup>8)</sup>

6) Blau, D. M. and Robins, P. K., "Child Care Costs and Family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0, 1988, pp. 374-381;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Vol. 25(2), 1989, pp. 287-299.

7) Ermisch, J., "Purchased Child Care, Optimal Family Size and Mother's Employment: theory and Econometric Analysi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989, pp. 79-192.

8) Røsen, M., "Fertility and family policy in Norway - A reflection on trends and possible connections", *Demographic Research*, Vol. 10(10),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2004.

## 제2절 국내 양육 지원 정책

### 1. 중앙 정부의 양육 지원 정책

#### 가. 주요 내용

중앙 정부에서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노동 정책 측면에서 여성 근로자 모성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 급여를 들 수 있으며, 수당 정책으로 장애아동수당,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수당, 입양 자녀 양육 수당, 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 수당이 있다. 세제 지원에서는 반드시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 정책은 아니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인적·특별 공제와 근로장려세제(EITC)를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중앙 정부의 양육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해 보고 양육 수당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정책들과 발생할 수 있는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출산여성에 대한 보호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양성평등과 미래세대에 대한 보호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산전후 휴가급여란 여성근로자가 출산후 모성보호 및 출산자녀의 건강을 위해 출산전과 후에 각각 45일씩 90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동 제도의 경우 여성들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sup>9)</sup>,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sup>10)</sup>, 고용보험법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 등)<sup>11)</sup>에 근거를 두고 있다.

9)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1) 고용보험법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 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지원하는 급여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대 90일분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①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고용주가 임금 전액 지급,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최대 135만원 지급하며, ②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40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란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자녀양육을 위해 신경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상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동제도에 관한 관련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근거를 두고 있다<sup>12)</sup>.

장애아동수당은 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로서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관련 법률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내지 제5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아동의 경우 다른 아동들에 비해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되었으며, 동 제도 도입시 기초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장애아동지원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2009년기준) ①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20만원, ②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10만원, ③차상위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5만원, ④차상위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 지원되는

---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부여 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 휴직 급여를 제공한다.



제도라 할 수 있다. 농업인 양육비 지원사업의 근거법령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에 두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에서도 근거를 두고 있다. 동제도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농어업 종사자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농림어업 및 임업인으로 ①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②농지소유 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를 둔 경우, ③대상아동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농업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보육료 및 유치원의 교육비의 일부(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7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미이용아동에게는 가정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수준은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35%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표 2-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연령별 월 지급액 및 연령기준(2008년기준)

연령	연령기준	월지급액(원)
만0세	'07.3.1 이후 출생	130,000
만1세	'06.3.1 ~ '07.2.28	115,000
만2세	'05.3.1 ~ '06.2.28	95,000
만3세	'04.3.1 ~ '05.2.28	65,000
만4세	'03.3.1 ~ '04.2.28	59,000
만5세	'02.3.1 ~ '03.2.28	84,000
만6세(취학유예)	'01.3.1 ~ '02.2.28	84,000

자료: 농림부(2008), 『2008년 여성농업인정책 주요사업』.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수당은 한부모가구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동가구들의 안정적인 생활영유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sup>13)</sup>. 급여수준은

한부모가족의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입양 자녀 양육 수당·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 수당은 양자로 되는 아동의 보호와 보호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가구에 대해 마련된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입양 자녀 양육수당(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23조(양육보조금등의 지급))은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에게 입양아동이 만 13세 미만까지 월 1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 장애 아동수당(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23조)은 ①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②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③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에게 만 18세까지 월 551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세제지원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제도로는 인적·특별공제 및 근로장려세제(EITC)를 들 수 있다. 인적·특별공제란 정부가 근로 혹은 사업소득자들의 세금에 대해 감면조치를 함으로써 개별근로자 및 사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인적공제 중 다자녀공제(소득세법 51조의2(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다자녀가구들의 조세 감면을 통해 생활안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별공제(소득세법 52조)내의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가구들에게 조세를 통해 오히려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유인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관련 법률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sup>14)</sup>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

13) 한부모가족의 양육수당지원을 위한 관련법률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생계비 2.아동교육지원비 3.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14)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기 위해서는 ①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 ②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③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 ④무주택이어야만 한다.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지원금액은 연 80만원까지이다.

#### 나. 양육 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성 여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많은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sup>15)</sup>. 그러나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및 복지서비스가 완비되면서 나타난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중복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사회서비스제도가 완비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거나, 여러 정부기관으로부터 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 중복이란 엄밀한 점에서 행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정부문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서비스중복이란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서로 다른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적으로는 부정수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능후, 2007). 그러나 서비스 중복의 의미는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공급자(예, 정부부처)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조건(예, 연령, 소득 등)하에서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수급이란 의미에서 서비스 중복의 의미는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서비스 공급의 측면에서 여러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서비스 경합」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중복과 유사한 용어로 「서비스 중첩」을 들 수 있다. 서비스중첩이란 서로 다른 명칭으로 공급되는 다수 서비스의 수급대상과 요건, 급여내용이 부분적으로 겹

15) 대표적인 제도만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 긴급지원제도(2006), 보육지원제도(?년), 장기요양보험제도(2007), 기초노령연금제도(2008) 등이 생겨남.

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육수당 도입의 경우 지역적으로 육아시설 인프라의 부족, 보육서비스의 질, 보육서비스 비용 등의 문제로 보육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가 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계획하고 있는 양육수당 대상은 보육시설 미이용 만0~만1세 영아로 소득 수준은 차상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육수당의 경우 일부에서 기존 제도와 겹칠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서비스 중복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양육수당과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과 기타 사회서비스제도와 중복성을 살펴볼 때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제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육수당제도 도입에 따르는 중복의 문제를 우선 공급자측면에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노동정책측면에서 양육수당과 서비스중복에 해당될 수 있는 제도로는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들 수 있다. 양제도와 양육수당과의 중복성 여부는 먼저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라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에서 양육수당과의 중복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직장 생활을 잠시 휴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에게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 받지 못하는 급여, 다시 말해 자녀 출산이나 양육에 따른 기회 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노동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동 급여가 모두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된다는 것을 보아도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보험적인 성격이 강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 수당이 재가 양육 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것을 볼 때 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와는 정책 추진의 목적 측면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수당측면에서 서비스중복에 해당될 수 있는 제도로는 장애아동수당, 농업인 영유

아 양육비 지원 사업,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수당, 입양 자녀 양육 수당, 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 수당을 들 수 있다. 이들 제도와 양육수당과의 중복성 여부를 살펴 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장애발생으로 인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일반가정에 비해 장애아가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을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양육수당과 다르고,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시 양육수당과의 중복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의 경우 시장개방,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 종사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양육수당과도 제도 도입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할 수 있다. 또한 동 제도의 경우 이미 지원대상자 선정조건에서 ①타부처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 ②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③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지원을 받은 아동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농어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해 지원하는 양육 수당이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기본 정책으로서 자리 매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양육수당제도 도입 시 보육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양육 수당이 담당하도록 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에서 양육 수당 대상자를 제외함으로써 중복 수혜의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의 경우 대상자가 저소득층가구이며, 한부모 가정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양육 수당과는 중복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육료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가정적으로는 한부모 가구주가 근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장애아동과 같이 일반가정과 달리 자녀양육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입양 자녀 양육 수당·입양 장애 아동 양육 보조 수당은 제도 도입의 취지가 양육 수당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양자녀 수당의 경우 입양자녀들로 하여금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양육수당과는 입법취지에 차이가 있다. 특히 입양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수당과 같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양육수당과 세제 지원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를 살펴보면, 인적·특별공제의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사람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양육수당과의 중복수혜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공제제도는 소득에 대한 공제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비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양육수당과는 도입취지가 다르다 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빈곤으로 부터의 탈출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양육수당과 근로장려세제의 제도도입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중복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기초보장수급 가구들의 경우 이미 근로장려세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중복수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다만,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이 지적될 가능성이 있으나, 양 제도간의 도입의 취지를 고려시 서비스 중복성의 가능성은 없다 할 수 있다.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양육 지원 정책 역시 양육 수당과의 서비스 중복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 하도록 한다. 지자체별로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수당 중 양육수당과 겹칠 수 있는 제도로는 다자녀 가정 양육 수당, 출산 축하금을 들 수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높은 고령화율로 인해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경우 인구유입과 고령화수준을 낮추기 위해 각종 다자녀 및 출산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양육 수당 및 출산 축하금은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통해 운용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출산 축하금의 경우 자녀출산에 대해 일회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매월

지급되는 양육수당제도와는 지급방식에 있어서 다르다 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양육 수당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첫째, 둘째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로 셋째아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시 각 지자체별로 운용되고 있던 교통수당, 장수수당, 장수노인 상차림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들이 기초노령연금제도로 통합되도록 한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양육수당 도입시 현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기준과 급여수준들이 하나로 통합·조정 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양육수당 도입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지자체별 출산 및 아동관련 수당들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종합컨대 노동정책은 양성평등, 여성 노동력의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제도들이며, 수당정책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세제정책 역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 수당은 지자체별로 여건과 목적에 맞게 설정된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각 제도별로 살펴본 결과 양육수당과 각종 사회서비스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수당의 경우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보육서비스 미이용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른 서비스와의 중복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각 제도별로 목적과 목표가 다르게 설정됨에 따라 양육수당과는 별도의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제도의 경우 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도 자체에서 중복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입법 취지가 다름에 따라 중복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t;표 2-3&gt; 양육 수당과 다른 제도들 간의 중복성 요약표

구분	정책	중복성	근거	비고
노동정책	산전후 휴가급여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여성고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자녀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기회 비용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	
	육아휴직급여	×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노동 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험적인 성격이 강함	
수당 정책	장애아동수당	×	장애발생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가정에 비해 장애아가 있음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	저출산 및 시장개방으로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농업 종사자들을 대상을 도입된 제도임.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은 양육수당이 담당하도록 하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에서 양육수당 대상자를 제외하여 중복성을 방지하도록 함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수당	×	한부모가정이 자녀를 양육할 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양육수당과 중복성이 약함	
	입양자녀양육 수당	×	입양자녀들로 하여금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양육수당과는 입법취지에 차이가 있음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양육 수당과는 중복성 없음	



구분	정책	중복성	근거	비고
세제 지원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공제)	×	소득에 대한 공제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다자녀 공제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조세감면을 통해 생활안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임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		교육비의 경우,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임
	근로장려세제(EITC)	×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제도 도입 취지에서 양육 수당과 중복성 없음	기초보장수급자는 이미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음.
지자체 수당정책	다자녀 가정 수당	×	각 지자체에서 출산율 회복 혹은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임	양육수당이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양육 지원 제도들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출산축하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양육 지원 정책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예산을 활용하여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양육수당 정책과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지자체의 양육수당 정책과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은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이라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 좀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출산율 증가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양육 수당과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은 유사한 정책명 하에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육 수당 정책과 출산 축하금 정책을 광역지자체,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의 양육 수당 정책

광역지자체에서 양육수당이라는 정책명 하에 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충청북도 5개 지자체 이다. 지자체 양육수당 정책은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해서 셋째아 가정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각 지역의 출산율 증가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 둘째아에게도 지원함). 서울, 대구, 대전, 광주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월 일정액수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다니면 보육료를 지원한다. 양육수당 액수와 보육료 지원 액수는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다. 서울시의 경우, 셋째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다니면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대구시의 경우, 셋째아가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으면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다니면 같은 액수인 월 20만원을 보육료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셋째아가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으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보육시설을 다니면 보육료로서 양육 수당 액수와 동일한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시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 5만원을 양육수당을 지원하나, 보육시설에 다닌다면 양육수당 보다 많은 금액인 월 20만원을 보육료로 지원한다. 충청북도

의 경우에는 보육 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모두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둘째아에게는 월 10만원, 셋째아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되는 기간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12개월간 지급한다 (대구시는 11개월). 서울시는 영유아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전라북도의 경우 시설에 다니는 셋째아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금액은 각 지자체 마다 다양하며 지원되는 기간은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다니는 기간인 만0~만4세 혹은 만5세까지 지원하며, 울산과 전북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시기부터 퇴소할때까지 지원한다.

<표 2-4> 광역지자체 양육수당 지원 현황 (2008년 8월 현재)

지자체	출생순위	보육시설미이용	보육시설이용	기간
서울	셋째	월 10만원	보육료의 50% 지원	만0세~만5세
부산	없음			
대구	셋째	월 20만원	월 20만원	11개월
대전	셋째	월 5만원	월 20만원	12개월 (보육시설미이용) 36개월 (보육시설이용)
인천	셋째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의 75% 지원	만0~만4세
울산	셋째		월 최대 10만원	입소~퇴소
광주	셋째	월 10만원	월 10만원	12개월
경기	첫째		월 7만원	만0~만5세
	둘째		월 17.5만원	
	셋째		월 17.5만원	
강원	없음			
충북	둘째	월 10만원		12개월
	셋째	월 15만원		
충남	없음			
전북	셋째		월 10만원	입소~퇴소
전남	없음			
경북	없음			
경남	없음			
제주	없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와 달리 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모두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아를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육수당 정책이 출산율 회복을 위한 목적임을 분명하게 표방하고 있다. 첫째아부터 모든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북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세 지역이며,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남 목포시와 경북 경주시이다. 대부분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시, 태백시, 경주시, 안동시, 상주시, 경산시의 경우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첫째 혹은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경주시, 안동시, 상주시의 경우 출생 순위가 높은 아동에 대해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의 양육수당 정책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경기도의 용인시, 안양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표 2-5> 중소도시 양육수당 지원 현황 (2008년 8월 현재)

지자체	출생순위	보육시설미이용	보육시설이용	기간
경기	성남시	셋째	월 12만원	36개월
	안산시	셋째	월 3만원	만5세
	광주시	셋째	월 20.9만원	12개월
	양주시	셋째	월 5만원	24개월
	안성시	셋째	월 10만원	12개월
	김포시	셋째	월 10만원	13개월~만6세
	용인시	셋째	월 23만원(만2세미만) 월 18만원(만2세) 월 12만원(만3세이상)	
	안양시	셋째	월 31.7만원	입소~퇴소
	군포시	셋째	월 5만원	입소~퇴소
	하남시	셋째	월 9.8만원	
	의왕시	셋째	월 5만원	
	과천시	셋째	월 11만원	
	화성시	셋째	최고 월 10만원	

<표 2-5> 계속

지자체	출생순위	보육시설미이용	보육시설이용	기간
강원	춘천시	셋째	부모부담 실보육료 50%	입소~퇴소
	태백시	셋째	월 20만원	12개월
충남	계룡시	셋째	월 15만원	입소~퇴소
전북	정읍시	셋째	월 13만원	취학전까지
	남원시	셋째	월 30만원	5년간
	김제시	첫째	월 5만원 (공무원자녀)	취학전까지
전남	목포시	둘째	월 6만원	만3세까지
		셋째	월 15만원	
경북	포항시	셋째	월 10만원	12개월
	경주시	둘째	월 10만원	12개월
		셋째	월 20만원	12개월
		넷째	월 20만원	5년
	안동시	첫째	월 6만원	24개월
		둘째	월 10만원	
		셋째	월 20만원	
	구미시	셋째	월 10만원	12개월
	영주시	셋째	월 10만원	36개월
	영천시	첫째	월 8만원	12개월
		둘째	월 10만원	
		셋째	월 10.6만원	
	상주시	첫째	월 10만원	12개월
		둘째	월 15만원	
		셋째	월 20만원	
	경산시	셋째	월 20만원	11개월
경남	김해시	셋째	월 10만원	만5세까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농어촌의 경우 대부분의 양육수당은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이용하지 않는 아동 모두에게 지원되고 있다. 광역시나 중소도시와는 달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의 경우 저출산 문제와 인구 유출 문제가 도시 지역 보다 심각하여 첫째아 부터 양육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 보성군의 경우

첫째아 월 20만원, 둘째아 월 30만원, 셋째아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강진군 역시 첫째아 월 10만원, 둘째아 월 20만원, 셋째아 월 35만원을 지원하여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를 보이는 한편, 농어촌 지역에는 거주하는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현황 (2008년 8월 현재)

지자체		출생순위	보육시설미이용		보육시설이용	기간
부산	기장군	셋째	월 10만원			1년
인천	강화군	셋째	월 10만원			5년
울산	울주군	셋째		월 최대 25만원		입소~퇴소
경기	여주군	첫째		월 3.7만원		
	양평군	셋째	월 10만원			12개월
	연천군	셋째	월 10만원		월 22만원	24개월
강원	정선군	셋째	분기당 75만원			만12세까지
	양양군	둘째	월 10만원			12개월
		셋째	월 10만원			36개월
충남	청양군	셋째	월 10만원			만5세까지
전북	완주군	셋째	월 7.5만원			9개월
	진안군	첫째	월 10만원			12개월
		둘째	월 10만원			12개월
		셋째	월 10만원			36개월
	무주군	첫째	월 5만원			36개월
	순창군	첫째	월 5만원			12개월
		둘째	월 5만원			12개월
		셋째	월 5만원			36개월
	전남	보성군	첫째	월 20만원		
둘째			월 30만원			
셋째			월 50만원			
강진군		첫째	월 10만원			12개월
		둘째	월 20만원			
		셋째	월 35만원			
영암군		둘째	월 5만원			10개월
		셋째	월 5만원			
함평군		셋째	월 10만원			10개월

<표 2-6> 계속

지자체		출생순위	보육시설미이용	기간
경북	군위군	셋째	월 10만원	12개월
	영양군	첫째	월 3만원	36개월
		둘째	월 5만원	
		셋째	월 10만원	
	예천군	셋째	월 10만원	12개월
	봉화군	첫째	월 7만원	5년
		둘째	월 10만원	
		셋째	월 20만원	
	울진군	둘째	월 10만원	5년
		셋째	월 10만원	
경남	울릉군	셋째	월 10만원	12개월
	의령군	셋째	월 15만원	만5세
	함안군	둘째	월 5만원	만5세
			월 5만원	
	창녕군	셋째	월 15만원	만5세
	남해군	셋째	월 15만원	만5세
	하동군	셋째	월 10만원	만5세
	거창군	셋째	월 20만원	만5세
	합천군	셋째	월 20만원	만5세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 나.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

출산 축하금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액이 지급되는 양육 수당과는 달리 자녀를 출산할 때 일회성으로 지급되고 있다. 출산 축하금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두 지자체가 모두 지원하는 경우 중복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역지자체 중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 50만원, 대구 50만원, 광주 50만원, 대전 10만원, 울산 30만원이며 모두 셋째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과 기초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 중구의 예를 들면, 셋째아를 출산하는 경우 부산시로부터 50만원과 부산시 중구로부터 3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총 350만원을 받게 된다.

&lt;표 2-7&gt; 대도시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 (2008년 8월 현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구분	지원현황	구분	첫째	둘째	셋째
서울	없음	종로구		50만원	100만원
		중구		20만원	100만원
		용산구	5만원	5만원	5만원
		성동구		20만원	50만원
		광진구		10만원	30만원
		동대문구		30만원	50만원
		중랑구		50만원	100만원
		성북구		20만원	20만원
		강북구	20만원	30만원	50만원
		도봉구		5만원	20만원
		노원구		5만원	20만원
		서대문구	2만원	12만원	12만원
		양천구		10만원	30만원
		강서구			20만원
		금천구		20만원	50만원
		영등포구			50만원
		관악구		10만원	50만원
		서초구	10만원	50만원	100만원
		강남구		50만원	100만원
부산	셋째 50만원	중구		60만원	300만원
		동구			20만원
		사상구		30만원(쌍둥이)	50만원(세쌍둥이)
대구	셋째 50만원	중구			100만원
인천	없음	중구			100만원
		서구			100만원
광주	셋째 50만원	동구	5만원	5만원	50만원
		서구			5만원
대전	셋째 10만원				
울산	셋째 30만원	중구			10만원
		남구			20만원
		동구			10만원
		북구		10만원	2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광역지자체로서 전라북도 30만원, 전라남도 30만원, 경상남도 20만원, 제주시 50만원가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광역지자체는 모두 셋째아에 대해 출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인 중소도시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광역지자체인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보다 대부분의 경우 더 높다. 중소도시의 경우 역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셋째아에 대해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아에게 지원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셋째아를 출산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2008년 8월 현재 21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강원도 속초시로 셋째아 출산시 3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 수당과 마찬가지로 출산 축하금 역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부터 모두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남원시의 예를 들면 셋째아를 출산하는 경우 전라북도에서 30만원과 남원시에서 170만원을 합하여 총 200만원을 받는다.

<표 2-8> 중소도시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 (2008년 8월 현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구분	지원현황	구분	첫째	둘째	셋째
경기	없음	수원시			50만원
		성남시			100만원
		고양시			20만원
		부천시			30만원
		용인시			100만원
		안산시			20만원
		안양시			50만원
		남양주시		30만원	100만원
		의정부시			30만원
		평택시		30만원	50만원
		시흥시		10만원	20만원
		화성시		50만원	100만원
		광명시			50만원
		파주시			30만원
		군포시		50만원	100만원
		김포시			100만원
		이천시			100만원
		구리시		20만원	50만원
		양주시		20만원	
		안성시			50만원

&lt;표 2-8&gt; 계속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구분	지원현황	구분	첫째	둘째	셋째
경기	없음	포천시		20만원	40만원
		오산시			50만원
		의왕시			50만원
		동두천시		15만원	25만원
		과천시		50만원	100만원
강원	없음	원주시	10만원	30만원	50만원
		동해시		40만원	80만원
		태백시	10만원	50만원	
		속초시	20만원	140만원	380만원
		삼척시		50만원	100만원
충북	없음	충주시	3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제천시	30만원	30만원	30만원
충남	없음	천안시			50만원
		공주시		50만원	80만원
		보령시		50만원	80만원
		아산시		30만원	60만원
		서산시	30만원	30만원	100만원
		논산시	30만원	30만원	100만원
		계룡시		50만원	50만원
전북	셋째 30만원	익산시		20만원	10만원
		정읍시		30만원	50만원
		남원시		100만원	170만원
		김제시	30만원	50만원	70만원
전남	첫째 30만원	목포시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순천시			150만원
		나주시			100만원
경북	없음	김천시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영주시	50만원	50만원	50만원
		영천시	50만원	50만원	50만원
		문경시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경남	셋째 20만원	창원시		30만원	50만원
		마산시			200만원
		진해시		30만원	100만원
		통영시			100만원
		밀양시		20만원	100만원
제주	셋째 5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농어촌의 경우 많은 경우 둘째아와 셋째아 뿐만 아니라 첫째아부터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대로 농촌의 경우 아동수가 적어 출산을 회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아로 갈수록 축하금의 액수가 많아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이 출산을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총 27개 지역이 셋째아를 출산할 경우 100만원 이상을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높은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 함안군으로 셋째아를 출산할 경우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 순창군에서도 셋째아를 출산할 경우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출하금과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북 순창의 경우 셋째아를 출산하면 전라북도에서 30만원과 순창군에서 480만원을 지원 받아 총 5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 함안군 역시 셋째아를 출산하면 경상남도에서 20만원과 함안군에서 500만원을 지원 받아 총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표 2-9> 농어촌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 (2008년 8월 현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구분	지원현황	구분	첫째	둘째	셋째
인천	없음	강화군	15만원	15만원	55만원
		옹진군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경기	없음	여주군			30만원
		양평군		50만원	100만원
		가평군			100만원
		연천군			30만원
강원	없음	횡성군	20만원	20만원	20만원
		영월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철원군		30만원	50만원
		양구군			50만원
		인제군	50만원	50만원	100만원
		고성군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양양군	10만원		
충북	없음	청원군	30만원	30만원	30만원
		영동군	30만원	30만원	30만원
		단양군			25만원

&lt;표 2-9&gt; 계속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구분	지원현황	구분	첫째	둘째	셋째
충남	없음	금산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연기군	50만원	50만원	100만원
		부여군		50만원	100만원
		서천군	30만원	30만원	80만원
		청양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홍성군	30만원	50만원	50만원
		예산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태안군	50만원	50만원	100만원
		당진군	20만원	30만원	100만원
전북	셋째 30만원	무주군	50만원	50만원	50만원
		장수군	50만원	50만원	170만원
		임실군	50만원	100만원	170만원
		순창군	50만원	50만원	480만원
		고창군		50만원	70만원
		부안군			270만원
전남	첫째 30만원	고흥군		25만원	50만원
		무안군			70만원
		장성군	30만원	30만원	30만원
		진도군	70만원	70만원	70만원
경북	없음	군위군	30만원	30만원	30만원
		의성군	80만원	150만원	150만원
		청송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영덕군	30만원	30만원	30만원
		고령군	30만원	30만원	50만원
		성주군	10만원	20만원	120만원
		칠곡군		50만원	120만원
		봉화군	50만원	50만원	50만원
		울릉군	50만원	50만원	50만원
경남	셋째 20만원	의령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함안군		50만원	500만원
		창녕군	10만원	20만원	30만원
		고성군		100만원	300만원
		남해군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하동군			110만원
		산청군	10만원	30만원	60만원
		함양군	30만원	30만원	100만원
		거창군		50만원	20만원
		합천군	10만원	20만원	3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 제3장 자녀 양육 행태 및 시민 의식 분석

### 제1절 양육수당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분석

#### 1. 전화 조사 개요

정부는 2009년부터 소득 수준 차상위 계층 이하 보육 시설 미이용 만0~만1세 영아에 대해 월 10만원 양육 수당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육 수당 정책의 원활한 초기 정착과 이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육 수당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과 태도를 분석하여 정책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만0~만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양육 수당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중앙 정부가 양육 수당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몇 개의 광역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양육수당과 유사한 정책을 셋째아 가정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자체에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자녀의 모친에 대해서 양육 수당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양육 수당 정책과 유사한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로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약 1년 동안의 기간에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2008년도부터 만0~만5세 셋째아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셋째아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면 보육료를 50% 감면해 주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sup>16)</sup>.

---

16) 2008년도 이전에는 셋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에 다니면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으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양육수당과 제일 유사한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0~만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1,020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획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분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 중 양육 수당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최소 300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였다<sup>17)</sup>. 조사 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영유아 및 가구의 특성, 양육수당지원과 관련한 행태, 양육수당의 효과성, 모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표3-1>). 양육 수당 대상 여성들의 경우 질문에 대한 응답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자녀가 둘 이상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 중 연령이 어린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양육수당 비대상 여성들의 경우는 막내를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양육 수당 지원과 관련한 행태는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사람과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유와 과거 보육시설에 보낸 경험이 있는가를 파악한다. 과거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냈다면 그 이유와 현재에는 보내지 않게 되는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행태가 양육수당 지원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모색한다. 양육수당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 도입될 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지 아니면 보육시설에 보낼지 여부를 파악하며 각각의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양육수당의 효과성은 양육수당의 주 사용용처, 양육수당이 도움되는 정도, 양육수당을 받고나서 더 좋은 양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적정 양육수당 액수 측면에서 파악한다. 모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시 양육 수당 포기 여부 및 직장 선택 여부, 희망 양육 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취업을 포기 하기 위한 양육 수당 액수 측면에서 분석한다.

17) 조사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여성과 받지 않고 있는 여성의 분포가 실제 모집단상의 분포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보육료 무상 지원을 하  
위 소득 50%까지 확대하는 반면 양육 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까지만 지원하도  
록 계획되어 있어 이렇게 보육료 지원 대상과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서로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보육료가 무상으로 지원되는 반면  
가정내 양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을 분석하며 이러한 양 제도간의 비형평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다.

<표 3-1> 양육 수당 정책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영유아 및 가구의 특성	<p>&lt;영유아의 특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 양육수당 지원 여부</li> </ul> <p>&lt;가구의 특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결혼상태</li> <li>·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월평균가구소득, 월평균 생활비</li> </ul>
양육수당지원과 관련한 행태	<p>&lt;양육수당 대상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유</li> <li>· 과거 보육시설 이용 경험 (과거 보육시설에 보낸 이유, 보육 시설에 보내다가 현재 안보내는 이유)</li> </ul> <p>&lt;양육수당 비대상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수당 도입시 양육 행태 (재가양육 혹은 보육시설 이용)</li> <li>· 양육수당이 도입될 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li> <li>· 양육수당이 도입되더라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li> </ul>
양육수당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수당의 주 사용 용처</li> <li>· 양육수당의 도움 정도</li> <li>· 양육수당을 받은 후 더 좋은 양육 제공 여부</li> <li>· 적정 양육 수당 액수</li> </ul>
모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li> <li>· 희망 양육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li> <li>· 취업을 포기하기 위한 양육 수당 액수</li> </ul>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무상지원 및 양육 수당 부재시 양육 행태 (보육시설 이용 이유, 재가 양육 이유)</li> <li>· 양제도간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li> </ul>

## 2. 전화 조사 결과

### 가. 응답자 특성

만0~만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체 조사 대상자 1,020명 중 양육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303명으로 전체의 29.7%이며,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717명으로 전체의 70.3%이다. 취업 여부를 분석한 결과, 취업 여성은 263명으로 전체의 25.8%, 비취업여성은 757명으로 74.2%인 것으로 나타나 비취업여성의 비율이 취업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가 만0~만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경향은 양육수당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더욱 현저하여 약 85%에 가까운 여성들이 비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양육 수당 정책이 셋째아 이상을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자녀 양육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하겠다.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돌보아야 할 자녀가 많은 경우, 노동시장 참여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결혼 상태는 대부분의 경우 유배우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고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이 62.6%로 고졸 31.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육수당 대상자와 비 대상자를 비교하면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양육 수당 비 대상자에게서 67.6%로 나와 양육 수당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5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2.2%로 여아 47.8%보다 약간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 비 대상자의 경우 남아와 여아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양육 수당 대상자의 경우 남아가 59.1%로 여아의 40.9%보다 약 20% 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양육 수당 대상자가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셋째 자녀의 경우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아들을 낳기 위해 셋째 자녀까지 출산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표 3-2> 양육 수당 대상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계
양육수당 대상	303 (29.7)	1,020 (100)
양육수당 비 대상	717 (7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표 3-3> 응답자 특성 빈도 분석

(단위: %, 명)

		전체	양육수당대상	양육수당 비 대상
취업 여부	취업	25.8	15.5	30.1
	비취업	74.2	84.5	69.9
	계 (명)	100.0 (1,020)	100.0 (303)	100.0 (717)
결혼 상태	유배우	99.2	100.0	98.9
	이혼	0.6	-	0.8
	사별	0.1	-	0.1
	기타	0.1	-	0.1
	계 (명)	100.0 (1,020)	100.0 (303)	100.0 (717)
학력	중졸	1.0	1.0	1.0
	고졸	31.3	44.9	25.7
	대졸	62.6	51.2	67.6
	대학원 졸	4.8	3.0	5.6
	계 (명)	100.0 (1,020)	100.0 (301)	100.0 (717)
자녀 성별	남아	52.2	59.1	49.4
	여아	47.8	40.9	50.6
	계 (명)	100.0 (1,020)	100.0 (298)	100.0 (717)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응답자 여성의 연령은 평균 약 36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수당 대상 여성의 평균 연령이 37세로 비 대상 여성의 35세보다 약 2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 자녀 연령은 평균적으로 약 만 2.7세이며 양육 수당을 받고 있는 자녀의 평균 연령이 약 만 2.3세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자녀의 평균 연령 만 2.8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를 제외하고 응답 대상 자녀에게 한 달 평균 소요되는 의식주 비용은 약 2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수당 지원 대상 자녀와 비 대상 자녀 간에 별다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sup>18)</sup>.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32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수당 대상이 약 310만원으로 양육수당 비 대상의 337만원 보다 평균적으로 약 27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는 약 227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양육 수당 대상이 약 242만원으로 양육 수당 비 대상자 220만원 보다 평균적으로 약 22만원 더 많은 생활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컨대, 양육수당 대상자들은 양육수당 비 대상자들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자녀가 많은 이유로 월평균 생활비는 더 높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막내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두 집단 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수당 대상 가정의 월평균 생활비가 더 높다고 해서 자녀 양육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18) 본 조사에서는 응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녀에 대해 보육비와 교육비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의식주 비용으로 한달 평균 얼마나 지출하는가 질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비는 양육수당 대상자인 경우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자녀에게 지출되는 평균 양육비이며, 비대상자인 경우 막내자녀에게 지출되는 월평균 양육비이다.

<표 3-4> 응답자 특성 평균 분석

(단위: 세, 만원, 명)

항목	구분	평균	최대	최소	대상자수
연령	전체	35.86	49	23	1,020
	양육수당대상	37.30	47	28	303
	비지원대상	35.25	49	23	717
자녀 연령	전체	2.66	5	0	1,020
	양육수당대상	2.34	5	0	303
	비지원대상	2.79	5	0	717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전체	28.32	210	2	1,006
	양육수당대상	27.36	100	2	303
	비지원대상	28.73	210	5	713
월평균가구소득	전체	328.91	1,000	0	959
	양육수당대상	309.99	1,000	0	284
	비지원대상	336.87	1,000	70	675
월평균 생활비	전체	226.82	800	40	1,006
	양육수당대상	242.45	800	50	300
	비지원대상	220.18	700	40	7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나. 양육 수당 대상자 분석

### (1)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이유

양육 수당 대상자들이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6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12.5%)”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의 가정 내 양육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연령이며, 보육료 비용 문제와 자녀 양육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역시 어느 정도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지적한다. 조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양육 수당 지급액이 10만원 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수준의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와 “집 주변에 보낼 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조사 대상 지역이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지방과 비교하여 보육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보육 서비스의 질 역시 뒤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지역을 농어촌을 포함한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와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응답자는 이 보다 많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이유에 대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부표 1>에 나와 있다.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가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아이가 어려서” 집에서 자녀를 키운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4~만5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보다는 보육료 부담 때문에 자녀를 집에서 키운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 집단 보다 높았다. 생활비 수준에 따른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이가 어려서 집에서 키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생활비 수준이 낮은 집단일 수록 보육료 부담 때문에 집에서 양육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비 수준이 월평균 301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 보다 자녀 연령 때문에 집에서 자녀를 키운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생활비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보육료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생활비 수준이 높은 가정의 경우 보육료 부담보다는 자녀의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양육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모의 연령과 양육비 수준에 따른 차이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그룹 일수록 자녀 연령 보다는 보육료 부담을 가정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로 지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의 연령이 높을 수록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간 차이와 맥

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양육비 수준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게 눈에 띄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양육비가 월 11~20만원 수준인 집단의 경우 양육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 비해 보육료 부담 때문에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녀 1인당 양육비 수준이 낮은 가정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이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보육료 비용을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5>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이유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이유	아이가 너무 어려서	68.3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11.9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2.0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3.6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12.5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0.7
	기타	1.0
	계 (명)	100.0 (3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2) 과거 보육 시설 이용 경험

양육 수당 대상자 자녀를 과거에 보육시설에 보낸 경험이 있는 여성은 총 38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1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보육시설에 보냈던 이유로 “보육료를 지원 받기 때문,”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를 비슷한 비율로 지적하였다.

과거에 보육시설에 보내다가 현재 보내지 않는 이유로는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니까”를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응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은 서울시가 2008년 이전에는 셋째아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다가, 2008년도에 와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50%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한 것에 기인한다. 과거에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던 사람이 이제는 보육료의 50%를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이 보육료 지원과 양육 수당 두 가지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자녀의 양육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이 자녀 양육을 위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한다든가, 혹은 양육 수당을 받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있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육시설 이용 경험을 집단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부표 2>에 나와 있다. 보육시설에 보냈던 이유와 보육시설에 보내다가 안 보내는 이유는 응답 대상자가 38명으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에는 샘플 수가 너무 적어서 집단별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과거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낸 이유는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가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4~만5세 자녀의 경우, 과거에 보육시설에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이 보다 나이가 어린 자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가 어릴수록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여성의 경우 30대 여성에 비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여성의 경우 30대 여성 보다 막내 자녀 연령이 높은 경우가 많다고 판단되므로 보육 시설 이용 경험 여부가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결과라고 생각 된다.

취업 유무는 보육시설 이용 경험에 있어서 5%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의 경우가 비취업 여성의 경우에 비해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자녀를 맡아 키워 줄 시설 서비스가 필요한 바, 비취업 여성에 비해 보육 시설 이용 경험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양육비 수준에 따른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양육비 수준이 11~20만원인 집단이 더 높은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집단에 비해 과거에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수준이 낮은 집단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일 가능성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인 경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성이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양육비 지출 수준이 낮은 집단에게서 보육 시설 이용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과거 보육시설 이용 경험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과거 보육시설 이용 경험	보육 시설에 보낸 적 있다	12.5
	보육 시설에 보낸 적 없다	87.5
	계 (명)	100.0 (303)
보육시설에 보냈던 이유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28.9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26.3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31.6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13.2
	계 (명)	100.0 (38)
보육시설에 보내다가 안보내는 이유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니까	43.2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
	내가 키우는 것이 더 좋아서	27.0
	시설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18.9
	보육시설이 멀리 있어서	2.7
	기타	8.1
	계 (명)	100.0 (37)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3) 양육 수당의 활용도

양육수당의 주 사용 용처에 대해 절대 다수인 82.8%가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생활비의 일부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월 10만원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양육 수당으로 받은 돈은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으로 흡수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양육 수당 사용 용처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집단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3>). 이러한 사실은 양육 수당이 자녀 연령, 소득 수준, 모의 학력, 취업 유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단, 자녀의 성별에 따라 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자녀가 남아인 경우 여아에 비해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자녀가 여자인 경우 남아에 비해 생활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 있어 남아의 경우 양육 수당으로 받은 급여액을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여아의 경우 가족 전체를 위한 생활비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겠다.

양육 수당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6.2%가 “매우 도움됨” 혹은 “조금 도움됨”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혹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이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보인 비율은 26.5%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 수당의 도움 정도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그다지 큰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표 5>). 이러한 사실은 모의 연령, 자녀 연령, 취업 유무, 모의 학력 수준의 차이에 상관없이 양육 수당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다만 생활비 수준에 있어 10%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음이 나타나 생활비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양육수당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양육 수당에 대한 체감도가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 일수록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양육 수당을 받고 나서 그 전과 비교하여 더 좋은 양육을 제공하게 되었다는데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비율은 40.6%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비율은 18.2%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양육 수당이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동 응답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일 수록 양육 수당이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수준별에 따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 수준별에 따라 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수준이 낮거나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 일수록 양육 수당이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자녀 연령은 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 수당이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연령이 높을 수록 양육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현재의 양육수당 급여 수준으로는 연령이 높은 자녀에 대해서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양육 수당이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효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 액수를 상향 조정하여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양육수당 적정액수에 대해 43.2%가 “16~20만원”을 응답하였으며 38.6%가 “21~30만원”을 응답하였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양육 수당 10만원을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1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육 수당은 자녀에게 적정한 양육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앞서 조사 결과에서 월평균 자녀에게 지출하는 양육비 수준이 약 28만원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양육수당 급여 수준은 이러한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집단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의 연령, 자녀 연령, 자녀 성별, 취업 유무, 소득수준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16~20만원” 혹은 “21~30만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7>). 이는 자녀 연령이나 소득수준 혹은 취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월평균 자녀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양육 수당으로 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표 3-7> 양육 수당의 활용도: 양육 수당 대상자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양육수당의 주 사용처	생활비의 일부	15.5
	아이의 양육을 위해	82.8
	내 자신을 위해	0.7
	기타	1.0
양육수당의 도움정도	매우 도움됨	11.9
	조금 도움됨	34.3
	보통	27.4
	별로 도움되지 않음	24.8
	전혀 도움되지 않음	1.7
양육수당을 받은 후 더 좋은 양육 제공	매우 그렇다	5.0
	그렇다	35.6
	보통	41.3
	그렇지 않다	16.5
	매우 그렇지 않다	1.7
	계 (명)	100.0 (303)
양육 수당 적정 액수	10만원	2.0
	11~15만원	4.6
	16~20만원	43.4
	21~30만원	38.7
	31만원 이상	10.6
	기타	0.7
	계 (명)	100.0 (30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4) 취업 시 양육 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취업 시 양육 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58.7%가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고 응답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10만원 수준의 양육 수당은 여성의 취업 의사를 저하시키는데 별 다른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 시 양육 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를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학력을 제외하고는 집단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표 7>). 학력별로는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집단간 차이를 보여 대졸자의 경우 고졸자에 비해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혹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고 응답한 비율은 고졸자가 대졸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수준이 대졸자의 경우 고졸자에 비해 높아 양육에 따른 기회 비용 수준이 대졸자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졸자의 경우 노동 시장에 참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가정에 남아 자녀를 돌볼 여성은 고졸자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고졸자의 경우 대졸자 보다 노동 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만원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표 3-8> 취업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취업 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58.7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3.9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19.8
	기타	7.6
	계 (명)	100.0 (3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5) 희망 양육수당 수령 시 취업 포기 여부

원하는 수준으로 양육 수당이 지급될 경우 직장을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다는 비율은 69%로 나타나 상당수의 여성들이 원하는 만큼의 양육 수당을 받을 때 직장을 포기할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포기하기 위한 양육 수당 액수는 44.5%가 30~39만원으로 응답하여 가장 큰 선호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양육수당 급여액 월 23만원 수준에 대해서는 약 13%의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양육수당 대상자들이 셋째아 이상을 양육하고 있어 가사와 육아 부담이 큰 여성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월 23만원까지 양육수당 급여액을 확대하여도 여성들의 취업의사를 저하시키는데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 대상자가 3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모라는 특수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데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자녀가 많은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을 다른 사람 혹은 시설에 맡길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직장을 다니는 것 보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것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여성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액수만큼의 양육 수당이 각 자녀 당 지급될 경우, 자녀 수가 많은 여성은 그 만큼 더 많은 액수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장을 포기하고 자녀를 집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이 평균적으로 약 1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며, 세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양육 수당 급여 상향 조정에 따른 여성 취업 감소 현상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9)</sup>.

희망 양육수당 수령 시 취업 포기 여부는 취업유무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생활비 수준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8>). 취업 유무에 따라서는 0.1%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

19) 통계청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중 여성·아동 표본(10%)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 중 출생 자녀 3명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0~34세 6.5%, 35~39세 12.5%, 40~44세 14.1%, 45~49세 17.7%인 것으로 나타남

는 비취업자에 비해 희망하는 수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아도 노동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고 남아 있겠다고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그동안 쌓은 경력을 유지하기 원하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통한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강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별에 따라서는 1%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자의 경우 고졸자에 비해 희망하는 수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아도 직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집단이 월소득 400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희망하는 수준으로 양육 수당이 지급될 때 취업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수준에 따라서는 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월 생활비 수준이 낮을수록 희망하는 액수만큼의 양육 수당이 지급될 때 취업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포기하기 위한 자녀 1인당 양육 수당 액수는 자녀 연령과 양육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9>).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자녀 연령이 높을 수록 30~39만원 수준의 양육 수당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자녀 연령이 높을 수록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희망하는 양육 수당 액수도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육비 수준별에 따라서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는바, 양육비 지출 수준이 더 높은 집단일 수록 50~59만원 수준의 높은 금액을 양육 수당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대인 30~39만원 수준을 양육 수당으로 희망하는 비율은 양육비 수준이 낮은 집단일 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비가 높은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 수당이 월 10만원 수준으로 지원될 경우 양육 수당에 대한 체감도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하겠다.

&lt;표 3-9&gt; 희망 양육 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희망 양육 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취업을 포기 하겠다	69.0
	취업을 포기 하지 않겠다	29.4
	기타	1.7
	계 (명)	100.0 (303)
직장을 포기하기 위한 자녀 1인당 양육 수당 액수	20만원 이하	1.4
	20~29만원	12.9
	30~39만원	44.5
	40~49만원	6.2
	50~59만원	26.3
	60~99만원	5.3
	100만원 이상	3.4
	계 (명)	100.0 (20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다. 양육 수당 비 수령 대상 분석

## (1) 양육수당 도입시 가정에서 자녀 양육 여부

양육 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여성 중 양육 수당이 도입되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 응답자에서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64.9%는 양육수당이 도입되어도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양육 수당 도입 시 가정에서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부표 10>과 같다. 자녀 연령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에서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모의 연령별은 1%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집안에서 자녀를 키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모의 연령이 낮은 경우 자녀의 연령 역시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수당 도입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의 결과이다.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0.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자녀를 가정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비취업 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가정에서 키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은 0.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이 401만원 이상 집단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를 가정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201~300만원 혹은 301~400만원에 해당하는 집단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이 401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자녀를 가정에서 키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20)</sup> 이러한 결과는 생활비 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월평균 생활비 수준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이 보다 낮은 생활비 수준 집단에 보다 자녀를 집안에서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월평균 생활비 수준이 101~200만원 혹은 201~300만원인 집단은 월평균 생활비가 301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월평균 생활비가 높은 가구가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녀를 가정에서 키우기 보다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21)</sup>.

<표 3-10> 양육수당 도입시 가정에서 양육 여부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양육수당 도입시 가정에서 양육 여부	예	35.1
	아니오	64.9
	계 (명)	100.0 (7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20) 취업여부는 0.1% 수준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여성이 취업한 경우가 많았다.

21) 취업여부는 1% 수준에서 월평균 생활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생활비 수준이 높은 경우 여성이 취업한 경우가 많았다.

## (2) 양육 수당이 도입될 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유

양육 수당이 도입될 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유로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40.9%)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4.1%)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집에서 키우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겨우 6명에 불과하여 1%에 미치지도 못하는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월 10만원 수준의 양육 수당이 도입될 때 이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여성은 거의 전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양육 수당이 도입될 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유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부표 11>과 같다. 자녀 연령은 0.1%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어릴수록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집에서 자녀를 키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만4~만5세인 경우 보다 낮은 연령대의 자녀보다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만4~만5세 유아를 집에서 키우는 이유는 양육 방식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양육비 수준은 5%에서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로 “보육 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자녀 1인당 양육비 수준이 높다는 것은 소득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보다 높은 질적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lt;표 3-11&gt; 양육수당 도입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유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양육수당 도입 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유	아이가 너무 어려서	40.9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4.1
	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12.3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2.4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9.5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0.8
	계 (명)	100.0 (2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4) 양육수당이 도입되어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한편, 양육 수당이 도입되어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63.4%)와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29.0)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양육수당이 도입되어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부표 12>와 같다. 취업유무는 0.1%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자녀를 보육시설로 보내는 이유로서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여성은 취업여성에 비해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력은 10%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일수록 보다 낮은 학력 수준 집단 보다 “집에서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취업 여성인 경우가 다른 학력집단 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22)</sup>. 가구소득은 10%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401만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 “집에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여성이 취업한 경우가 많아 자녀를 본인이 직접 돌볼 수 없어 보육시설에 맡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성별은 10%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보육시설에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여아의 경우는 남아에 비해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보육시설에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자녀 양육에 있어 남아 선호 사상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남아의 경우 보육시설에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자녀 발달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아 보다 더 질 좋은 보육 시설에 보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아의 경우 시부모 혹은 친정부모 등

22) 취업여부는 학력별에 따라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학원졸업 일수록 취업여성인 경우가 많았다.

이 손자를 맡아 키워주는 경우가 많지만 여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겠다.

<표 3-12> 양육 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 행태 변화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양육수당이 도입되어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3.0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63.4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29.0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4.5
	계 (명)	100.0 (46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5) 양육수당의 활용도

현재 양육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여성의 대부분인 92.9%는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면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비율은 60.8%로 나타났으며 80.1%가 양육 수당을 받은 후에 더 질 좋은 양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양육 수당의 적정 액수로는 16~20만원을 응답한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21~30만원을 응답한 비율은 25.7%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경우 월평균 1인당 자녀 양육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양육 수당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양육수당의 주 사용 용처에 대하여 집단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부표 13>과 같다. 양육비 수준은 5%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지출이 높은 집단 일수록 “아이의 양육을 위해” 양육 수당을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은 5%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평균 소득 401만원 이상 집단 보다 낮은 소득 집단이 양육수당을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월평균 소득 401만원 이상 집단

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생활비의 일부”로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양육 수당을 자녀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박하는 연구 결과이다. 즉,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은 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양육 수당으로 받은 돈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은 굳이 양육 수당을 받지 않고서도 가구 내 소득으로 충분히 양육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 수당을 생활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하겠다. 자녀 연령은 10%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0~만1세 자녀의 경우 연령이 높은 자녀에 비해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양육수당의 도움정도에 대해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부표 14>에 있다. 취업 유무는 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비취업 여성이 취업 여성에 비해 양육 수당이 도움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비취업여성이 취업 여성에 비해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일 수록 양육 수당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하겠다. 가구 소득 역시 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이 양육수당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한편, 자녀 연령은 10%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0~만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 수당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앞서 만0~만1세 자녀의 경우 양육 수당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0~만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 수당을 주로 자녀의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 수당의 도움 정도 역시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육수당을 받은 후 더 좋은 양육을 제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집단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부표 15>에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별다른 집단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0% 수준에서 자녀 성별과 취업 유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양육 수당을 받은 후 더 좋은 양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여성

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서 더 좋은 양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양육수당 수준에 대한 응답을 집단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부표 16>에 있다. 모의 연령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여 모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양육 수당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이 높을 수록 자녀 수와 연령이 높을 가능성이 크며 더 많은 양육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양육수당액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 유무에 따라서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여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31만원 이상이라는 높은 수준의 양육 수당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높은 가구 소득 집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 결과를 미루어 볼때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록 높은 수준의 양육 수당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수준이 5% 수준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401만원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양육수당을 희망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월평균 양육비 수준 역시 10%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양육비 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의 양육수당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자면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은 높은 수준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에 양육 수당도 높은 수준의 급여액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인다.

<표 3-13> 양육 수당의 활용도: 양육 수당 비대상자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양육수당의 주 사용처	생활비의 일부	7.0
	아이의 양육을 위해	92.9
	내 자신을 위해	-
	기타	0.1
양육수당의 도움정도	매우 도움됨	19.2
	조금 도움됨	41.6
	보통	20.5
	별로 도움되지 않음	17.4
	전혀 도움되지 않음	1.3
양육수당을 받은 후 더 좋은 양육 제공	매우 그렇다	33.9
	그렇다	46.2
	보통	16.9
	그렇지 않다	2.6
	매우 그렇지 않다	0.4
양육 수당 적정 액수	10만원	5.3
	11~15만원	12.8
	16~20만원	42.5
	21~30만원	25.7
	31만원 이상	13.4
	기타	0.3
	계 (명)	100.0 (7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6) 취업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취업시 양육수당을 포기하고 직장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12.8%에 해당하는 여성들만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83%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거나(64.3%)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18.7%) 직장을 다니겠다고 응답하였다.

취업 시 양육 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업 유무가 0.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7>). 취

업여성의 경우 95.9%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거나(71.8%)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고 (24.1%) 직장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하여 비취업 여성에 비해 직장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성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이 월 10만원 양육 수당으로 받는 액수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월 10만원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서 현재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한순간에 포기하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력에 따라서도 0.1%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일 수록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취업여성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 실현의 욕구가 높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 연령은 10%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 연령이 어릴 수록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어린 자녀일 수록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것을 희망하는 선호도가 우리 사회에서는 강하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하겠다.

<표 3-14> 취업 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항목	(단위: %, 명)	
	구분	비율
취업 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64.3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2.8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18.7
	기타	4.2
	계 (명)	100.0 (7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7) 희망 양육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희망하는 수준으로 양육수당액수가 지급될 때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53.4%가 취업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4.2%가 취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직장을 포기하기 위한 양육수당 액수로는 31.3%가 30~39만원을 응답하였으며, 28.2%가 50~59만원을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육 수당 급여액으로 목표하고 있는 월 23만원 수준의 양육 수당에 대해서는 10%에 못미치는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하여 양육 수당이 월 23만원으로 확대되어도 여성들의 취업 의사를 저하시키는데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희망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양육 수당이 지급될 때 취업 포기 여부를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부표 18>에 있다. 취업여부는 0.1% 수준에서 집단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의 경우 희망하는 액수로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직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인 것으로 나타나 비취업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도 0.1% 수준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원 졸업이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직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은 0.1%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직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 수준도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취업하고 있으며 특히 임금 수준이 높은 경우 원하는 수준으로 양육 수당이 지급되어도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생활비 수준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생활비 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록 원하는 수준으로 양육수당을 지급 받아도 직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생활비 수준이 높다는 것을 가구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별 차이에서 보여준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육비 수준은 0.5%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출

이 높은 집단일 수록 취업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비 지출이 높은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의 양육수당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장을 포기하기 위한 자녀 1인당 양육수당 액수의 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는 <부표 18>과 같다. 대부분의 경우 직장을 포기하기 위한 자녀 1인당 양육수당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유무는 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 여성의 경우 높은 수준의 양육수당을 희망하는 비율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0.5%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높은 액수의 양육수당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 지출은 10%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록 희망하는 양육 수당액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희망 양육 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희망 양육 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취업을 포기 하겠다	53.4
	취업을 포기 하지 않겠다	44.2
	기타	2.4
	계 (명)	100.0 (717)
직장을 포기하기 위한 자녀 1인당 양육 수당 액수	20만원 이하	3.1
	20~29만원	9.7
	30~39만원	31.3
	40~49만원	8.4
	50~59만원	28.2
	60~99만원	7.6
	100만원 이상	11.7
	계 (명)	100.0 (3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라. 보육료 무상 지원과 양육 수당과의 형평성 관련 분석

정부의 보육 관련 정책이 변경되어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게 될 때는 무료로 보낼 수 있으나 가정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관련된 양육 행태 및 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무상 지원의 혜택은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되는 반면, 재가 양육에 대한 지원인 양육 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양 제도간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보육료 무상 지원과 양육수당의 대상이 일치되도록 함이 마땅하다. 본 분석의 목적은 보육료 지원과 양육 수당의 대상이 달라 질 경우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있다.

### (1) 보육료 무상지원 및 양육수당 부재시 양육 행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지만 가정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80.8%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9.2%가 가정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부표 20>에 나와 있다. 자녀의 연령은 0.1%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 수록 집에서 키운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자녀의 연령이 높을 수록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나 양육수당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양제도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취업 유무는 0.5%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 여성이 취업 여성에 비해 양육 수당을 받지 못해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10%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육비 수준이나 생활비 수준의 결과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경우 보육시설에 보낸다고 응답하여, 보육료가 무상 지원되고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소득수준에 별 상관없이 보육시설로 보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6> 보육료 무상지원 및 양육수당 부재시 양육 행태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보육료 무상지원 및 양육수당 부재시 양육 행태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낸다	80.8
	집에서 키운다	19.2
	계 (명)	100.0 (1,0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2)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는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어서”(51.2%)가 과반수 의견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보육료가 무료니까”라고 응답한 비율이 26.3%라는 적지 않은 비율을 보여, 보육료 무상 지원에 해당하지만 양육 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다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보육료가 무상 지원된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이는 집안에서 충분히 돌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 양육 지원을 위한 양육 수당이 지원되지 않고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만이 이루어 질 때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는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보육료가 무상 지원되지만 가정 내 양육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를 집단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부표 21>에 있다. 취업 유무가 0.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비취업여성은 취업여성에 비해 “보육료가 무료니까”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다고 응답한 여성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양제도가 비형평적으로 운영될 경우, 집에서 자녀를 충분히 돌볼 여력이 있는 비취업 여성들 사이에서 보육료 무상 지원으로 인한 가수요 발생이 보다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학력은 0.5%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학력이 대졸 혹은 대학원 졸업에 비해 “보육료가 무료니까”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대졸 혹은 대학원 졸업은 고졸에 비해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수요가 고학력층 보다는 저학력층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대졸이나 대학원 졸업이 고졸에 비해 취업여성인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취업유무별 분석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의 연구결과라고 판단된다.

양육비 수준과 생활비 수준은 0.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0.5%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결과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양육비 수준, 가구 소득, 생활비 수준이 낮은 집단일 수록 보육료가 무료니까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양제도가 비형평적으로 운영될 경우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가수요는 저소득층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표 3-17>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보육료가 무료니까	26.3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어서	51.2
	집에서 돌볼 수가 없어서	17.4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4.9
	기타	0.2
	계 (명)	100.0 (82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3)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이러한 양제도 간의 비형평성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자녀를 키우겠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제시한 이유로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46.9%)”와 같은 자녀의 특성에 기인한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2.1%)와 같은 개인적인 선호, “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17.3%)와 같은 보육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이유로 지적되었다.

보육료가 무상지원 되지만 가정 내 양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은 경우 그래도 자녀를 가정에서 키우겠다는 이유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부표 22>와 같다. 대부분의 경우 집단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생활비 수준은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활비가 월 301만원 이상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자녀를 집안에서 키우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았다. 반면에 “아이가 어려서”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월평균 생활비 수준이 301만원 이하 집단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 수준이 높다는 것은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사실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록 보육 시설 서비스 질에 대해 높은 수준의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보육시설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신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겠다.

&lt;표 3-18&gt; 집에서 키우는 이유

항목	구분	(단위: %, 명)
		비율
집에서 키우는 이유	아이가 너무 어려서	46.9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2.1
	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17.3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2.6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1.0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
	계 (명)	100.0 (19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4) 양제도 간의 형평성

양제도간의 비형평성에 대해서는 약 80%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업 유무와 학력이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취업 여성이 취업 여성에 비해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비취업여성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에 있어서도 대학원 졸업 보다는 고졸이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졸의 경우 비해 비취업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취업 여부별 차이 분석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3-19> 양제도간의 형평성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시설 이용 지원과 재가 양육 지원 정책간의 형평성	매우 공평하지 않다	28.4
	공평하지 않다	51.3
	보통이다	16.6
	공평하다	3.2
	매우 공평하다	0.4
	계 (명)	100.0 (1,0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주: 시설이용 지원과 재가 양육 지원 정책간의 형평성에 대해서 1명이 “모름”으로 응답함

#### 라. 정책적인 시사점

전화 조사 분석 결과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 수당 정책은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부응하고자 마련되었다는 정책 도입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자녀의 연령이 어리거나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라

고 응답하였으며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거의 전무하였다. 따라서 2009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제도가 도입될 때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일부러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육수당 수급자의 대부분은 자녀의 연령이 어려 보육시설에 보내기를 꺼려하거나 혹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을 희망하는 여성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육 수당은 가정 내에서의 자녀 양육의 질 향상이라는 합목적적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자의 절대 다수가 양육 수당을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양육수당이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 응답은 저소득층의 경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 일부에서 우려되고 있는 것처럼 양육수당이 저소득층에게 지급될 때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양육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양육 수당은 자녀 1인당 월평균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향후 양육수당 급여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월 평균 1인당 자녀 양육비용은 약 2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 지역이 서울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자녀 1인당 양육비용으로 간주한 23만원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양육수당으로 약 28만원에 근접한 수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양육 수당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급여액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여 향후 양육수당 지급액수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양육수당의 정책 체감도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류층에 대한 양육 수당 지원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 결과 양육 수당의 효과성에 대해 저소득층이 상류층에 비해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 양육수당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의 양육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류층의 경우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인하여 월 10만원 수준의 양육 수당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저소득층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상류층의 경우 각 가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육의 질이 월 10만원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양육의 질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위 소득 20%에 해당되는 상류층 자녀는 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은 여성의 취업 의향을 저하시키는데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월 23만원까지 양육수당 급여액이 확대되어도 여성의 취업 의향을 저하시키는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혹은 대리 양육자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고 응답하였다. 양육 수당 대상자의 경우는 취업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는 양육 수당 대상자가 셋째 자녀 이상 가정의 여성으로서 양육과 가사로 인한 부담이 많은 여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30~40대 기혼 여성 중 셋째 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약 10%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양육 수당 도입시 여성들의 취업 의사가 저하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희망하는 수준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될 경우, 적지 않은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노동 시장 환경의 문제와 연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노동인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일하고 있고 임금 수준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는 액수 만큼 양육 수당이 지급될 때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현재의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 여성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여성 고용 상태의 향상 측면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양육 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충분한 급여를 받고 일하게 된다면 커리어 의식의 향상으로 아무리 높은 금액의 양육수당이 지급되어도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원을 졸업하여 학력 수준이 높은 경우 희망하는 액수로 양육

수당이 지급되어도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응답한 여성이 다른 학력군 보다 낮게 나왔다는 본 연구의 조사 결과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여섯째, 보육 시설 서비스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하고 정책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과 양육수당 대상을 일치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대로 보육료 무상지원 대상과 양육 수당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양육 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보육료가 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위험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가수요는 비취업, 저학력, 저소득 여성에게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 제도간의 비형평성에 대하여 80%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불공평하다고 응답하여 현재의 계획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 제2절 양육수당에 대한 시민 의식 분석

### 1. 심층 면접 개요

질적 조사의 다양한 방법 중 심층면접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부터 ‘살아 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음과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양적 연구에 대한 자료수집에서나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근거에 입각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양육자의 ‘살아 있는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을 통해 얻는 결과는 양적조사인 전화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깊게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심층면접은 2008년 10월 27일~11월 26일로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심층면접대상은 서울(대도시)과 전라북도 전주시(중도시), 충청남도 서산시(소도시)로 구분하여



그 지역 거주자 중 3째아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비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 각각 7가구, 4가구, 7가구를 선정하였다. 크기별로 도시를 구분한 이유는 이들 세 지역의 경우 보육관련 시설 및 인프라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생활양식 등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도입될 “양육수당”에 대해서 이미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시행이 되지 않은 지방으로 구분하여 두 지역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함도 있다.

심층면접은 면접관 1~2인(연구자)과 연구대상가구의 보호자 1~2인(부 혹은 모)의 대면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개인면접과 그룹면접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 면접법의 취지를 살리고 참여자의 면접 과정에의 능동적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면접에 임했으며, 면접시간은 1인당 최대 1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공통적인 심층면접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사항(부모 직업, 생활수준, 자녀수, 다자녀를 임신·출산한 이유, 불임수술의 유·무, 다자녀가정의 좋은점)과 모의 취업관련(현재취업여부와 이유, 취업 시작과 퇴사시점, 취업희망여부와 이유, 전 직업과의 지속성과 이유), 다자녀가정(받고 있는 혜택과 체감도, 월평균 자녀 양육비 및 주된 지출 항목), 희망하는 양육수당(수당지급방법과 이유, 적정희망금액과 이유, 양육수당과 관련한 취업의사)을 조사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은 보육시설이용자와 미이용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는 양육수당을 받지 않은 이유와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관한 항목(시설이용종류와 이유, 정보를 얻은 방법, 지원받는 금액과 하루 평균 이용시설, 구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반면에 미이용가구에는 보육시설을 미이용에 관한 항목(미이용 이유, 이용희망 시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lt;표 3-20&gt; 심층면접 내용

조사구분	조사내용
공통적인내용	기본적인사항 - 부모의 직업, 생활수준, 자녀수, 다자녀임신·출산 이유, 불임수술 유·무, 다자녀 가정의 좋은점, 결혼상태, 학력
	모의 취업 - 현재취업여부와 이유, 취업시점과 퇴직시점, 취업희망여부와 이유, 전직업과의 지속성과 이유
	다자녀가정 - 받고 있는 혜택, 정책 체감도와 이유, 월 평균 자녀 양육비 및 주된 지출 항목
	희망양육수당 - 희망하는 수당지급방법과 이유, 희망하는 적정금액과 이유, 여성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사항
	보육시설 -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차이
보육시설이용	보육시설이용 - 이용하는 시설 종류와 이유, 정보를 얻은 방법, 평균 시설이용 시간, 지원시 어려웠던 점
보육시설 미이용	보육시설 미이용 - 미이용 이유, 시설이용희망시기와 이유
양육수당이용	양육수당 이유 - 양육수당을 이용하는 이유, 정보를 얻은 방법, 정책체감도, 사용처
마무리	정부에 희망하는 사항

## 2. 심층 면접 결과

### 가. 보육시설 이용가구 심층면접

#### 1) 기본적인 사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총 9가구로 서울 4가구, 지방 5가구(서산 2가구, 전주 3가구)에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父)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는 총 7가구이고, 비임금 근로자는 총 2가구이며, 모(母)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 2가구를 제외하고는 7가구가

전업주부이다. 면접에 임한 대상자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모(母) 8가구이고, 40대 초반의 부(父)가 1가구이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중산층까지 생활수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보육시설 감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6가구이다.

셋째아 이상 출산의 계획정도는 무응답이 2가구, 계획이 없었지만 임신이 되어 출산한 가구는 5가구가 있고, 자녀를 희망해서 계획하여 출산한 가구가 2가구였다. 셋째아 출산 후 모(母)가 불임수술을 한 경우는 2가구, 부(父)한 경우는 1가구,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2가구, 무응답인 경우는 4가구였다.

다자녀가정이 좋은 점으로는 ‘정서적인 안정감’, ‘형제들 간의 유대관계 형성’, ‘사회성 발달에 좋음’, ‘자기 중심적에서 탈피’, ‘부부간, 자녀간, 부모자녀간에 서로 배움’, ‘가정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 2) 보육시설 이용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2가구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6가구보다 훨씬 적었다. 특히, 지방에서 만난 대상자들은 민간보육시설 이용률이 90%이상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적인 열세와 더불어 접근성이 낮아 영유아의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발달단계에 알맞은 체계적 교육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또래집단과의 교제’와 ‘사회성 발달’ 등 영유아의 측면을 위한 대답이 많았다. 그 이외의 대답으로는 ‘부모의 직장생활을 통한 양육자의 부재’, ‘가정 놀이문화의 한계’, ‘시어머니 등 양육지원으로 인한 고부갈등 발생’, ‘직접 양육시 자녀와의 마찰’ 등이 있었으며, 더불어 ‘모(母)의 우울증’, 과 ‘양육스트레스’, ‘가정생활의 복잡(시어머니 병수발)’ 등이 있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었다.

보육시설 이용 시 정보를 얻은 방법으로는 ‘또래 엄마들’을 통한 비공식적 자원을 통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다양한 정보의 부재와 더불어 함께 정보

검색의 어려움, 공무원의 사무적인 태도 등이 있었다. 또한 지원시 어려웠던 점은 ‘대기기간의 장기화’, ‘까다로운 행정절차’,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부족’, ‘과다한 서류제출’, ‘공무원의 정보 부족’, ‘홍보 문제’와 지방자치단체별 한정된 예산안에서의 지원으로 ‘선착순 지원’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걸 여기저기 ‘나 가난합니다’라고 떠벌리고 다녀야지만 혜택을 주더라고요”(김○○, 서울, 30세)

“엄마들끼리 정보가 돌아서 지원받으려 공무원한테 가면 공무원이 더 모르는 거야. 우리가 가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지 책을 뒤적이면서 알아보더라고요”(변○○, 전주, 31세)

그 중 국·공립시설의 ‘입학결정시기(전년도 11월)와 대상자선정시기(차년도 3월)의 불일치’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가 될 때 민간시설은 이미 입학を 마친 뒤라 어느 곳에도 입학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구립가려고 기다리는 건데 이렇게 다르면 어떻하냐구요. 다행히 원장님이 손을 써주셔서 3년 기다리다가 들어갔어요”(김○○, 서울, 30세)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의견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의견이 구분되었다. 서울에서는 ‘저렴한 비용’, ‘예산대로의 사용’, ‘감시단 활동이 체계적·신뢰’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반면, 지방(서산, 전주)에서는 ‘낙후된 시설’, ‘불친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다닌다는 고정관념’, ‘낮은 질’의 이유로 민간보육시설을 더 선호하였다.

### 3) 모(母)의 취업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모(母)는 ‘자녀양육’, ‘가사 전담’, ‘시어머니의 병간호’ 등의 이유로 미취업 상태이고, 대부분이 ‘경제적 상황’의 이유로 재취업을 원하는 상태였지만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나가서 일해도 결국 월 60-8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런데 애 돌봐준다고 시어머니한테 20만원 드리고, 시설 보내는데 30만원, 차비 10만원 제하면 결국 남는 건 많아야 10-20만원이야. 그러니까 결국 집에서 애키우고, 밥하고, 청소하면서 아껴쓰는 것이 남는거더라구요”(장○○. 서산, 34세)

취업중인 모(母)들도 ‘경제적인 상황’때문에도 일을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자아성취’를 위해서와 더불어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라는 의견도 있었다.

### 4) 다자녀가정의 혜택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그 중 소수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둥이카드’였다. 하지만 주유할인 등 실제 사용 할 수 있는 혜택은 소수이고, 생생내기식 서비스와 고액결제 위주의 혜택 등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렵다고 대답 하였다. 더불어 셋째아 이상 자녀를 통한 혜택도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그 중 소수 가구에서 ‘산후도우미서비스’를 사용하였지만 이 서비스 역시 조건부수급(평일, 오전, 비전문가)이라 불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보육시설 지원도 전액지원에서 50%감면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대답하여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았다.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모 통장으로 매월 입금되는 거예요 양육

수당처럼. 지금은 시설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전혀 지원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요”(김○○, 서울, 31세)

셋째아에게 사용되는 금액으로는 월 30-60만원으로 지출되는 항목으로는 보육시설비, 기저귀·분유 등 생필품비, 병원비 등으로 대답하였다.

#### 5) 희망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7가구는 ‘현금’으로 지원을 희망하였으나 2가구는 ‘서비스’로 희망하였다. ‘현금’을 희망한 가구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부모에게 선택권이 발생한다는 점, 편리함 등의 이유로 응답하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금액으로는 월 15~60만원으로 다양하였는데, 이는 “현실적인 지원 금액”이라고 대답한 대상자와 보육시설비용과 기저귀·분유 등의 생필품비, 의료비 지원까지 포함한 비용을 응답한 대상자 등 다양하였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서비스’를 희망한 가구는 현금보다는 서비스지원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는 적은 현금지원 보다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출산율 제고를 높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9가구 모두 양육수당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6) 정부에 바라는 점

출산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게는 적극적인 국가보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40-50대 여성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 출산 도우미 양성, 산후 조리비 감면 및 다양한 혜택, 셋째아 이상에게는 의료비 무상지원 혹은

감면 서비스를 희망하였다.

양육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부방 지원, 특기적성비 할인 등 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혜택 확대 등을 희망하였으며, 교육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교육 근절을 희망하였고, 문화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연, 영화 등 문화비 지원, 놀이문화 시설확충을 희망 하였다.

“엄마는 일하러 나가야하고 아이혼자 집에 혼자 방치할 수 없으니까 학원 보내고, 학원 보내려니 돈을 벌어야 하고…….돌고 도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해요”(김○○, 서울, 30세)

보육시설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지원 수준 향상을 통한 이용자 부담금 최소화,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국·공립 시설의 양적증가 등을 희망하였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정은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단독주택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새로 건축하기보다는 빌라나 단독주택을 정부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서민에게 공급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의 격차 해소, 세금 및 조세 감면 혜택, 전문직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을 희망하였다.

#### 나. 보육시설 미이용가구 심층면접

##### 1) 기본적인 사항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가구는 총 6가구로 지방(서산 5가구, 전주 1가구)에 거주한다. 이 중 부(父)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는 총 2가구이고 비임금근로자인 경우는 총 4가구이며, 모(母)는 모두 전업주부였다. 면접에 임한 대상자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의 모(母)이었다. 이들의 생활수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중산층 이었다. 셋째아 이상 출산의 계획정도는 계획이 없었지만 임신이 되어 출

산한 가구는 4가구, 계획 하에 임신하고 출산한 가구는 2가구였다. 셋째아 출산 후 부인이 불임수술을 한 가구는 4가구, 남편이 수술을 한 가구는 1가구, 수술을 하지 않은 가구는 1가구 뿐 이었다. 보육시설을 미이용하고 있는 6가구는 모두 다자녀가 행복한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사회성 발달과 배려심,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대답하였다.

## 2) 보육시설 미이용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대상자녀의 낮은 연령’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유: 부담되는 보육료’ 때문이었다. 그 이외에도 ‘주 양육자(母)의 전업가사’와 ‘부모의 자녀 교육관’등을 들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시기에 대해서는 만4-만5세 정도였고, 국·공립시설의 숫자적인 열세와 먼 지역거리로 인하여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이었다.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의견으로는 ‘경제상황이 좋은 부모는 사립을 보낸다는 고정관념: 좀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친절함’, ‘청결’, ‘한 아동에게로의 관심’의 이유로 사립을 선호하였지만, 단점으로 ‘비싼 보육료’를 꼽았다

## 3) 모(母)의 취업

6가구 모(母)는 결혼 후, 첫째아 출산 후, 둘째아 출산 후 등으로 퇴사시점은 달랐지만, 현재 모두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사일을 하고 있다. 5가구의 모(母)는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그 시점에 있어서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하여 ‘셋째아 초등학교 졸업 후’라고 대답하였고, (본인 스스로 보다는 자녀를 위함이 더 큼) 대부분 미용사, 경리, 피아노 교사 등 전직업과의 동일한 직업을 희망하였다.



#### 4) 다자녀 가정 혜택

‘홍보 부족’, ‘정보 검색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별 차이’로 인하여 다자녀 가정으로 받고 있는 혜택은 없다고 하였다. 더불어 셋째아 이상 자녀를 통한 혜택으로는 소수 가정이 ‘출산장려금’의 일시불 현금과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하였지만 둘 다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출산 후 지출되는 금액 중 너무 적은 금액과 동시에 일시적이라는 것과 함께 산모도우미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로인하여 6가구 모두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았다.

“자녀가 둘이면 한 아이한테 쓸 비용이 둘로 나뉘게 되는 거고, 자녀가 셋이면 셋으로 나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이○○, 서산, 38세)

특히, 지방 특성적 조건으로 인하여 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속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지방은 하루에 버스가 몇 대 밖에 안 다녀요. 남편은 출퇴근해야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보통 차가 1~2대는 필수예요. 근데 차가 있어서 대상이 안 되는데.. 말이 되요? 돈이 있어서 차를 사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차를 할부로 차를 사는 건데 말이예요”(김○○, 서산, 29세)

“남편이 농사를 짓고 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그걸 냈더니 대상자에서 제외됐어요”(문○○, 서산, 40세)

셋째아에게 들어가는 월평균 금액으로는 30~40만 원 정도로 지출되는 주요항목으로는 기본생활비(기저귀·분유), 교육비와 간식비라고 대답하였다.

“정부가 준다는 것에 속지 말고 부모의 경제력이 되면 출산하라고 말하죠”  
(이○○, 서산, 33세)

##### 5) 희망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5가구는 ‘현금’을, 1가구는 ‘현금과 쿠폰’을 희망하였다. 이들은 현금의 유용성 부분에서 현금을 희망한다고 대답하였고, 희망하는 금액으로는 월 10~40만원까지 천차만별 이었다. 적은 금액을 희망하는 가구는 ‘현실적인 금액’을 강조하였지만, 높은 금액을 희망하는 가구는 민간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적인 보육시설비용 30만원과 더불어 그 이외의 비용을 더한 금액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지역차를 두고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정부는 양육수당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해야함과 동시에 보육시설 비용은 100% 정부가 보조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더불어 6가구 모두 양육수당이 여성의 경제활동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 6) 정부에 바라는 점

출산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출산(수술)비용의 감면 및 보조, 산후조리비 감면 및 혜택, 40-50대 여성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 산후 도우미 양성, 다자녀 출산에 대한 전 국민 홍보를 원하였다. 양육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는 의료비 지원, 잠시 맡길 수 있는 탁아소 운영을 희망하였으며, 더불어 교육에 관련해서는 국립보육시설의 초등학교대비 등 프로그램지원과 공교육의 발전을 희망하였다. 기타 희망하는 정책들은 전기세, 자동차세, 재산세, 인터넷비, 전화비 등의 체감도가 있는 세금감면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상자 선정 기준, 정책의 지속성과 지방자치별 정책의 평준화를 희망하였다.

## 다. 양육수당지급가구 심층면접

### 1) 기본적인 사항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가구는 총 3가구로 서울에 거주한다. 3가구 모두 부(父)는 임금근로자이며 모(母)는 전업주부이며, 면접에 임한 대상자는 30대 중반의 모(母)이다. 3가구 모두 양육수당 지급 대상자 자녀보다 높은 연령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셋째아 이상 출산의 계획정도는 계획이 없었지만 임신이 되어 출산한 가구는 2가구, 계획 하에 임신하고 출산한 가구는 1가구였다.

### 2)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공통된 이유는 ‘주양육자(母)의 전업가사’와 ‘대상자녀의 낮은 연령’ 그리고 ‘보육시설의 대기시간’ 때문이었다. 그 이외에도 ‘양육자의 교육방법에 대한 신념’, ‘보육시설 이용료 금액에 대한 부담’, ‘임금근로자의 특성상 편법사용 어려움’, ‘엄마의 적은 월급비용보다는 양육수당이 효과적’인 이유로 인하여 양육수당을 지급 받고 있었다.

“애 3-4명 낳은 엄마들은 일 할 수 있는데가 없어요 애들 나이도 어리니까 엄마가 필요할 때이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는데 그러면 알바비용은 너무 적죠. 그럴 바에는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양육수당 받는 게 훨씬 낫죠”(이○○, 서울, 35세)

구립과 사립에 대한 의견으로는 ‘교사의 질이 높음’, ‘교사의 낮은 이직률’, ‘저렴한 이용료’, ‘질 좋은 먹거리’, ‘청결’의 이유로 3가구 모두 구립을 선호하였지만, 단점으로는 ‘대기기간의 장기화’를 꼽았다.

### 3) 모(母)의 취업

3가구의 모(母)는 결혼 후, 둘째 출산 전, 막내 출산 전으로 퇴사시점은 달랐지만, 모두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사일을 하였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2가구의 모(母)는 경제적 상황과 차기년도 남편의 수입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막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점이 재취업의 적정한 시기라고 대답 하였다. 또한 전직업과의 동일한 직업을 희망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 만큼 재교육이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 4) 다자녀가정 혜택

3가구 모두 ‘다둥이 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서민생활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너무 작은 혜택이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셋째아 이상 자녀가 받고 있는 혜택으로는 ‘혜택 받은 것이 없다’ 혹은 ‘양육수당이 전부’라고 대답하여 낮은 정책 체감도를 보이고 있었다.

### 5) 희망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2가구는 ‘현금’을, 1가구는 ‘현물’ 혹은 ‘서비스’를 희망하였다. 현금을 희망한 가구는 모두 저소득층으로 이러한 양육수당이 가계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사용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들은 사실상 현금이 더 좋아요”  
(이○○, 서울, 38세)

반면에, 현금보다는 현물 혹은 서비스를 희망한 가구는 중산층 가구로서 월 10만원의 현금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3가구 모두 양육수당이 여성의 경제활동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양육자의 직업 유·무, 혹은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양육수당의 지원이 없으면 더 빠른 나이에 보육시설에 보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6) 정부에 바라는 점

다둥이 카드 혜택의 증가, 의무교육비 지원, 셋째아 이상 무료 예방 접종, 문화시설 이용 시 무료입장, 다자녀 부모 무료입장 등 3가구 모두 가장 원하는 것은 실제적인 혜택의 증가였다. 또한 어린이 유괴, 납치,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한 치안 강화를 통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교육 관련한 희망사항은 너무나 다양한 학습지 및 놀이기구 등의 범람으로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기를 원하였으며, 공교육 위주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사교육비용의 감소를 희망하였다.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국립시설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이용자 부담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육료 전액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의 확대를 희망하였다. 이 밖에도 양육자로서의 자세, 자녀 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제공과 기존 아동 정책을 유지하면서 신생아를 위한 지원이 신설되어야 할 것을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출산지원의 격차가 심하므로 적정수준에서의 평준화 내지는 편차완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3. 정책적인 시사점

심층 면접 결과, 보육시설의 이용하는 이유는 부모의 직장생활, 모(母)의 우울증, 모의 직업 훈련 등 ‘양육자의 상태’에 의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부모님의 의한 양육지원으로 고부간의 갈등발생, 환자의 병수발 등의 ‘가정적’

인 이유가 있으며,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교육, 발달단계에 알맞은 교육제공, 가정 놀이문화의 한계, 위의 자녀와 적은 터울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직접 양육시 아동과의 마찰 등의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외톨이 문제나 또래 집단과의 교제, 사회성발달 및 성장 등의 직접적인 ‘대상자녀’의 문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낮은 연령, 경제적 이유, 모(母)의 전업가사, 자녀교육관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과 미이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상자의 나이’였다. 심층면접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은 나이가 어릴수록 예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특히 엄마의 영역이라고 여겨오던 양육관습-을 통해 수행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은 대상자의 나이가 만3세~만5세가 된 후 시설을 이용하거나 희망하였다. 더불어 ‘양육자의 부재’도 시설이용과 미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주 양육자의 양 부(父)·모(母)가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하는 경우와 비공식자원의 활용이 낮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것은 양육스트레스와 여성사회참여의 확대와 함께 사교육시장의 발달 및 가구의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 문제로 귀결되었다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 가구들은 양육수당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였지만, 지급방식과 수당 액수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지급방식에 대해서 대부분의 면접 대상들은 현금의 ‘편리성(便利性, convenience)’과 ‘유용성(有用性, usefulness)’으로 인하여 현금을 희망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점으로 어떤 면접대상자는 양육수당 현금 지급 전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면접대상자는 사용처에 대한 공식적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소수의 면접 대상자들은 현금보다는 ‘서비스’나 ‘쿠폰’ 혹은 ‘바우처’ 등으로 이루지기를 희망하였다.

지급의 액수에 대해서는 월 10~6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는데, 이러한 응답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지급하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월 10~15만원)과 실제 지출되고 있는 금액(월 20~60만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현금뿐 아니라 서비스, 쿠폰,

바우처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응답한 금액이다. 현재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처는 한 달분의 기저귀와 분유이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반드시 자녀 양육을 위해서 라기 보다 생활비의 일부로 사용된다고 응답하였다.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정에서 지출되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여 양육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목적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보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은 시간제 보육, 야간 보육, 계절 보육 등 특별한 보육의 활성화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다양한 근무시간의 변경, 가정 내 다양한 체계들간의 활동 등에서 꼭 필요하지만 현실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을뿐더러,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공연장 입장시 자유로운 관람을 원하거나 나이제한으로 입장이 불가능할 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때 관람가능한 자녀들만 입장시키면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려야하며 혹은 부모 중 한 사람만 입장할 수 밖에 없어 몇 번 반복되면 가족들이 아예 문화생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육서비스는 사회적 욕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하여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보완과 보충을 해주어야 한다.

이 외에도 면접대상자들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들의 욕구가 있었다. 특히 아동의 의료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의 질 높은 프로그램, 문화비 지원과 놀이문화 시설 확충 등이 있었다. 특히 정책의 지속성과 지방자치단체별 격차 수위 조절에 관한 것은 면접 대상자들의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었다. 이는 아래의 표를 통해 정리하였다.

<표 3-21> 심층면접 결과: 희망하는 양육 관련 정부 정책

구분	구체적 내용
출산	출산(수술)비용의 감면 및 보조 40-50대 여성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 출산도우미 양성 산후조리비 감면 및 혜택
양육	의료비 지원 탁아시설 운영
교육	공교육의 발전 국·공립보육시설의 초등학교 대비 프로그램 지원 다자녀가정의 공부방·특기적성비의 지원 학습지, 장난감 등 정부지준 제시
문화	다자녀가정의 공연,영화,국립시설 감면 및 지원 놀이시설 문화 확충
기타	전기세, 자동차세, 재산세, 인터넷비, 전화비 등의 세금감면 다등이카드 실제 사용 혜택 보육시설의 정보제공 국·공립보육시설의 양적 증가 여성의 재취업기회 교육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상자 선정 정책의 지속성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양육관련 정책의 수위조절 양육수당관련 부모교육



## 제4장 양육수당 정책의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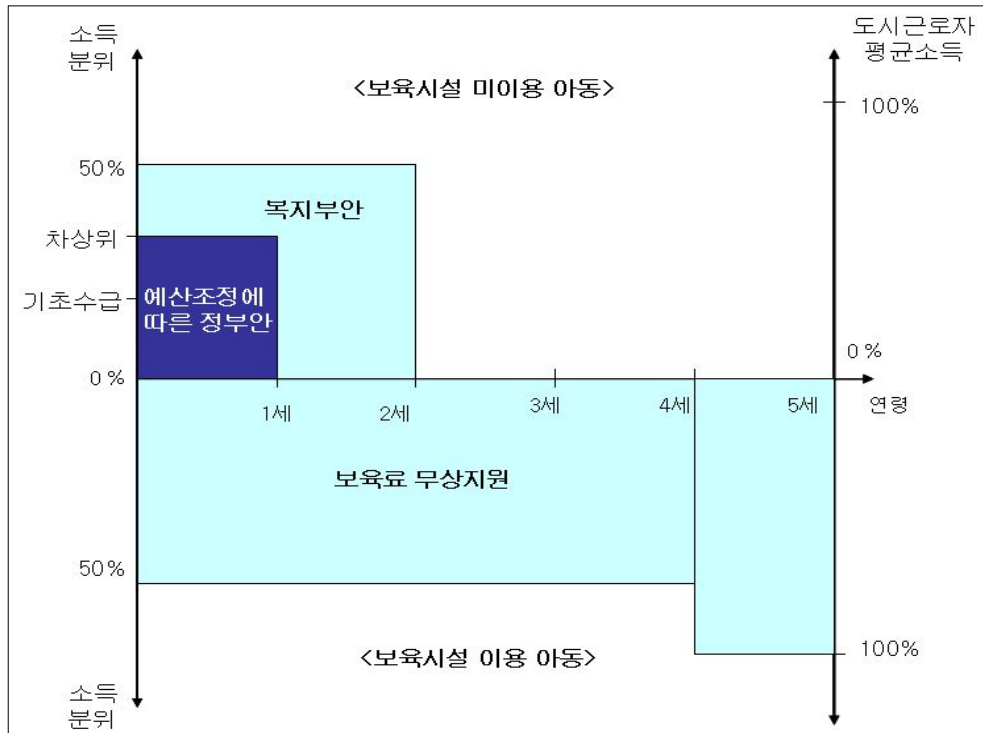
### 제1절 양육수당 정책의 목표와 비전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기초수급과 차상위 계층 만0~만1세 영아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무상 지원의 범위를 만0~만4세는 소득하위 50%까지 지원하고 만5세는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00%까지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0~만2세 영아에게 월 10만원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정부 간의 예산 조정에 따라 기초수급과 차상위 계층 만0 ~ 만1세 영아에 대해 월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표 4-1> 2009년도 보육료 무상 지원과 양육수당 정책 정부 계획

		2008	2009	
보육료 무상지원	소득	기초수급+차상위	소득하위 50%	도시근로자평균 소득100%
	연령	만0세~ 만5세	만0세 ~ 만4세	만5세
	액수	보육료 전액	보육료 전액	
양육수당		미시행	예산조정에 따른 정 부안 (※2009.7시행)	복지부안
	소득		기초수급 + 차상위	소득하위 50%
	연령		만0세 ~ 만1세	만0세 ~ 만2세
	액수		월 10만원	월 10만원

[그림 4-1] 2009년도 보육료 무상 지원과 양육수당 정책 정부 계획



양육수당은 현재 정부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정책이 주로 시설에 보내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대부분의 영유아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있어 시설에서 보육되는 영유아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sup>23)</sup>. 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영유아 보호자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이유에 앞서 아직은 우리나라 보육시설이 양과 질 측면에서 불충분하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다

23) 현재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아 자녀, 입양 자녀 등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해서만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육수당이 도입되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정부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지만, 양육 수당 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근본 이념은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아동복지법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에 그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듯이, 양육수당도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측면에 그 근본적인 이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수당 정책의 취지를 우리나라에서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천명하고 있는 기본법인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기초로 모색해 보기로 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본법으로서 양육 수당 정책의 근본 취지를 참고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보육”과 관련된 것으로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수당과는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sup>24)</sup>. 하지만,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그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논하는데 전용함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육료 지원과 같은 체계 안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육수당 지원의 취지, 이념 및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보육료 지원과 유사한 맥락에서 찾아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의 목적을 “영유아를 가정 내에서 건전하게 양육하여 건

24)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2에서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미래 사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양육수당의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로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로 하였다. 양육수당의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의 대상인 “영유아”와 동일하게 한 이유는 양육수당이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 대상 연령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는 양육자로부터의 양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령인 동시에 이 시기의 건전한 양육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동 시기의 영유아에 대한 건전한 양육은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양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책임이 강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향후 양육수당이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양육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의 형태인 아동수당으로 확대될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인 18세 까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양육수당의 이념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양육수당은 영유아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육수당에 대한 책임은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이 국가 미래에 직결된다는 철학 하에 영유아의 보호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양육수당에 대한 책임은 첫째,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을 진다, 둘째, 영유아의 보호자는 영유아를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제시하였다.

<표 4-2> 양육수당의 취지·대상·이념·책임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취지	영유아를 가정 내에서 건전하게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양육수당의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인 만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로 한다	제2조의1(대상) “영유아”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제2조의1 “아동”이라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념	①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양육수당은 영유아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양육되어야 한다	제3조(보육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이념)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을 진다 ②영유아의 보호자는 영유아를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절 양육수당 정책의 시나리오

### 1.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에 시행되는 양육수당 정책 내용을 기초로 양육수당의 본질적인 목적과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2009년도에 시행할 양육수당 정책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양육수당의 목적과 이념을 구현하기에는 정책 대상자와 급여 수준에서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어 향후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도입 초기의 예산상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영유아를 연령, 소득기준,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확대하는 네 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령을 확대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양육 수당의 대상이라고 정의한 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이유는 현행 보육료 지원 대상이 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육 수당이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제시하였듯이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시기는 인간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동 시기의 양육의 질은 한 개인의 자질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 자본의 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건전한 양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의 예산상의 한계를 감안하여 2009년에 만0~만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후 연도별로 각 1세씩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제시하였다. 양육수당의 대상을 나이가 어린 영아부터 시작하여 유아로 확대하는 이유는 나이가 어린 자녀 일수록 보육시설 보다는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수당에 보다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제한된 예산으로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소득기준은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 이념 중의 하나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

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서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영유아가 보호자의 재산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양육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는 바, 보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할 때 양육수당 지원을 차상위 까지만 지원하는 것은 보호자의 재산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해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양육 수당의 대상을 보육료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육 수당 정책 시행 초기에 부딪칠 예산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영유아 양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한다.

급여액은 양육수당이 영유아의 가정내 건전한 양육을 도모한다는 정책의 이념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한다. 양육수당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충실한 양육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보육비와 교육비를 제외하고 자녀 1인당 소요되는 기본적인 월평균 의식주 비용을 월평균 급여액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양육수당의 이념인 “양육수당은 영유아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의 내용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함이다. 다만 시행초기의 예산상 제약을 감안하여 2009년도 지원액수인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기로 한다.

<표 4-3> 양육수당 지원 확대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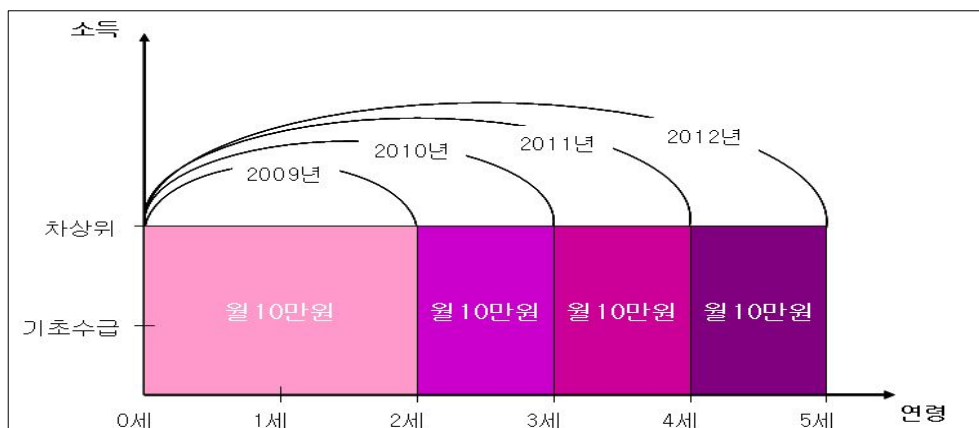
구분	2009년도시행	확대범위	근거
연령	만0~만1세	만0~만5세	- 만0~만5세 기간은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 - 보육료 지원과 대상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형평성 유지
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육료 무상 지원대상자와 동일하게 확대	-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의 형평성 도모 - 영유아가 보호자의 재산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국가 지원을 받도록 함
급여액	월 10만원	1인당 월평균 의식주 비용	- 가정내에서 영유아에 대한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을 지원함

&lt;표 4-4&gt; 양육 수당 시나리오별 주요 내용

구분		2009	2010	2011	2012
시나리오 I	소득	기초수급+차상위			
	연령	만0~만2세	만0~만3세	만0~만4세	만0~만5세
	급여액	월 10만원			
시나리오 II	소득	기초수급+차상위			
	연령	만0~만2세	만0~만3세	만0~만4세	만0~만5세
	급여액	월 10만원	월 15만원	월 20만원	월 23만원
시나리오 III	소득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80%
	연령	만0~만2세	만0~만3세	만0~만4세	만0~만5세
	급여액	월 10만원			
시나리오 IV	소득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80%
	연령	만0~만2세	만0~만3세	만0~만4세	만0~만5세
	급여액	월 10만원	월 15만원	월 20만원	월 23만원

이러한 방향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년~2012년까지 양육 수당 정책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연령 확대 안으로서 소득기준과 급여액수는 2009년도 정부안으로 고정하고 영유아의 연령을 매년 1세씩 확대하는 방안이다. 즉, 2009~2012년 기간 동안 지원 대상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한정하고 급여를 월 10만원 지원하며, 영유아 연령을 2009년 만0~만2세에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도별로 1세씩 확대하여 2012년에는 만0~만5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시나리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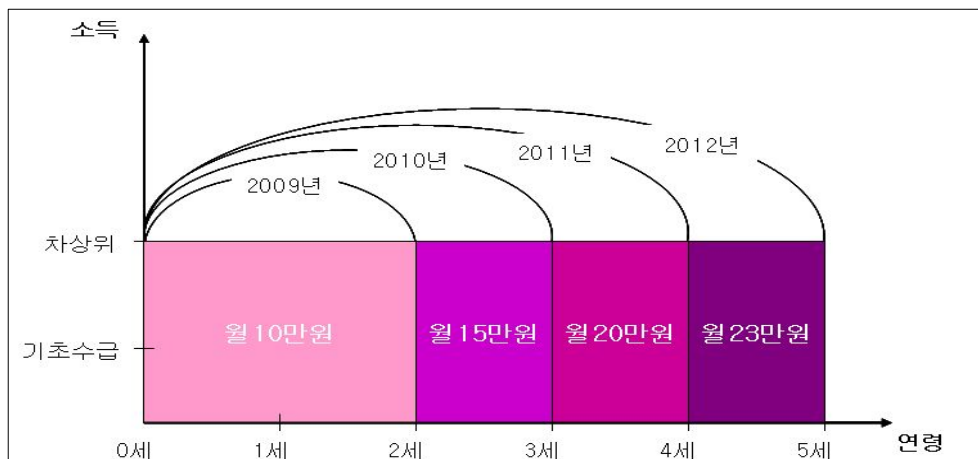
[그림 4-2] 양육 수당 시나리오 I: 연령별 확대 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소득 기준만 2009년도 정부 계획안으로 고정하고 연령과 급여 수준을 확대한 안이다. 2009~2012년 기간 동안 지원 대상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한정하고 영유아 연령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2009년에 만0~만2세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1세씩 확대하여 2012년에는 만0~만5세 영유아에게 지원한다. 급여 액은 김승권(2006)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월 평균 만0~만5세 영유아 1인에게 지출하는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21만원을 2008년 가격으로 환산한 23만원을 2012년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25)</sup>. 2009년 10만원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5만원씩 확대하여 2010년에 15만원, 2011년에 20만원, 2012년에 23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4-3] 양육 수당 시나리오 II: 연령 및 급여 수준 확대 안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양육수당 급여액을 2009년도 정부안인 월 10만원으로 고정하고 연령과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시나리오이다. 영유아 연령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2009년에 만0~만2세를 기초로 연도별로 1세씩 확대하여 2012년에는 만0~만5세 영유아에게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확대해

25) 지원액수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한 명목 가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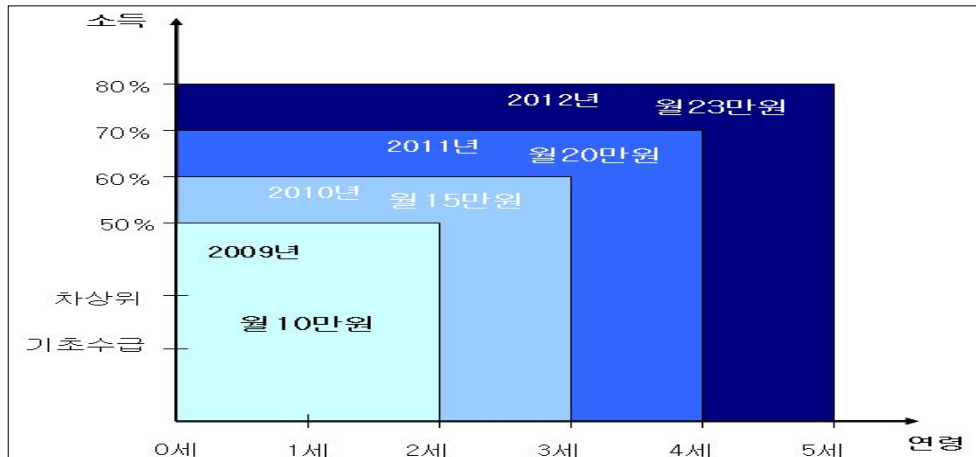
나간다. 정부는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을 2009년 소득하위 50%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10%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도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2009년 소득하위 50%, 2010년 소득하위 60%, 2010년 소득하위 70%, 2011년 소득하위 80%로 확대한다.

[그림 4-4] 양육 수당 시나리오 III: 연령 및 소득기준 확대 안



네 번째 시나리오는 연령, 소득기준, 급여액을 모두 확대하는 안이다. 영유아 연령은 2009년에 만0~만2세를 기초로 연도별로 1세씩 확대하여 2012년에는 만0~만5세 영유아에게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2009년 소득하위 50%, 2010년 소득하위 60%, 2010년 소득하위 70%, 2011년 소득하위 80%로 확대한다. 급여액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월 23만원을 2012년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급여 수준을 확대해 나간다. 2009년 10만원 지원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5만원씩 증가하여 2010년에 15만원, 2011년에 20만원, 2012년에 23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4-5] 양육 수당 시나리오 IV: 연령, 소득기준, 급여 수준 확대 안



## 2. 대상자 수와 예산 추계

### 가. 추계에 사용한 기초 자료

본 절에서는 시나리오별로 대상자수와 예산액을 추계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추계에 사용한 기초 자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별 대상자수와 예산액을 추계하기 위해서 먼저 2009~2012년 기간 동안의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수를 추계하였다. 동 기간 동안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비율이 2007년도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2007년도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비율을 2009~2012년 아동인구추계에 적용하여 2009~2012년 기간 동안의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수를 추정하였다. 2009~2012년 아동인구추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7년도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통계 2008” 자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연보 2007” 자료를 활용하였다<sup>26)</sup>.

양육 수당 예산액의 국고와 지방비 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2009~2012년 기간 동

26) <표 1-1> 참조

안 서울과 지방의 각 연도별 영유아 수를 추계하였다. 2009~2012년 서울과 지방의 영유아수 비율이 2007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2007년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2009~2012년 서울과 지방의 영유아수를 추계하였다. 한편 양육수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하여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 수당 대상자 수의 10%가 추가적인 수요로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이를 대상자수 추계치에 추가하였다. 한편, 양육 수당 정책이 2009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2009년은 반년도 예산액으로 추계 하였다.

&lt;표 4-5&gt; 영유아 인구 추계 (2009~2012)

(단위: 명)

연령	2009	2010	2011	2012
만0세	443,017	438,169	432,164	425,454
만1세	443,528	439,839	435,030	429,072
만2세	444,718	442,457	438,779	433,984
만3세	437,813	443,947	441,691	438,022
만4세	447,843	437,053	443,178	440,928
만5세	474,578	447,025	436,256	442,373

자료: 통계청(2008) KOSIS 장래인구추계

&lt;표 4-6&gt;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인구 추계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만0세	375,031	370,927	365,844	360,164
만1세	319,780	317,120	313,653	309,358
만2세	224,780	223,638	221,779	219,355
만3세	133,617	135,489	134,800	133,681
만4세	102,557	100,086	101,489	100,973
만5세	69,010	65,004	63,438	64,327

&lt;표 4-7&gt; 서울과 지방의 영유아 인구 및 비율

(단위: 명, %)

	계	영유아 인구		영유아 비율	
		서울	지방	서울	지방
계	2,810,293	530,922	2,279,371	0.189	0.811
만0세	470,258	93,087	377,171	0.198	0.802
만1세	446,103	86,849	359,254	0.195	0.805
만2세	433,946	81,881	352,065	0.189	0.811
만3세	472,617	89,123	383,494	0.189	0.811
만4세	492,842	90,761	402,081	0.184	0.816
만5세	494,527	89,221	405,306	0.180	0.820

자료) 통계청(2008) 주민등록인구 2007

## 나. 시나리오별 추계결과

시나리오 I 과 시나리오 II는 양육 수당의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까지만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두 시나리오의 대상자 수는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유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두가지 추계 방식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방식에서는 새로마지 플랜 2010에서 제시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만0~만5세 영유아의 비율 15%를 적용하였다. 두 번째 방식에서는 2007년도 통계청 가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빈곤 아동 비율을 추계한 후 여기에서 추계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 하는 아동 비율을 적용하였다. 2007년도 가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별 빈곤 아동 비율을 추계한 결과, 만0~만5세 연령대에서 만4세를 제외하고 모두 1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7년도 가계조사 자료에 기초한 연령별 빈곤 아동 비율을 가지고 추계한 대상자 수는 새로마지 플랜에서 제시한 15%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대상자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4-8&gt; 새로마지 플랜 2010: 차등보육·교육비 지원계획

(단위: %)

	기준	아동 비율	지원 비율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계층	11.5	100	100	100	100	100
3층	평균소득 50%	10.0	70	80	80	80	80
4층	평균소득 70%	25.0	40	50	60	60	60
5층	평균소득 100%	20.0		20	30	30	30
6층	평균소득 130%	10.0				30	30

자료: 관계부처합동 (2006)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새로마지플랜 2010

&lt;표 4-9&gt; 연령별 빈곤 아동 비율 추계치

(단위: %)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비율	10.60	10.25	13.30	12.00	15.29	13.25

주: 통계청 가계조사 (2007)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빈곤아동은 기초수급과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아동임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아동 비율 15%를 적용한 경우, 시나리오 I 과 시나리오 II 에서 2009년도 대상자 수는 약 15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연령별로 대상 영유아수를 확대함에 따라 2010년에는 약 17만명 (전년대비 13.87% 증가), 2011년에는 약 18만 7천명(전년대비 8.63% 증가), 2012년에는 약 19만 6천명 (전년대비 4.42% 증가)으로 지원 대상 영유아수는 확대된다. 지원 대상 영유아수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높은 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감소한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점점 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많아 보육 시설 미이용 영유아수의 증가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양육수당 도입 초기 단계에서 대상 연령을 확대함에 따라 영유아수가 증가하나 연차별로 그 증가 비율은 감소할 것을 지적해 준다. 연령별 아동 빈곤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15% 비율을 적

용한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대상 연령을 확대함에 따라 대상자 수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산 추계는 정부 계획에 따라 서울의 경우 국고에서 20% 지원하며 나머지 80%는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서울 이외 지역의 경우 국고에서 50%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양육수당 제도가 2009년 7월부터 도입됨으로 2009년도 예산은 6개월분 예산으로 추계하였다.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15%로 가정한 경우, 2009년에 약 91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고 402억원, 지방비 508억원), 연령별 아동 빈곤율을 적용한 경우 2009년에 약 676억원 (국고 299억원, 지방비 377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까지 대상 연령을 만5세까지 확대했을 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15%로 가정한 경우 약 2,352억원 (국고 1,040억원, 지방비 1,312억원)이 소요되며, 연령별 아동 빈곤율을 적용한 경우 약 1,836억원 (국고 812억원, 지방비 1,02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연령별 아동 빈곤율을 적용한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5%를 적용한 경우 보다 대상자수가 적게 추계되었기 때문에 예산 추계액 역시 적은 규모로 추계되었다. 양육수당이 2009년 7월부터 도입되어 6개월분을 지급하는 2009년과는 달리 2010년 부터는 12개월 분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010년 예산은 2009년 예산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다. 연도별로 동일한 양육 수당액 월 1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예산액 증가율은 대상자수 증가율과 동일한 것을 보이고 있다.

<표 4-10> 대상자 수와 예산 추계: 시나리오 I (연령 확대 안), 차상위 15% 적용  
(단위: 명, 원)

		2009	2010	2011	2012
대상자수	만0세	61,880	61,203	60,364	59,427
	만1세	52,764	52,325	51,753	51,044
	만2세	37,089	36,900	36,593	36,194
	만3세		22,356	22,242	22,057
	만4세			16,746	16,661
	만5세				10,614
	계	151,733	172,784	187,698	195,997
	증가율		13.87%	8.63%	4.42%
예산	국고	40,206,274,007	91,617,377,009	99,584,266,020	104,035,678,092
	지방비	50,833,330,911	115,723,139,814	125,653,568,249	131,160,123,817
	계	91,039,604,918	207,340,516,824	225,237,834,270	235,195,801,908
	증가율		127.75%	8.63%	4.42%

<표 4-11> 대상자수와 예산 추계: 시나리오 I (연령 확대 안), 연령별 아동빈곤율 적용  
(단위: 명, 원)

		2009	2010	2011	2012
대상자수	만0세	43,729	43,250	42,657	41,995
	만1세	36,055	35,755	35,364	34,880
	만2세	32,885	32,718	32,446	32,092
	만3세		17,885	17,794	17,646
	만4세			17,069	16,983
	만5세				9,376
	계	112,669	129,608	145,331	152,971
	증가율		15.03%	12.13%	5.26%
예산	국고	29,862,281,174	68,740,279,209	77,136,633,015	81,232,693,952
	지방비	37,739,268,328	86,789,537,082	97,260,625,815	102,332,575,838
	계	67,601,549,502	155,529,816,291	174,397,258,830	183,565,269,790
	증가율		130.07%	12.13%	5.26%

시나리오 II는 시나리오 I 과 대상수는 동일하나 연도별로 급여액을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시나리오 I 에 비해 급여액 확대 비율 만큼 증가한다. 2009년의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I 과 예산액은 동일하다. 2010년에는 양육수당 급여액을 월 15만원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I 과 비교하여 예산액이 1.5



배 증가한다. 2011년에는 양육 수당 급여액을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양육수당 급여액을 월 23만원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I 과 비교하여 예산액이 각각 2배와 2.3배 증가한다.

<표 4-12> 대상자수와 예산 추계: 시나리오Ⅱ(연령 및 급여수준 확대 안), 차상위 15% 적용  
(단위: 명, 원)

		2009	2010	2011	2012
대상자수	만0세	61,880	61,203	60,364	59,427
	만1세	52,764	52,325	51,753	51,044
	만2세	37,089	36,900	36,593	36,194
	만3세		22,356	22,242	22,057
	만4세			16,746	16,661
	만5세				10,614
	계	151,733	172,784	187,698	195,997
	증가율		13.87%	8.63%	4.42%
예산	국고	40,206,274,007	137,426,065,514	199,168,532,041	239,282,059,610
	지방비	50,833,330,911	173,584,709,721	251,307,136,498	301,668,284,778
	계	91,039,604,918	311,010,775,236	450,475,668,539	540,950,344,389
	증가율		241.62%	44.84%	20.08%

<표 4-13> 대상자수와 예산 추계: 시나리오 Ⅱ (연령 및 급여수준 확대안), 연령별 아동빈곤율 적용  
(단위: 명, 원)

		2009	2010	2011	2012
대상자수	만0세	43,729	43,250	42,657	41,995
	만1세	36,055	35,755	35,364	34,880
	만2세	32,885	32,718	32,446	32,092
	만3세		17,885	17,794	17,646
	만4세			17,069	16,983
	만5세				9,376
	계	112,669	129,608	145,331	152,971
	증가율		15.03%	12.13%	5.26%
예산	국고	29,862,281,174	103,110,418,814	154,273,266,031	186,835,196,090
	지방비	37,739,268,328	130,184,305,623	194,521,251,629	235,364,924,427
	계	67,601,549,502	233,294,724,437	348,794,517,660	422,200,120,517
	증가율		245.10%	49.51%	21.05%

시나리오 Ⅲ과 시나리오 Ⅳ는 대상자를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2009년도에 하위소득 50%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연도별로 10%씩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수는 2009년 약 50만 5천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보다 약 3~4배 정도 증가한 규모를 보인다. 2010년에는 약 69만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보다 약 4~5배 증가한 규모이며, 2011년에는 약 88만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보다 약 5~6배 증가한 규모이다. 2012년에는 약 105만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보다 약 5~6배 증가한 규모이다. 대상자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0년에는 36.65%, 2011년에는 26.74%, 2012년에는 19.34%를 보인다. 시나리오 Ⅰ과 시나리오 Ⅱ와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대상자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감소하기는 하나 시나리오 Ⅰ과 시나리오 Ⅱ에 비해 높은 증가비율을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Ⅲ과 시나리오 Ⅳ에서는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액도 상당규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Ⅲ에서는 2009년 총 3,034억원 (국고 1,340억원, 지방비 1,694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총 1조 2,544억원 (국고 5,549억원, 지방비 6,995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시나리오 Ⅳ는 시나리오 Ⅲ에서 급여액수를 연도별로 각각 2010년 15만원, 2011년 20만원, 2012년 23만원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2009년에는 시나리오 Ⅲ과 예산 추계액이 동일하나 시나리오 Ⅲ보다 각각 2010년에는 1.5배, 2011년에는 2배, 2012년에는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2012년에는 총 2조 8,851억원(국고 1조 2,762억원, 지방비 1조 6,089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4-14> 대상자수와 예산 추계: 시나리오 III (연령 및 소득기준 확대 안)  
(단위: 명, 원)

		2009	2010	2011	2012
대상자수	만0세	206,267	244,812	281,700	316,944
	만1세	175,879	209,300	241,513	272,235
	만2세	123,629	147,601	170,770	193,032
	만3세		89,423	103,796	117,639
	만4세			78,146	88,857
	만5세				56,608
	계	505,776	691,135	875,925	1,045,315
	증가율		36.65%	26.74%	19.34%
예산	국고	134,020,913,356	366,469,508,038	464,726,574,762	554,856,949,821
	지방비	169,444,436,370	462,892,559,257	586,383,318,496	699,520,660,356
	계	303,465,349,726	829,362,067,295	1,051,109,893,258	1,254,377,610,177
	증가율		173.30%	26.74%	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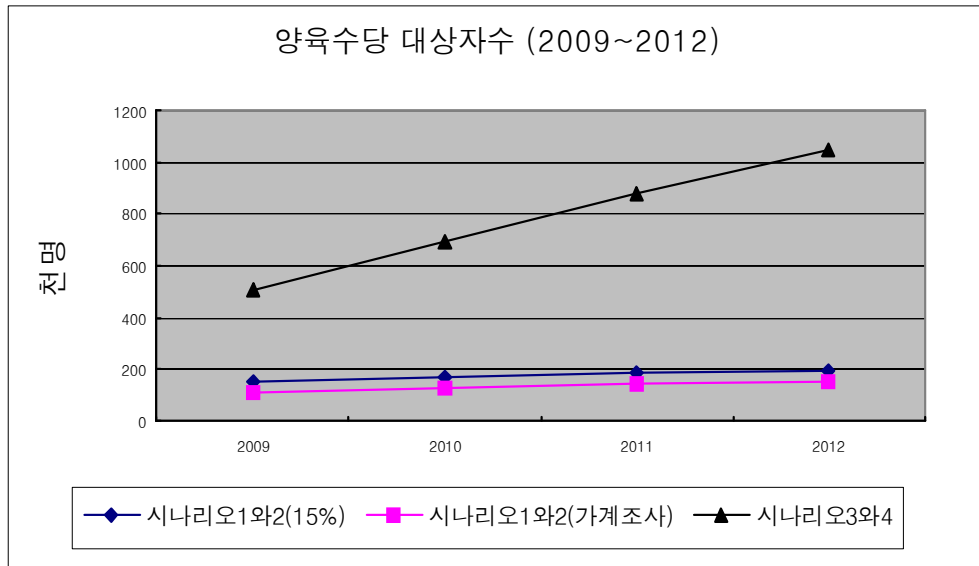
<표 4-15> 대상자수와 예산 추계: 시나리오 IV (연령, 소득 기준, 급여 수준 확대 안)  
(단위: 명, 원)

		2009	2010	2011	2012
대상자수	만0세	206,267	244,812	281,700	316,944
	만1세	175,879	209,300	241,513	272,235
	만2세	123,629	147,601	170,770	193,032
	만3세		89,423	103,796	117,639
	만4세			78,146	88,857
	만5세				56,608
	계	505,776	691,135	875,925	1,045,315
	증가율		36.65%	26.74%	19.34%
예산	국고	134,020,913,356	549,704,262,057	929,453,149,524	1,276,170,984,589
	지방비	169,444,436,370	694,338,838,885	1,172,766,636,992	1,608,897,518,818
	계	303,465,349,726	1,244,043,100,942	2,102,219,786,516	2,885,068,503,407
	증가율		309.95%	68.98%	3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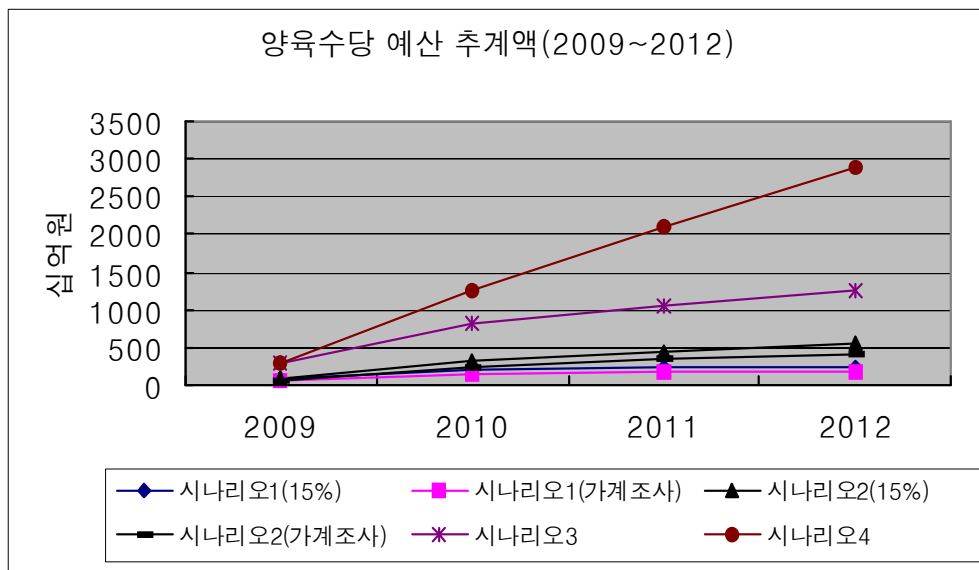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대상자 수와 예산 추계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수는 시나리오 I 과 시나리오 II에서 2012년까지 약 15만명 수준으로 별다른 큰 증가를 보이지 않는다. 시나리오 III과 시나리오 IV의 경우 2009년 약 50만명 수준이었던 대상자 수가 점차 확대되어 2012년에는 1백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시나리오 III과 시나리오 IV의 경우 대상자 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영유아가 양육수당의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시나리오 I 과 시나리오 II의 경우 양육수당의 대상이 연령별로 확대하기는 하나 차상위 계층에 한정되어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 매우 한정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예산 추계액의 경우 시나리오 I 에서는 2012년까지 약 2천 억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시나리오 II에서는 2012년까지 시나리오 I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인 5천 억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III과 시나리오 IV의 경우 2009년에 예산이 약 3천 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나리오 I 과 시나리오 II와 비교하여 약 3~4배 더 높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상자 수와 급여액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에는 시나리오 III이 약 1조 3천 억원, 시나리오 IV가 약 2조 9천 억원으로 시나리오 I 과 비교하여 각각 약 5~7배와 약 12~15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양육 수당 대상자수 추계 (2009~2012)



[그림 4-7] 양육 수당 예산액 추계 (2009~2012)



## 다. 시나리오별 특징 및 장단점 분석

시나리오 I은 양육수당 대상을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의 양육을 원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 연령은 연차별로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확대함으로써 가정 내 양육에 대해 수요가 높은 연령대인 영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하고 있다. 양육수당 도입 초기에 연령이 어린 영아에게 우선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정책적인 수요에 부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상 연령을 연도별로 1세씩 확대함에 따라 양육 수당을 단절적으로 지원 받는 영유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7월부터 만2세까지 양육 수당을 지원한다고 할 경우, 2007년 8월 1일생인 영유아는 2009년 7월 31일까지 만2세이므로 2009년 7월 한달간만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2010년 만3세까지 양육수당을 확대할 때 동 영유아는 2010년 7월까지 만3세이므로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만 양육 수당을 받게 되고 2010년 나머지 5개월간은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2011년과 2012년에도 동일한 현상인 발생하게 된다.

[그림 4-8] 양육수당 연령 확대에 따른 단절적인 지급 문제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8년 8월 1일생 연령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양육수당 지급월	-	-	-	-	-	7월 지급	-	-	-	-	-	-	1~7월 지급	-	-	-	-	-	1~7월 지급	-	-	-	-	-	1~7월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양육수당 대상자	-	-	-	-	-	만0~만2세						만0~만3세						만0~만4세						만0~만5세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러한 단절적인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보육 연령을 기준으로 당해 3월 1일에 양육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되면 그 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양육수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보육료 지원의 경우, 당해 3월 1일에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 되면 그 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경우 보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양육 수당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시설을 다니게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반대로 보육시설을 다니다가 시설을 다니지 않게 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양육 수당 전달 체계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시나리오 I에서는 지원 금액을 월 10만원으로 한정하여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지 않으며 영유아 양육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동시에 소득 형평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본 시나리오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출생 순위별로 양육수당액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예를 들면 첫째아 월 10만원, 둘째아 월 12만원, 셋째아 월 14만원) 양육 수당을 출산율 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도 있다.

시나리오 I의 장점은 제한된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정책 체감도가 큰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영아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에게 까지 양육 수당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단점은 첫째,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과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형평성 확보라는 양육수당의 근본 취지가 희미해질 가능성 있다. 이렇게 양 제도간의 대상이 다를 경우, 양육수당 대상은 아니지만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에 해당될 때 가정에서 충분히 양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즉, 보육시설 서비스에 대한 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희망하는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셋째,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 액

수는 가정 내에서 영유아에 대한 충실한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준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상당히 미흡한 액수이다. 이러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액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조차 반영되지 못해 정책 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연차별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 II는 양육수당 대상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층에게 한정하고 대상 연령을 연차별로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확대한다는 면에서는 시나리오 I과 동일하다. 시나리오 II에서는 급여수준을 2009년 월 10만원에서 연차별로 5만원씩 증가시키며 2012년에는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양육비용으로 추정된 23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나리오 II의 특징은 양육수당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여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요보호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했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시나리오 II의 장점은 첫째, 양육수당 액수를 현실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 중산층과의 소득 형평성을 더욱 보완할 수 있다. 둘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육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양육수당 액수를 현실화 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단점은 수당액수가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저해하지 않을 한도 내에서 양육수당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3세 이상 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 대부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경우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지적될 수 있다.

시나리오 III은 양육수당 대상의 소득기준을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일치시켜 양 제도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육료 무상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에 동시에 대상자가 되며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의 소득기준은 상호 동일한 소득기준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상 연령은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와 동일하



게 연차별로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확대하고 있으며 급여수준 역시 월 10만원으로 일정하게 지급한다. 시나리오 Ⅲ은 양육수당 정책의 보편성을 지향으로 하는 시나리오로서 2012년에는 최소소득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시나리오 Ⅲ의 장점은 첫째, 양육수당이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양육 수당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된다. 둘째, 현재 저소득층 중심의 양육지원에서 보편적 성격을 가진 양육 지원으로 확대됨으로써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보육료 지원 혹은 양육수당 지원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영유아 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넷째, 보육료 무상지원과 양육 수당 대상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육시설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만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할 수 있다. 단점은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산층 이상 가정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의 소득 형평성 제고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월 10만원 양육수당액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나리오 I 과 II에 비해 그 효과가 낮을 수 있다.

시나리오 IV는 소득 기준을 연차별로 보육료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확대하고 대상 연령을 연차별로 영아에서 유아까지 포함시키도록 확대한다는 면에서는 시나리오 Ⅲ과 동일하다. 급여수준은 2009년 월 10만원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5만원씩 증가시키며 2012년에는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양육비용으로 추정된 23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나리오 IV는 양육수당의 보편적 지원 형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여 선진국형 양육지원 제도를 지향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양육수당 지원 액수를 확대할 때 여성 노동력 활용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양육수당 지급 액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 수당을 영유아의 양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육수당 전달체계를 정교하게 고

안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 IV는 수당액수를 현실화하고 보편적인 지원을 추구함에 따라 국가 전반에 걸쳐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에 기여한다는데 그 장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상류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영유아 양육 가정에 대해 현실화된 양육 수당액수를 지급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한다는 양육 수당의 기본 이념에 충실히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국민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양육수당의 기본 이념과도 부합된다. 한편, 양육 수당 지원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책임이 모든 국민을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6> 양육 수당 시나리오별 특징 및 장단점 분석

	특징	장점	단점
시나리오 I (연령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영아에 대한 우선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된 예산으로 정책 체감도가 큰 저소득층을 원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자와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확보 미흡</li> <li>- 보육료 지원에 대한 가수요 발생 우려</li> <li>- 10만원 액수는 가정내 양육을 충실히 지원하기에 미흡한 액수</li> </ul>
시나리오 II (연령, 급여수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체감도가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보호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 및 중산층과 소득 형평성 보완</li> <li>- 저소득층 자녀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저해 우려</li> <li>- 저소득층 근로여성에 대한 정책 실효성 한계</li> </ul>
시나리오 III (연령, 소득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무상 지원과 형평성 확보</li> <li>- 양육수당 정책의 보편성을 지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무상 지원과 대상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형평성 확보</li> <li>- 보편적 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li> <li>- 영유아 보호자의 선택권 강화</li> <li>- 보육료 지원 가수요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노력 필요</li> <li>-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소득 형평성 제고에 제한점으로 작용</li> <li>- 중산층의 경우 정책 체감도가 낮아 정책 효율성 저하 가능</li> </ul>
시나리오 IV (연령, 소득기준, 급여수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지원과 수당액수 현실화를 통해 선진국형 양육지원 제도를 지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화된 양육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양육수당의 기본이념에 충실</li>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양육 책임 강화</li> <li>-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노동력 활용에 저해가 되지 않을 범위에서 수당 액수 고려 필요</li> <li>-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전달체계 정교화 필요</li> <li>- 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li> </ul>

## 제5장 양육수당 전달체계 구축 방안

본 절에서는 양육수당을 시행하기 위한 전달체계에 대하여 논한다. 양육수당의 전달체계를 구상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은 기존 보육료지원의 전달체계이다. 그 이유는 보육료지원의 대상과 양육수당의 표적 집단이 상당한 수준에서 일치하며 단, 어떠한 급여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각 급여의 대상이 달라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달체계에서 양 제도의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양제도의 집행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상호 교환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양육수당의 전달체계를 구상하기 전, 전달체계 구성의 일반적 원칙을 정리하고 보육료지원 전달체계를 검토한 후 양육수당의 전달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양육수당의 전달체계를 구상하면서 함께 고려가 필요한 몇 가지 쟁점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바우처의 형태로 지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지급수단의 차이를 상세하게 비교하지는 않지만 만약 바우처를 지급수단으로 할 경우 전달체계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두었다. 이미 바우처를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양육수당이 바우처로 전달될 경우를 가정하여 보았다. 다른 한 가지 쟁점은 기존의 전산인프라에서 양육수당이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이다. 이 문제는 매우 단순하게 정리하여 볼 수 있다. 기존의 관련제도들이 전산인프라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식과 양육수당의 그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산인프라 활용에서 양육수당을 첨가할 경우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의 상호 전환수급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양육수당은 보육료지원을 받지 않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당연 대상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하여 보육료지원을 받게 된다면 양육수당의 지급은 중단되어야 한

다. 중단과 전환의 과정은 구체적 집행에서 복잡한 여러 가지 결정사항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본 절의 마지막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제1절 전달체계 구성의 원칙

양육수당의 전달체계는 역시 전달체계의 기본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 1974: 28-32)는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로 서비스의 단절(fragmentation), 비연속성(discontinuity), 무책임성(unaccountability), 접근성(inaccessibility) 부족을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원칙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된다(이계탁, 1994: 216-220; 최성재·남기민, 2001: 88-92 참조).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등이 그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칙 중 몇 가지는 현금지원의 형태보다는 서비스 형태의 지원을 상징하고 강조되는 원칙들이다. 양육수당은 서비스 형태의 지원을 전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그 전달체계의 구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만을 언급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적절성의 원칙으로 적절성은 주로 급여의 수준이나 양과 관련된다. 급여가 소비자의 욕구충족(또는 문제해결)에 충분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양육수당도 그 급여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제 욕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원칙은 전달체계로 한정된 원칙이라기 보다는 제도 설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절의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논외로 한다.

둘째, 지속성의 원칙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일정기간 이어져 계속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수당의 경우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제 욕구의 충족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제도 설계를 보면 아동의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원칙은 기

본적으로 준수될 가능성이 높다. 단, 양육수당을 받던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관련 급여 및 서비스로의 대상 변화가 있다면 이 때, 지속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평등성의 원칙으로 사회복지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양육수당의 대상 선정 기준에서 지역이나 종교, 지위, 성 등을 이유로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 상 일선의 선정과정에서 이러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선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실수나 고의적 차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와 그 처리의 과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필요하며 일선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넷째, 책임성의 원칙으로 사회복지조직은 복지국가(사회)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불평과 불만의 수렴장치가 적절해야 작동하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급여제공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앞서 평등성의 원칙에서 언급한 바와 동일하다. 이의제기와 그 처리의 과정을 명문화하고 그 처리에서 훼손된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제를 완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접근성의 원칙으로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 지리적 접근 편의성, 심리적 장애의 제거, 선정절차상의 장애의 제거, 충분한 자원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양육수당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느 곳에서나 쉽게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이나 안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여섯째, 효율성의 원칙이다. 효율성은 동일한 효과의 전달체계를 기획한다 하여도 그 투입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유리함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달체계는 과부하상태에 있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

보편제도의 도입은 업무의 심각한 가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어진 인력 등의 한계에서 추가된 업무를 수행하자면 전산인프라의 구축과 활용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관련 전산인프라의 정비하고 필요한 유기적 연계를 확보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하의 전달체계의 검토와 제안은 앞서 언급한 원칙들이 준수되도록 고려하고 진행되었다. 향후 양육수당이 안착되어 시행되는 단계에서도 양육수당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이러한 전달체계의 원칙들은 수시로 그 준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 제2절 관련 제도의 전달체계 검토: 보육료지원 전달체계

양육수당 전달체계의 일차적인 모델은 보육료지원 전달체계이다. 양 전달체계는 동일한 과정과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수당의 표적은 보육료지원과 유사하지만 정책 표적이 보육서비스와 재가양육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양 제도의 정책대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정보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단, 보육료지원은 보육을 위한 비용을 보육시설로 전달하는데 반해 양육수당은 지원이 해당 영유아의 가구로 전달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양육수당의 전달체계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보육료 지원의 전달체계를 간략하게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보육료 전달체계를 정리한 후 보육료 전달체계 중에서 양육수당 전달체계에서 참고할 사항들을 논하고자 한다. 보육료 전달체계를 홍보에서 급여제공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sup>27)</sup>.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그 친족, 기타의 보호자 등 이

27) 이하 보육료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정리는 ‘여성가족부, 2008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다.

해관계인이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민원창구에 신청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신청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보육료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보육료지원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반상회, 읍·면·동 게시판 공고,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육료지원 안내문을 읍·면·동 및 보육시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가족사항과 소득·재산 등의 생활실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재사항은 신청가구의 실태조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신청 후 조사기관인 읍면동사무소는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는 전산조회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산조회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상황(소득·재산, 생활실태, 동거가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종합소득, 행정자치부의 지적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표준소득월액이나 연금급여 등 각종 전산자료를 시·군·구 새울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조회 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거쳐 적용하되 최근 자료 또는 실제 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조사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후 결정사항을 해당 시설 및 읍·면·동에 통보하여야 한다. 읍·면·동장(담당자)은 시·군·구의 결정내용을 새울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통보서’를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보육료지원 신청자는 읍면동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한다. 이후 시설장은 시군구에 매월 보육료를 일괄 신청하되, 시군구에서 정한 신청기일은 준수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서 지원대상확인서 출석부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e-보육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e-보육 대체가 가능하다.

시군구청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시설의 전용 입금통장으로 보육료를 지

원한다. 해당 영유아를 보육료 지원대상자 대장에 기재하고 전산관리해야 한다. 보육료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교육청으로부터 지원대상 아동명단을 협조 받아 매월 보육료 지원대상자와 명단 대조 완료 후 보육료를 지원한다. 그리고 급여 결정과 급여지급내용 등을 새울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보통 보육료지원 신청은 2~4월에 집중되므로 이 시기에 행정(보조)인력의 우선 지원을 받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이 때에는 민원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여타의 다른 제도의 신규 신청은 시·군·구의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수행하지만 보육료지원은 그 신청의 규모가 너무 커서 일정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통합조사팀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만큼 관련 업무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조사에서 급여지급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마무리되면 읍·면·동에서는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명부를 작성하여 둔다.

보육료지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육시설평가인증 조력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보육통계 산출 및 기초조사,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e-보육관련 상담을 위한 e-보육 HelpDesk 운영 등의 사업을 한다. 지방보육센터는 중앙보육센터의 업무와 유사하지만 단위지역의 규모가 다르다. 지방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지역주민의 육아지원, 지역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 상담 및 조력, 보육도서관 운영, 보육정보지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e-보육관련 상담을 위한 e-보육 HelpDesk 운영,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중앙과 지방은 보육정보센터를 통하여 홍보와 상담이 제공, 정보의 관리, 그리고 보육시설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 제3절 양육 수당 전달체계의 구성

양육수당의 전달체계는 보육료 지원과 유사하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수당의 전달체계를 신청에서 급여지급까지 정리해 보면 아래와 유사할 것이다. 우선 양육수당을 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등은 양육수당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된 양육수당 신청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육수당 신청서는 보육료 신청서와 유사하게 가족구성, 소득 및 재산 등의 생활실태 등을 기록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마련된 신청서는 읍·면·동의 민원창구를 비롯하여 시·군·구청, 그리고 각종 공공, 민간의 서비스제공조직에 비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였지만 향후 129센터가 설치되면 129센터의 접수담당이 이 신청을 접수하게 될 수 있다. 접수주체가 조사주체와 분리되면 신청의 부적절한 기각 등이 방지되는 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양육수당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 대상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보육료지원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양육수당을 홍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반상회, 읍·면·동 게시판 공고, 지역신문 등을 비롯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중앙과 지방의 보육정보센터에서도 보육료 지원과 함께 양육수당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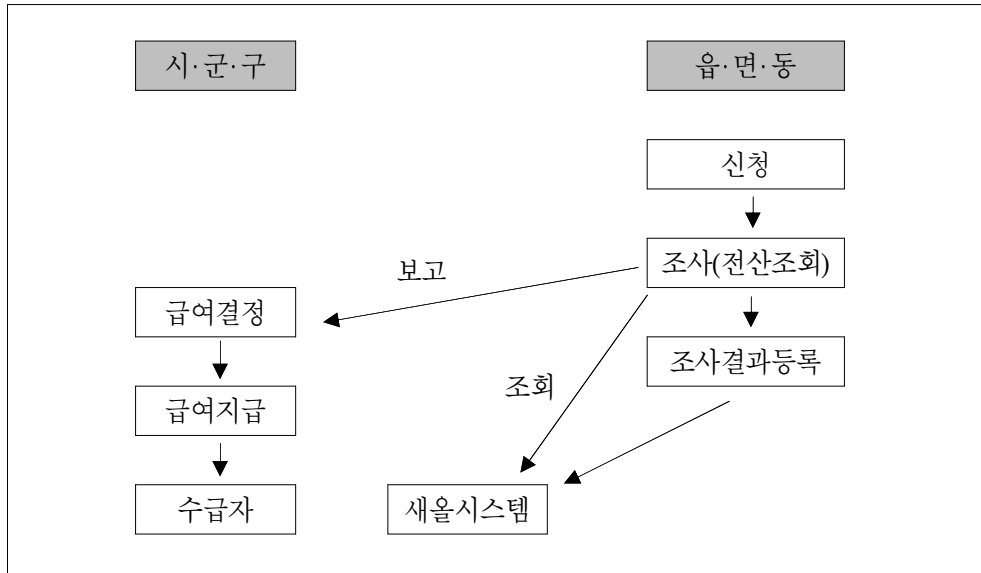
신청이 이루어지면 읍면동사무소는 선정을 위한 조사를 한다. 조사는 보육료 지원과 같이 전산조회를 통하여 얻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이유는 보육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양육수당의 신청규모가 클 것이며 이렇게 큰 규모의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시·군·구 단위의 통합조사팀에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정된 대상자 규모 중 가장 소규모인 약 15만명의 경우를 전제하여도 시·군·구 당 약 600개가 넘는 사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읍·면·동 단위로 보아도 약 40개 정도의 사례를 조사하여야 한다. 기존의 보육료지원을 포함하여 고려한다면 읍·면·동 단위도 양육수당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은 매우 부담스러운 업무이다. 따라서 전산자료를

기초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 확인을 기준으로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업무 마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보육료지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청이 몰릴 수 있는 시기에 행정직 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도 사실 이 업무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울시스템을 통한 전산조회를 기초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사실 확인의 내용은 가능하면 없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아주 일부의 제한된 내용에 한정하여야만 한다.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과 부하된 업무를 사실 확인을 거쳐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조사가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조사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후 결정사항을 읍·면·동에 통보하여야 한다. 읍·면·동장(담당자)은 시·군·구의 결정내용을 새울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통보서’를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양육수당 대상자가 결정되면 역시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대장에 기재하고 전산 관리해야 한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결정 내용을 기초로 수급자에게 입금통장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물론 이는 현금으로 양육수당을 제공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조사에서 급여지급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마무리되면 읍·면·동에서는 양육 수당 대상 아동명부를 작성하여 둔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시로 할 수 있지만 보육과 마찬가지로 기준 시점이 있으므로 아마 연초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된다. 신청과 선정, 급여지급이 이루어진 후 수급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규모가 큰 수급자의 수급자 관리를 수시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가장 이상적인 수급자 관리는 향후 전산인프라의 개선으로 수급자의 상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해당 지역으로 통보되어 변동이 있는 사례만 확인하여 급여의 변경조치를 취하는 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반기 단위로 수급자 관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5-1] 양육수당 전달체계안의 개요



수급자의 관리는 역시 전산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행하되, 수급자의 개인적 신고가 있었던 경우는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수급자 관리는 관할 읍면동의 소관업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준 보편적 급여는 향후 시군구단위에서 전산자료의 활용을 기초로 하여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읍·면·동 단위의 인력배치로는 더 이상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워 가장 엄격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 뿐 아니라 준 보편적 제도의 경우 그 규모와 급여 방식에서 보면 보다 큰 지역단위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제4절 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 1. 바우처방식의 도입과 전달체계의 추가 수정

양육수당을 현금급여의 제공이 아니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급여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할 위험을 갖는다는 점이다. 바우처와 현금지원의 비교와 그 적절성 검토는 이 절에서 논외로 하되 만약 바우처 방식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할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전달체계 상의 문제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현재 바우처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는 사회서비스 제공이다. 사회서비스 중 하나인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경우 신청과 조사까지는 앞서 설명하고 제안한 보육료지원이나 양육수당 전달체계 안과 유사하다. 단, 바우처 사업의 경우 결정을 통지하는 곳으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가 추가된다. 관리센터는 바우처의 운영을 담당하는데 전달된 바우처 사업 대상자 선정 자료를 기초로 전담 금융기관으로 대상자 자료를 송부하고 전담금융기관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송부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거래를 선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게 된다. 대상자 관리는 역시 읍면동에서 하게 되는데,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한다.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요자가 바우처를 사용하여 이를 구매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바우처 방식을 택할 경우 단순히 지역 내 몇 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 사용처가 제한되기 어렵고 그리 되어서도 아니 된다. 바우처의 사용 장소는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아동용품을 취급하는 상점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와 이들 기관이 청구한 바우처 사용에 대한 지불 등이 좀 더 복잡하여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사회 단위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곳이 지정 공시되고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은 전담금융기관에 매월 바우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와 같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설치되어야 하거나 기존의 유사 조직에서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 바우처가 사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되지 않은 바우처가 다음 달로 이월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2. 전달체계의 기반: 전산인프라의 정비

양육수당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산인프라가 구축, 활용되어야 한다. 양육수당 전달체계를 설계하면서 고려하여야 하는 전산인프라는 주민서비스 포털, e-보육행정시스템, 새울시스템과 그 내부의 복지행정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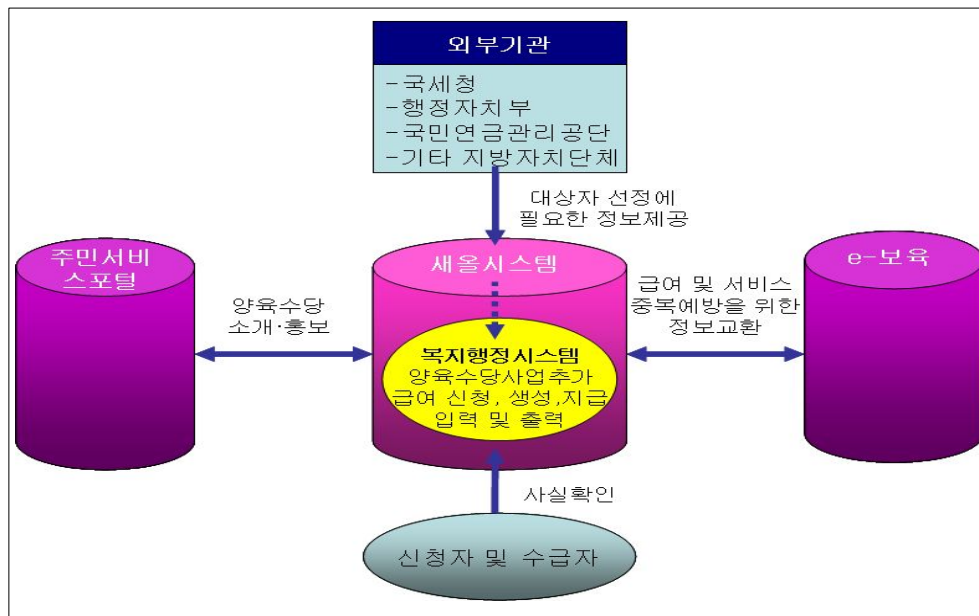
주민서비스 포털은 제 급여 및 서비스 안내를 비롯하여 지역단위로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급여 및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 정보를 얻고 관리하는 체제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e-보육,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란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보육업무의 효율성, 보육행정수행과정의 신속성, 보육정보화를 위해 보육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를 연결하기 위해 개발된 보육시설 업무 전산행정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06년 8월말까지 개발을 완료한 후 2006년 9월1일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가 2007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하고 있다.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보육료 지원대상 정보도 포함되며 보육시설은 매월 보조금 신청 시 수입·지출 항목별 총계금액을 e-보육 (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전송하거나 별도 입력하기도 한다.

새울시스템은 지방정부 단위로 구축된 행정지원인프라로서 복지를 포함하여 지방행정 전반의 전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새울시스템을 통하여 중앙과 다른 지방정부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수급자의 선정을 위한 각종 자료가 수집되는 기제로 활용된다. 복지행정시스템은 새울시스템 안에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정보의 처리와 선정 결과 및 급여지급 내역 등이 정리되는 체계이다. 현재 복지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아동급여는 지급대상에 따라

소년소녀가정지원비, 요보호아동가정위탁보호수당, 장애아입양양육보조수당, 입양아동양육수당으로 구분된다.

양육수당의 시행을 위해서 전산인프라에 양육수당 관련 정보의 추가 및 관리내용에 양육수당사업이 추가되어야 한다. 주민서비스 포털의 경우에도 양육수당의 소개와 홍보가 필요하다.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은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의 지원 성격이 강하므로 양육수당의 지원을 위한 각종 행정과 크게 관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의 보육시설이 관리하는 정보와 복지행정시스템의 정보가 공유되어 급여 및 서비스의 중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울시스템은 양육수당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각종 필요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복지행정시스템에는 기타의 아동급여 관리에 양육수당이 추가되어야 하며 신청, 급여 생성, 급여 지급에 이르는 입력과 출력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2] 양육 수당 전달 체계를 위한 전산 인프라 구축 방안



### 3.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의 상호전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비슷한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연령 뿐 아니라 경제적 여건을 비롯하여 비슷한 생활수준이 선정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영유아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보육서비스 이용을 선택하면서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보육료지원을 받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재가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수당 대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을 받게 변경되거나 또는 보육료 지원을 받던 영유아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변경될 때, 그 처리에 대한 방침이 필요할 것이다. 보육료 지원의 경우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다. 그리고 보육료는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한다. 즉 실제보육일수가 보육가능일수인 25일 중 몇 일 인지, 그 비율을 반영하여 보육료 지원액을 결정한다.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가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당 결정일이 속하는 달은 보육료를 지원한다. 단, 장기결석의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한다.

현재 규정으로는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당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은 개인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게 지원되므로 과 지원된 보육료는 보육시설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만약 행정 편의상 이 규정이 유지된다면 보육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영유아에게 해당 월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적인 경비가 중복하여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자면 장기결석에 대한 처리와 유사하게 보육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는 재원이 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보육사업지침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변경된다

면 보육료 지원이 더 큰 금액이므로 이를 개인적 부담으로 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보육서비스 이용 시작시점을 감안하여 지원되어야 하는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고 지급된 양육수당 중 해당 기간을 역시 일할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보육료를 해당 시설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금액은 양육수당으로 지급된 현금을 포함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될 것이다. 보육료 지원이 매달 하순에 지급되므로 이러한 전환 영유아에 대한 지원금 산출이 통일될 수 있도록 양육수당의 지급일도 통일하는 것이 행정상의 복잡함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영유아가 얼마나 빈번하게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을 상호 전환하며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빈곤층 중 상당수의 가구가 빈번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단, 동월에 1회 이상의 전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복잡한 적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의 상호 전환에 대해서는 양 사업의 안내문건에서 상세하게 풀이를 두어야 하며 전산으로 양 제도의 수급내역이 실시 간 확인 가능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 4. 바우처와 현금보조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양육수당의 지원방식을 바우처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바우처와 현금보조 간의 선택에 앞서 바우처와 현금보조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바우처는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한하게 되므로, 같은 금액의 현금보조에 비하여서는 효율성 떨어지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첫째, 바우처가 현금지원에 비하여 타당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둘째, 바우처가 타당한 경우 그 효과가 현금지원과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가 수혜자에게 필요하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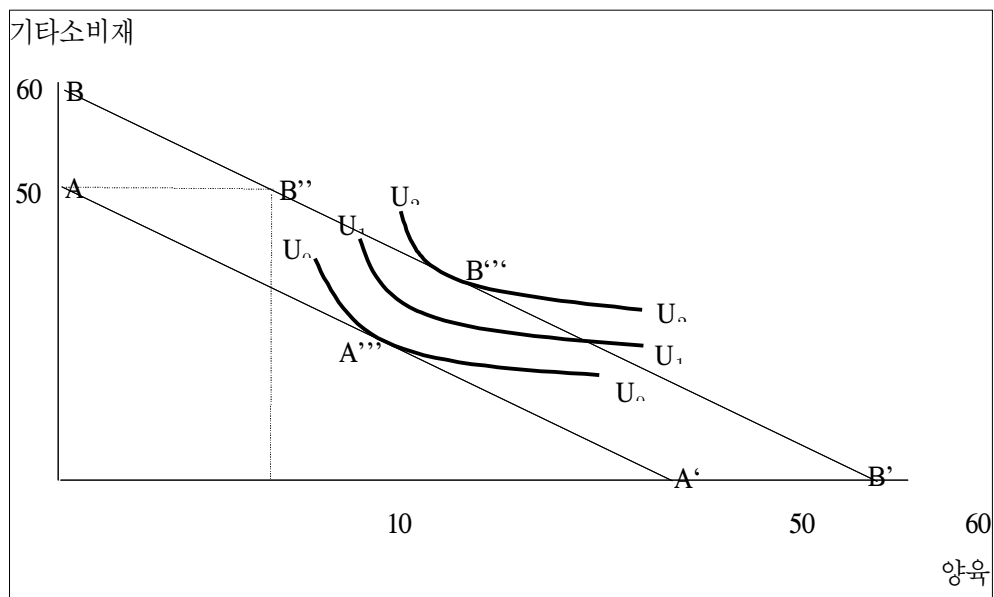
paternalism의 관점에서, 그리고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merit good이므로 바우처의 지급을 통해 해당 수혜자의 소비를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 현금보조에 비해 타당성을 가진다.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를 가지는 경우 바우처를 통한 소비증진은 현금지원의 경우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즉,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금지원에 비하여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직접적인 현물지급의 경우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바우처를 지급하였을 경우 현금보조의 경우보다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가 과연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바우처의 소비증진 효과는 수혜자(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바우처나 현금보조 이전에 수혜자가 이미 보조되는 금액보다 많은 량의 상품을 소비하고 있었던 경우 (소비비제약 소비자, unconstrained customer), 보조되는 금액보다 적은 량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었던 경우 (소비제약 소비자, constrained customer)가 있을 수 있다. 수혜자가 보조되는 금액보다 많은 량의 상품을 소비하였던 소비비제약 소비자라고 한다면, 바우처는 형태상으로는 현금과 다르지만 소비증진이라는 효과적 측면에서는 현금과 동일하다. 반대로 수혜자가 보조되는 금액보다는 적은 량을 소비하고 있었던 소비제약 소비자라고 한다면, 바우처로 인한 소비증진 효과는 현금지급의 경우와 다르다.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주는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지원과 기타소비재의 두 재화만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의 예산제약선은 [그림 5-3]의 AA'와 같다. 양육바우처가 지급되게 되면 소비자의 예산제약선은 AB''B'가 된다. 양육바우처가 지급되기 전, 이 소비자의 선택은 A''' 점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자. 즉, 이 소비자의 경우는, 바우처가 지급되든지 지급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양육바우처의 금액보다 더 많은 식료품을 소비하였다. 양육 바우처가 지급되었을 때 이 소비자의 선택은 B'''점으로 양육과 기타소비재의 소비가 모두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는 양육바우처 대신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배분점이 선택되게 되어, 바우처가 현금지급과 동일한 이론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다. 이러한 경우라도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일차적 목표가 소비증진의 측면보다는 수혜자의 공급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 있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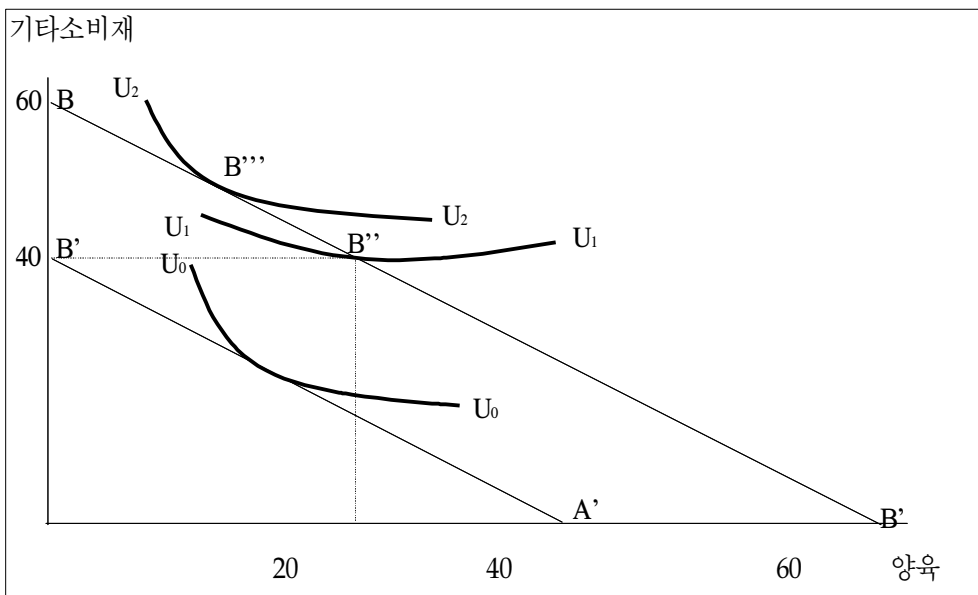
[그림 5-3] 바우처의 효과가 현금지원의 효과와 동일한 경우 (소비 비제약 수혜자, unconstrained)



이제 반대로 소비제약 수혜자, 즉 바우처가 지급되기 전 소비자의 양육 소비선택량이 바우처의 지급액보다 적은 수준인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림 5-4]에서처럼 바우처가 지급된 후 소비자의 선택은 B''로, 바우처로 지급된 만큼의 양육을 소비하게 된다. 이 경우, 만약 현금이 지불되었다면 소비자의 선택은 B'''로 B''보다는 적은양의 양육을 소비하게 된다. 즉, 소비가 제약되었던 수혜자의 경우는 바우처의 제공이 소비증진의 측면에서는 현금지원의 경우보다는 효과적이 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보면, 바우처 지급으로 인한 소비수준 B''에서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U1으로 현금지원으로 인한 소비수준 B'''에서의 효용수준인 U2보다는 낮은 효용

수준에 직면하게 된다. 즉 소비자가 소비제한되었던 경우 바우처는 현금보조의 경우보다 소비는 증진시키나,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시켜 효율성의 상실이 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효율성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바우처 사용이 현금지급에 비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준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증진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paternalism)이다. 둘째,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타겟으로 삼아 보조하려는 경우이다. 셋째, 외부성(externality)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5-4] 바우처가 현금지원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소비제한(constrained) 수혜자)



## 5. 바우처와 현금보조간의 선택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과 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수당지원의 정책목표, 둘째, 기타 유사한 목적의 보육지원 혜택의 여부이다. 셋째,

수혜 대상자 그룹의 특성과 넷째, 가게 보육비지출의 특성이다. 다섯째, 바우처로 지급하였을 때 양육관련 소비가 증진되는지 하는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시행시 추가적인 행정비용의 규모이다. 먼저 양육수당 지원의 정책목표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양육수당의 경우는 영유아 양육의 건전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가게의 양육비를 보조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혜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경우는, 지급되어지는 금액이 양육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때는 보육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정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할 필요가 있고, 자연스럽게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효용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보육시설이용자에 대한 기존의 보육료지원이 묵시적 형태의 바우처로 시설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양육수당 수혜자 그룹의 보육시설 수요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양육수당의 경우 대상 수혜자그룹이 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이므로, 보육수요적 측면에서는 이론적으로 볼때 [그림 5-4], 즉 소비 제약된 수혜자들이다. 따라서 양육수당이 지급되면 보육수요에 대한 효과는 보육수요를 증진시킨다고는 할 수는 없다. 보육수요적 측면에서는 보육시설 사용 바우처가 효과적이다. 이때 양육수당의 범위는 보육시설이용을 제외한 양육비용이 된다. 양육수당 또한 바우처로 지급한다면 보육시설 이용을 제외한 양육비 품목이 된다.

셋째, 보육시설 이용을 제외한 양육비 품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영유아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되어야 하는지는 이론적으로 대상 수혜자들의 현재 양육비 (보육시설이용료 제외)가 양육수당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달려 있다. 소득계층별로 볼때 저소득층의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의 양육비가 양육수당보다 적을 확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고, 소비 제약하의 소비자일 확률이 높다. 반면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는 현재의 양육비가 양육수당보다 높을 확률이 높고, 소비 비제약하의 수혜자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일 수록 소비증진의 측면에서는 바우처형식이 더욱 적합하고, 고소득층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현금이 더 적합한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표준보육비등이 월 1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이미 양육수당보다는 많은 양육비를 지

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양육수당의 경우 현금지원방식이 이론적으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양육 수당이 월 23만원으로 확대 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월 23만원 이하로 소비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바우처 형식이 더 효율적이며,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월 23만원 이상 소비하는 중산층 이상 계층에게는 현금지원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결론하면, 바우처와 현금지급의 방식간의 선택에 있어서는 대상자 그룹과 지원금액에 따른 가계 양육비의 특성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9년 7월부터 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양육수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를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양육수당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모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양육수당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양육수당 정책이 가져올 효과성에 대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0~만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화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할 때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달 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육수당 제도는 이제 까지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주로 시설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에 반해, 영유아 양육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발전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특히, 이제까지 재가 양육에 대한 지원이 장애아, 한부모 가정 자녀, 혹은 입양자녀와 같은 취약계층 자녀에 대해 이루어져 온 것에 반해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국내 양육 지원 정책이 선진국형 복지 제도로 발전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2009년 7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양육수당 제도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만0~만1세 영아와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만을 포함하고 있어 양육수당 본래의 취지를 다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한정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된 까닭은 제도 도입 초기 예산상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정부 부처간의 합의에 의해 조율된 결과이다. 이렇게 결정되게 된 내면에는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책임이 국가 전체에 있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아직 우리 현실에서 부족하다는 사실

을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 초기에 있어 아직은 대상자와 지원수준에 있어 미흡한 수준인 양육 수당이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네 가지 확대 방안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전화조사와 심층면접 조사 결과 이러한 양육 수당 정책은 양육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부응하여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자녀들의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장에서는 양육 수당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인 쟁점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감하고자 한다.

## 1. 지원 대상의 확대

2009년 7월부터 도입되는 양육수당제도는 취약계층 자녀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자칫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 양육 제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양육 수당 정책 도입이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가정 내 양육 등 양육 담당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대상자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2009년부터 보육료 무상 지원의 범위가 하위 소득 50%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시설 보육 서비스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하고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서는 양육 수당의 대상도 보육료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을 동일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OECD 국가 사례 고찰 결과,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약 만3세 미만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보육 인프라와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양육 수당의 대상을 만0~만3세로 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공보육 서비스 지원이 체계화되어 있어 만3세 이상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 시설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 공보육 시스템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 실정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는 만3세 이상 취학전 영유아까지 양육수당의 대상 연령

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촌의 경우와 같이 지리적으로 주변에 보육 시설이 없거나 혹은 보육 시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은 부모가 우리 사회에는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특징을 감안해 볼 때 OECD 국가들이 양육 수당의 대상을 만3세 미만으로 한정하였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여 연령을 만3세 이하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소득기준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것은 양육비 부담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느끼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극빈층의 경우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준의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가는 개인이 일정 수준의 양육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여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자녀 양육의 질에 대한 기준은 각 소득 계층마다 달리 가지고 있어 자녀 양육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산층이 느끼는 양육비 부담은 자녀 양육에 대해 그다지 높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이하 계층보다 더 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는 양육 수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하지만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양육 수준의 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중산층 이하 보다는 중산층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중산층을 배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정책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중산층 지원으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우려 된다면 소득 형평성 추구를 위해서 소득 계층별로 지원 수준을 일정수준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2. 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양육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기본 보조금과 같은 보육료 지원을 포함하여 영유아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다. 하지만 스웨덴과 프랑스와 같이 보육에 대한 국가



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양육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은 너무나 제한적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2009년부터 보육료 지원이 하위소득 50%까지 확대됨에 따라 당초 양육수당의 대상도 만0~만2세 하위소득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부처간의 예산 협의에 따라 양육 수당의 대상은 만0~만1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양육 수당을 비롯한 영유아 양육 지원에 대한 부족한 예산 지원은 영유아 양육이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것에 아직 우리사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유아 양육이 국가 책임하에 있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전체 국민들은 영유아 양육이 각 개별 가정의 책임을 떠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 인식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국가 보육 서비스가 확충된 국가의 경우 모두 과거에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였고 영유아 양육 및 이에 대한 지원이 국가 책임이라는 철학 하에 적극적으로 양육 및 보육 지원을 추진한 결과 오늘날의 보육 지원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화 되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양육도 국가 책임하에 시설과 서비스 지원 확대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 3. 양육 수당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일부 집단에서 양육 수당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양육 수당이 현금의 형태로 지원될 때 양육 담당자가 이를 자녀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 결과 보육·교육비를 제외하고 자녀 1인당 소요되는 월평균 자녀 양육비가 약 23만원 정도로 추계되었으며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약 28만원 정도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양

육을 위해서는 10만원의 양육 수당 보다 더 많은 액수를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 수당으로 받은 돈은 자녀 양육비로 사용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현재의 양육 정책 시나리오 상에서는 양육 수당의 지원액수를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월평균 양육비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양육 수당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양육비 보다 적게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서도 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 결과 저소득 계층의 경우 중산층 보다 양육 수당을 자녀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욱 높았으며 양육 수당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의 질이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비중도 높았다.

양육 수당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항목에만 지출하도록 하는 바우처 형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형식을 도입할 때 양육 수당이 정책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와 다양한 양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는 측면을 볼 때 자칫 양육 수당 도입의 취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양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이에 소요되는 각종의 재화 및 서비스의 항목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약화시킬 우려도 크다. 바우처 형식을 도입할 때 이에 수반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4. 여성 취업과 관련한 문제

양육수당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양육 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여성의 취업 의사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본 연구 결과,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될 때 이러한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사례는 거의 희박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장을 포기 하는 경우

는 대부분이 가정내 돌 볼 자녀가 세 명 이상이라서 가사와 양육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계획되고 있는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은 여성의 취업 의사를 저하시킬 만큼 높은 액수는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여성의 취업 의사를 저하시킬 수준의 양육수당 액수는 30만원 이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월 23만원까지 확대되어도 여성의 취업 의사를 저하시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이 희망하는 급여 수준으로 양육 수당이 지급될 때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양육수당 정책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 환경 차원 혹은 여성들의 직업 의식 차원에서 논의 될 사항이다. 그 동안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여 여성 노동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향상되었지만 이러한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등 불완전한 고용 상태에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 원하는 수준으로 양육 수당이 주어진다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아니고서는 취업 보다는 양육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노동 환경 측면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직업 의식과 커리어 의식이 강한 상태라면 아무리 본인이 희망하는 액수의 양육수당이 지급되어도 직장을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육 수당과 여성의 취업 의향과의 문제는 양육 수당 정책을 도입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여성 고용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커리어 의식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향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여성의 고용 환경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며, 전문직 여성의 증가로 인해 여성들의 커리어 의식도 향상되고 있는 바, 양육 수당이 아무리 희망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도 직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비중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5. 기타 양육지원 정책과의 중복성 문제

양육 수당 정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양육 수당 제도를 통해 그 동안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 내 영유아 양육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양육 수당 정책은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자녀, 입양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과는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자녀, 입양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이러한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각기 특수한 취약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 혹은 그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각 제도들의 도입 목적과 취지를 살펴 볼 때 양육 수당 제도와 중복성은 없으며 이러한 중복성에 대한 논란은 양육 수당의 근본 취지와 이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여성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여성계에서 커다란 화두로 제시되고 있으며 양육수당 도입을 통하여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 정책도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특히 양육 수당 정책은 산전후휴가 급여 혹은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의 정책으로 동 정책들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직장을 잠시 휴직해야 하는 여성에 대한 기회 비용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노동정책이다. 즉, 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여성의 모성권과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인 반면, 양육 수당은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마련된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양육 수당으로 지급된 급여는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산전후휴가 급여 혹은 육아휴직급여는 여성의 모성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양제도의 취지가 이렇듯 상이하기 때문에 양제도 간의 중복성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 등을 생업으

로 종사하고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 대상을 농업인 가정의 자녀로 한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는 양육수당에 비해서는 대상과 지원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다 보편적인 성격으로 추진하는 양육 수당을 가정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기본 정책으로 하고, 양육 수당 제도 도입 초기에 그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할 것을 보완하여 양육수당 대상자에 해당되지 못하는 농어촌 영유아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적인 정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 6.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2009년부터 보육료 무상 지원의 대상이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양육 수당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층까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층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든 혹은 가정에서 양육을 하든 모두 지원을 받지만, 차상위 이상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육 시설에 자녀를 보낼 경우에만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 받으며 자녀를 집안에서 키울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제도간의 대상자 불일치는 양육 수당이 정책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정책 도입 취지의 목적을 희미하게 한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여력이 있음에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혹은 양육자 스스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좋아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냄으로써 보육료를 무상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전화 조사 결과 이렇게 양제가 비형평적으로 운영될 경우 보육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수요는 특히 저소득, 비취업, 저학력 여성의 경우 더욱 현저하

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제도의 불공평한 적용 대상이 되는 차상위 이상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 저학력, 비취업 여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수요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조사 대상 여성들이 양제도간의 비형평성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제기되는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보육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수요 창출과 민원 발생 문제와 함께 양육 수당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정책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는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양제도 간의 비형평성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7. 양육 수당의 정책 체감도 증대

향후 양육 수당 대상자가 보다 높은 소득 계층으로 확대될 때 양육 수당의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이상의 경우, 월 10만원 지원의 양육 수당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저소득층 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중산층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될 때 중산층 이상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현금 보다 체감도가 높을 수 있는 양육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바우처와 현금 지원간의 이론적인 논의에서 양육 수당으로 제공되고 있는 급여액보다 적은 수준으로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바우처 형식이 효율적이고, 양육수당 급여액 보다 높은 수준으로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현금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를 통한 이론상의 효율성 비교를 떠나서 실제로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는 10만원 상당의 양육 수당 보다는 문화 예술관 무료 지원 등 바우처 형식의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정 서비스에 한해서 제공되는 바우처 형식으로

양육 수당이 지급된다면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용하지 않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즉 바우처를 이용함으로써 문화 예술 혹은 미술관 관람과 같은 기회를 갖게 되어 현금으로 지원했을 경우 보다 자녀 양육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up>28)</sup>

---

28) 이러한 논의는 생일 선물이 현금으로 주어진 경우, 생활비의 일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만을 위한 선물 구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백화점 상품권으로 주어진 경우 평소에 눈여겨 두었던 물건을 백화점에서 구입하게 됨으로써 개인 효용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와 비슷한 이치이다

## 참고문헌

- 서문희 외 (2006)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농림부
- 유희정 외 (2006)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유희정 (2007)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 (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Andersson, G., “Fertility developments in Norway and Sweden since the early 1960s”, Demographic Research, Vol. 6(4),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2002, pp. 67-86.
- Blau, D. M. and Robins, P. K., “Child Care Costs and Family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0, 1988, pp. 374-381.
- Blau, D. M. and Robins, P. K.,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Vol. 25(2), 1989, pp. 287-299.
- Chevalier, A & Viitanen, T., “The Causality Between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Availability of Childcare”,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9, Issue 14, November 2002, pp. 915-918
- d’Addio, Anna Cristina and d’Ercole, Marco Mira,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Sep. 2005.
- Dex, S. and Scheibl, F., “Business Performance and Family-Friendly Policies”, Journal of General Management, Vol. 24(4), Summer 1999, pp. 22-37.



- Ermisch, J., "Purchased Child Care, Optimal Family Size and Mother's Employment: theory and Econometric Analysi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pp. 79-192, 1989.
- European Commission, "Care in Europe", Directorate General for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Brussels, 1998. 9.
- Fagan, Colette & Walthery, Pierre,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Time Policies for Reconcilia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Modernising Social Policy for the New Life Course*, OECD, 2007, pp75-116.
- Fagan, C., Smith, M., Anxo, D., Letablier, M. & Perraudin, C., "Parental leave in European companies", *European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2007.
- Gauthier, Anne H. and Jan Hatzius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In: *Population Studies* 51/3, 295-306.
- Gelbach, J.B., "Public Schooling for Young Children and Maternal Labor Suppl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Issue 1, March 2002, pp. 307-322.
- Jaumotte, Florenc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37, 2003a, pp51-108.
- Jaumotte, Florenc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Past Trends and Main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76, 2003b.
- Kiser, S. J., "Friendly to Whose Families? A Case Study of the Delivery of Work-Family Benefits in a Model Firm",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draft of 22 November, mimeo, 1996.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2007.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 2007.

OECD, "Modernising Social Policy for the New Life Courses", 2007a.

OECD, "Can Parents Afford to Work? Childcare Costs, Tax-Benefit Policies and Work Incentives", *Benefits and Wages: OECD Indicators*, 2007b.

Røsen, M., "Fertility and family policy in Norway - A reflection on trends and possible connections", Demographic Research, Vol. 10(10),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2004, pp. 264-286.

Ruhm, C.,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arental Leave Mandates: Lessons from Europ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3, Issue 1, Feb. 1998, pp. 285-317.

---

---

## 부 록

---

---



## 〈부록 1〉 전화조사결과 집단별 차이 분석 표

&lt;부표 1&gt;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이유: 집단 간 비교 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 검증
모의 연령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87.5	71.0	58.1	$\chi^2(12)$ =18.815†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	10.4	17.6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	2.7	-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	4.5	1.4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12.5	10.4	18.9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	-	2.7	
	기타	-	0.9	1.4	
	계 (명)	100.0 (8)	100.0 (221)	100.0 (74)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81.5	75.2	29.8	$\chi^2(12)$ =68.025***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11.1	9.1	21.1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1.2	2.4	1.8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2.5	3.6	5.3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2.5	9.7	35.1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1.2	-	1.8	
	기타	-	-	5.3	
	계 (명)	100.0 (81)	100.0 (165)	100.0 (57)	
		남아	여아		
자녀 성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68.0	68.8		$\chi^2(6)$ =6.205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12.9	10.4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2.2	1.6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3.9	3.2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11.2	14.4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	1.6		
	기타	1.7	-		
	계 (명)	100.0 (178)	100.0 (125)		

## &lt;부표 1&gt; 계속

		취업		비취업		카이스퀘어 검증
취 업 유 무 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74.5		67.2		$\chi^2(6)$ =3.993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8.5		12.5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4.3		1.6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4.3		3.5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8.5		13.3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		0.8		
	기타	-		1.2		
	계 (명)	100.0 (47)		100.0 (256)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chi^2(30)$ =22.210
학 력 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66.7	62.2	72.7	77.8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	15.6	9.1	11.1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	1.5	1.9	11.1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33.3	3.0	3.9	-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	14.8	11.7	-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	1.5	-	-	
	기타	-	1.5	0.6	-	
	계 (명)	100.0(3)	100.0(135)	100.0(154)	100.0(9)	
		10만원 이하	11~20 만원	21~30 만원	31만원 이상	$\chi^2(18)$ =26.418†
양 육 비 수 준 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65.9	69.8	72.3	62.5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22.7	8.1	8.9	13.9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	-	3.0	4.2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2.3	-	5.0	6.9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9.1	18.6	10.9	9.7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	1.2	-	1.4	
	기타	-	2.3	-	1.4	
	계 (명)	100.0(44)	100.0(86)	100.0(101)	100.0(72)	

&lt;부표 1&gt; 계속

		200만원 이하	201~300 만원	301~400 만원	401만원 이상	카이스퀘어 검증
가 구 소 득 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68.1	66.0	72.7	69.4	$\chi^2(18)$ =14.798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7.7	12.0	11.4	14.3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1.1	2.0	4.5	2.0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3.3	3.0	6.8	4.1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15.4	16.0	4.5	10.2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2.2	-	-	-	
	기타	2.2	1.0	-	-	
	계 (명)	100.0(91)	100.0(100)	100.0(44)	100.0(49)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 만원	301만원 이상	
생 활 비 수 준 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67.9	68.6	61.0	82.6	$\chi^2(18)$ =30.624*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28.6	8.3	16.2	2.2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	1.7	1.9	4.3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	4.1	3.8	4.3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3.6	13.2	17.1	6.5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	1.7	-	-	
	기타	-	2.5	-	-	
	계 (명)	100.0(28)	100.0(121)	100.0(105)	100.0(4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2&gt; 과거 보육시설 이용 경험: 집단 간 비교 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이용 경험 있음	-		9.0		24.3		$\chi^2(2)=12.970^{**}$		
	이용 경험 없음	100.0		91.0		75.7				
	계 (명)	100.0 (8)		100.0 (221)		100.0 (74)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chi^2(2)=56.380^{***}$		
자녀 연령별	이용 경험 있음	3.7		6.7		42.1				
	이용 경험 없음	96.3		93.3		57.9				
	계 (명)	100.0 (81)		100.0 (165)		100.0 (57)				
		남아			여아			$\chi^2(1)=0.013$		
자녀 성별	이용 경험 있음	12.4			12.8					
	이용 경험 없음	87.6			87.2					
	계 (명)	100.0 (178)			100.0 (125)					
		취업			비취업			$\chi^2(1)=5.985^*$		
취업 유무별	이용 경험 있음	23.4			10.5					
	이용 경험 없음	76.6			89.5					
	계 (명)	100.0 (47)			100.0 (256)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chi^2(5)=2.493$
학력별	이용 경험 있음	-		10.4		14.3		22.2		
	이용 경험 없음	100.0		89.6		85.7		77.8		
	계 (명)	100.0(3)		100.0(135)		100.0(154)		100.0(9)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chi^2(3)=10.444^*$
양육비 수준별	이용 경험 있음	-		19.8		11.9		12.5		
	이용 경험 없음	100.0		80.2		88.1		87.5		
	계 (명)	100.0(44)		100.0(86)		100.0(101)		100.0(71)		
		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chi^2(3)=5.739$
가구소득별	이용 경험 있음	8.8		10.0		18.2		20.4		
	이용 경험 없음	91.2		90.0		81.8		79.6		
	계 (명)	100.0(91)		100.0(100)		100.0(44)		100.0(49)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chi^2(3)=5.656$
생활비 수준별	이용 경험 있음	3.6		11.6		12.4		21.7		
	이용 경험 없음	96.4		88.4		87.6		78.3		
	계 (명)	100.0(28)		100.0(121)		100.0(105)		100.0(4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3&gt; 양육수당의 주 사용 용처: 집단 간 비교 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생활비의 일부	25.0		17.6		8.1		$\chi^2(6)=7.898$		
	아이의 양육을 위해	75.0		81.0		89.2				
	내 자신을 위해	-		0.9		-				
	기타	-		0.5		2.7				
	계 (명)	100.0 (8)		100.0 (221)		100.0 (74)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생활비의 일부	9.9		16.4		21.1		$\chi^2(6)=6.548$		
	아이의 양육을 위해	90.1		81.2		77.2				
	내 자신을 위해	-		1.2		-				
	기타	-		1.2		1.8				
	계 (명)	100.0 (81)		100.0 (165)		100.0 (57)				
		남아			여아					
자녀 성별	생활비의 일부	11.2			21.6			$\chi^2(3)=7.272^{\dagger}$		
	아이의 양육을 위해	86.5			77.6					
	내 자신을 위해	1.1			-					
	기타	1.1			0.8					
	계 (명)	100.0 (178)			100.0 (125)					
		취업			비취업					
취업 유무별	생활비의 일부	17.0			15.2			$\chi^2(3)=2.474$		
	아이의 양육을 위해	80.9			83.2					
	내 자신을 위해	2.1			0.4					
	기타	-			1.2					
	계 (명)	100.0 (47)			100.0 (256)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별	생활비의 일부	-		17.0		15.6		-		$\chi^2(15)=16.473$
	아이의 양육을 위해	100.0		80.0		84.4		88.9		
	내 자신을 위해	-		1.5		-		-		
	기타	-		1.5		-		11.1		
	계 (명)	100.0(3)		100.0(135)		100.0(154)		100.0(9)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양육비 수준별	생활비의 일부	22.7		9.3		16.8		16.7		$\chi^2(9)=11.409$
	아이의 양육을 위해	77.3		87.2		81.2		83.3		
	내 자신을 위해	-		2.3		-		-		
	기타	-		1.2		2.0		-		
	계 (명)	100.0(44)		100.0(86)		100.0(101)		100.0(72)		

&lt;부표 3&gt; 계속

		200만원 이하	201~300 만원	301~400 만원	401만원 이상	카이스퀘어검증
가구소득별	생활비의 일부	16.5	13.0	20.5	16.3	$\chi^2(9)=5.152$
	아이의 양육을 위해	81.3	86.0	77.3	81.6	
	내 자신을 위해	1.1	-	2.3	-	
	기타	1.1	1.0	-	2.0	
	계 (명)	100.0(91)	100.0(100)	100.0(44)	100.0(49)	
생활비 수준별	생활비의 일부	14.3	15.7	15.2	17.4	$\chi^2(9)=6.179$
	아이의 양육을 위해	82.1	82.6	82.9	82.6	
	내 자신을 위해	3.6	-	1.0	-	
	기타	-	1.7	1.0	-	
	계 (명)	100.0(28)	100.0(121)	100.0(105)	100.0(4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4&gt; 양육수당의 도움 정도: 집단 간 비교 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매우 도움 됨	-		12.2		12.2		$\chi^2(8)=14.950^*$		
	조금 도움 됨	25.0		33.9		36.5				
	보통	62.5		25.3		29.7				
	별로 도움되지 않음	-		26.7		21.6				
	전혀 도움되지 않음	12.5		1.8		-				
	계 (명)	100.0 (8)		100.0 (221)		100.0 (74)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매우 도움 됨	8.6		15.2		7.0		$\chi^2(8)=11.397$		
	조금 도움 됨	28.4		33.9		43.9				
	보통	34.6		26.7		19.3				
	별로 도움되지 않음	25.9		23.6		26.3				
	전혀 도움되지 않음	2.5		0.6		3.5				
	계 (명)	100.0 (81)		100.0 (165)		100.0 (57)				
		남아			여아					
자녀 성별	매우 도움 됨	12.4			11.2			$\chi^2(4)=4.578$		
	조금 도움 됨	34.3			34.4					
	보통	28.1			26.4					
	별로 도움되지 않음	22.5			28.0					
	전혀 도움되지 않음	2.8			-					
	계 (명)	100.0 (178)			100.0 (125)					
		취업			비취업					
취업 유무별	매우 도움 됨	12.8			11.7			$\chi^2(4)=1.100$		
	조금 도움 됨	31.9			34.8					
	보통	23.4			28.1					
	별로 도움되지 않음	29.8			23.8					
	전혀 도움되지 않음	2.1			1.6					
	계 (명)	100.0 (47)			100.0 (256)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별	매우 도움 됨	-		12.6		11.0		22.2		$\chi^2(20)=15.478$
	조금 도움 됨	66.7		31.9		35.7		33.3		
	보통	33.3		26.7		28.6		11.1		
	별로 도움되지 않음	-		28.1		22.7		22.2		
	전혀 도움되지 않음	-		0.7		1.9		11.1		
	계 (명)	100.0(3)		100.0(135)		100.0(154)		100.0(9)		

## &lt;부표 4&gt; 계속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카이스퀘어검증
양육비 수준별	매우 도움 됨	18.2	12.8	11.9	6.9	$\chi^2(12)=17.645$
	조금 도움 됨	40.9	39.5	30.7	29.2	
	보통	22.7	26.7	32.7	23.6	
	별로 도움되지 않음	15.9	20.9	21.8	38.9	
	전혀 도움되지 않음	2.3	-	3.0	1.4	
	계 (명)	100.0(44)	100.0(86)	100.0(101)	100.0(72)	
		200만원 이하	201~300 만원	301~400 만원	401만원 이상	$\chi^2(12)=11.783$
가구소득별	매우 도움 됨	14.3	8.0	9.1	12.2	
	조금 도움 됨	37.4	36.0	36.4	30.6	
	보통	27.5	32.0	22.7	20.4	
	별로 도움되지 않음	20.9	23.0	27.3	32.7	
	전혀 도움되지 않음	-	1.0	4.5	4.1	
	계 (명)	100.0(91)	100.0(100)	100.0(44)	100.0(49)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 만원	301만원 이상	$\chi^2(12)=20.248^\dagger$
생활비 수준별	매우 도움 됨	21.4	12.4	9.5	8.7	
	조금 도움 됨	28.6	35.5	32.4	39.1	
	보통	35.7	29.8	29.5	13.0	
	별로 도움되지 않음	14.3	22.3	26.7	32.6	
	전혀 도움되지 않음	-	-	1.9	6.5	
	계 (명)	100.0(28)	100.0(121)	100.0(105)	100.0(4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5&gt; 적정 양육수당 월 평균 액수: 집단 간 비교 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10만원	-	1.4	4.1	$\chi^2(10)=5.507$
	11~15만원	-	4.5	5.4	
	16~20만원	62.5	43.9	39.2	
	21~30만원	37.5	39.4	36.5	
	31만원 이상	-	10.0	13.5	
	기타	-	0.9	1.4	
	계 (명)	100.0 (8)	100.0 (221)	100.0 (74)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10만원	1.2	1.8	3.5	$\chi^2(10)=12.554$
	11~15만원	4.9	4.8	3.5	
	16~20만원	44.4	47.3	29.8	
	21~30만원	35.8	35.8	50.9	
	31만원 이상	13.6	9.7	8.8	
	기타	-	0.6	3.5	
	계 (명)	100.0 (81)	100.0 (165)	100.0 (57)	
		남아	여아		
자녀 성별	10만원	1.7	2.4	$\chi^2(5)=3.078$	
	11~15만원	3.9	5.6		
	16~20만원	44.4	41.6		
	21~30만원	40.4	36.0		
	31만원 이상	8.4	13.6		
	기타	1.1	0.8		
	계 (명)	100.0 (178)	100.0 (125)		
		취업	비취업		
취업 유무별	10만원	-	2.3	$\chi^2(5)=4.754$	
	11~15만원	2.1	5.1		
	16~20만원	36.2	44.5		
	21~30만원	48.9	36.7		
	31만원 이상	10.6	10.5		
	기타	2.1	0.8		
	계 (명)	100.0 (47)	100.0 (256)		

&lt;부표 5&gt; 계속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카이스퀘어검증
학력별	10만원	-	0.7	2.6	-	$\chi^2(25)$ =83.863***
	11~15만원	66.7	2.2	5.8	-	
	16~20만원	33.3	44.4	42.2	44.4	
	21~30만원	-	43.0	35.7	44.4	
	31만원 이상	-	8.9	12.3	11.1	
	기타	-	0.7	1.3	-	
	계 (명)	100.0(3)	100.0(135)	100.0(154)	100.0(9)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양육비 수준별	10만원	2.3	3.5	2.0	-	$\chi^2(15)$ =15.770
	11~15만원	6.8	8.1	2.0	2.8	
	16~20만원	43.2	47.7	45.5	34.7	
	21~30만원	34.1	29.1	40.6	50.0	
	31만원 이상	11.4	10.5	8.9	12.5	
	기타	2.3	1.2	1.0	-	
	계 (명)	100.0(44)	100.0(86)	100.0(101)	100.0(72)	
		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가구소득별	10만원	2.2	2.0	2.3	-	$\chi^2(15)$ =17.242
	11~15만원	4.4	6.0	2.3	4.1	
	16~20만원	50.5	40.0	43.2	34.7	
	21~30만원	34.1	39.0	43.2	42.9	
	31만원 이상	7.7	13.0	4.5	18.4	
	기타	1.1	-	4.5	-	
	계 (명)	100.0(91)	100.0(100)	100.0(44)	100.0(49)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생활비 수준별	10만원	-	2.5	2.9	-	$\chi^2(15)$ =18.520
	11~15만원	7.1	4.1	6.7	-	
	16~20만원	42.9	51.2	39.0	30.4	
	21~30만원	35.7	33.9	37.1	56.5	
	31만원 이상	14.3	6.6	13.3	13.0	
	기타	-	1.7	1.0	-	
	계 (명)	100.0(28)	100.0(121)	100.0(105)	100.0(4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6&gt; 양육수당을 받은 후 더 좋은 양육 제공: 집단 간 비교 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매우 그렇다	-		5.4		4.1		$\chi^2(8)=5.500$		
	그렇다	37.5		33.9		40.5				
	보통	62.5		41.2		39.2				
	그렇지 않다	-		17.2		16.2				
	매우 그렇지 않다	-		2.3		-				
	계 (명)	100.0 (8)		100.0 (221)		100.0 (74)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매우 그렇다	6.2		6.1		-		$\chi^2(8)=14.634^{\dagger}$		
	그렇다	33.3		38.8		29.8				
	보통	33.3		40.6		54.4				
	그렇지 않다	23.5		13.9		14.0				
	매우 그렇지 않다	3.7		0.6		1.8				
	계 (명)	100.0 (81)		100.0 (165)		100.0 (57)				
		남아			여아					
자녀 성별	매우 그렇다	5.1			4.8			$\chi^2(4)=1.969$		
	그렇다	37.6			32.8					
	보통	39.3			44.0					
	그렇지 않다	15.7			17.6					
	매우 그렇지 않다	2.2			0.8					
	계 (명)	100.0 (178)			100.0 (125)					
		취업			비취업					
취업 유무별	매우 그렇다	2.1			5.5			$\chi^2(4)=3.659$		
	그렇다	31.9			36.3					
	보통	42.6			41.0					
	그렇지 않다	19.1			16.0					
	매우 그렇지 않다	4.3			1.2					
	계 (명)	100.0 (47)			100.0 (256)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별	매우 그렇다	-		6.7		3.2		11.1		$\chi^2(20)=19.903$
	그렇다	100.0		43.0		29.2		22.2		
	보통	-		36.3		45.5		44.4		
	그렇지 않다	-		13.3		19.5		22.2		
	매우 그렇지 않다	-		0.7		2.6		-		
	계 (명)	100.0(3)		100.0(135)		100.0(154)		100.0(9)		

&lt;부표 6&gt; 계속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카이스퀘어검증
양육비 수준별	매우 그렇다	6.8	1.2	7.9	4.2	$\chi^2(12)=13.893$
	그렇다	36.4	34.9	38.6	31.9	
	보통	43.2	47.7	32.7	44.4	
	그렇지 않다	13.6	16.3	16.8	18.1	
	매우 그렇지 않다	-	-	4.0	1.4	
	계 (명)	100.0(44)	100.0(86)	100.0(101)	100.0(72)	
		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chi^2(12)=18.676^\dagger$
가구소득별	매우 그렇다	6.6	4.0	4.5	-	
	그렇다	42.9	32.0	34.1	28.6	
	보통	38.5	45.0	34.1	49.0	
	그렇지 않다	11.0	19.0	20.5	20.4	
	매우 그렇지 않다	1.1	-	6.8	2.0	
	계 (명)	100.0(91)	100.0(100)	100.0(44)	100.0(49)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chi^2(12)=24.307^*$
생활비 수준별	매우 그렇다	14.3	4.1	3.8	2.2	
	그렇다	32.1	43.8	27.6	34.8	
	보통	39.3	35.5	50.5	37.0	
	그렇지 않다	10.7	16.5	17.1	19.6	
	매우 그렇지 않다	3.6	-	1.0	6.5	
	계 (명)	100.0(28)	100.0(121)	100.0(105)	100.0(46)	

† p<0.1, \*p<0.05, \*\*<0.01,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7&gt; 취업 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선택 여부: 집단 간 비교 분석

(단위: 명, %)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 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62.5	61.1	51.4	$\chi^2(6)=6.862$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25.0	13.1	14.9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 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12.5	17.2	28.4	
	기타	-	8.6	5.4	
	계 (명)	100.0 (8)	100.0 (221)	100.0 (74)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 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58.0	57.0	64.9	$\chi^2(6)=1.938$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3.6	15.2	10.5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 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22.2	19.4	17.5	
	기타	6.2	8.5	7.0	
	계 (명)	100.0 (81)	100.0 (165)	100.0 (57)	
		남아		여아	
자녀 성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 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60.7		56.0	$\chi^2(3)=1.026$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2.4		16.0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 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19.7		20.0	
	기타	7.3		8.0	
	계 (명)	100.0 (178)		100.0 (125)	
		취업		비취업	
취업 유무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 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59.6		58.6	$\chi^2(3)=3.296$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6.4		15.2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 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23.4		19.1	
	기타	10.6		7.0	
	계 (명)	100.0 (47)		100.0 (256)	

## &lt;부표 7&gt; 계속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33.3	57.8	61.0	55.6	$\chi^2(15)=27.366^*$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33.3	17.8	9.7	22.2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33.3	14.8	24.0	11.1	
	기타	-	9.6	5.2	11.1	
	계 (명)	100.0(3)	100.0(135)	100.0(154)	100.0(9)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양육비 수준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54.5	58.1	59.4	61.1	$\chi^2(9)=9.978$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8.2	18.6	10.9	9.7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18.2	20.9	21.8	16.7	
	기타	9.1	2.3	7.9	12.5	
	계 (명)	100.0 (44)	100.0(86)	100.0(101)	100.0(72)	
		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가구 소득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62.6	55.0	63.6	63.3	$\chi^2(9)=10.436$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6.5	13.0	9.1	4.1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14.3	22.0	25.0	24.5	
	기타	6.6	10.0	2.3	8.2	
	계 (명)	100.0(91)	100.0(100)	100.0(44)	100.0(49)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생활비 수준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46.4	61.2	58.1	60.9	$\chi^2(9)=9.452$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7.9	15.7	14.3	4.3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25.0	14.9	22.9	23.9	
	기타	10.7	8.3	4.8	10.9	
	계 (명)	100.0(28)	100.0(121)	100.0(105)	100.0(4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8&gt; 희망 양육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집단 간 비교 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중		
모의 연령별	예	100.0		69.2		64.9		$\chi^2(4)=4.629$		
	아니오	-		29.4		32.4				
	기타	-		1.4		2.7				
	계 (명)	100.0 (8)		100.0 (221)		100.0 (74)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chi^2(4)=3.518$		
자녀 연령별	예	71.6		70.9		59.6				
	아니오	25.9		27.9		38.6				
	기타	2.5		1.2		1.8				
	계 (명)	100.0 (81)		100.0 (165)		100.0 (57)				
		남아			여아			$\chi^2(2)=3.687$		
자녀 성별	예	67.4			71.2					
	아니오	29.8			28.8					
	기타	2.8			-					
	계 (명)	100.0 (178)			100.0 (125)					
		취업			비취업			$\chi^2(2)=26.385^{***}$		
취업 유무별	예	44.7			73.4					
	아니오	46.8			26.2					
	기타	8.5			0.4					
	계 (명)	100.0 (47)			100.0 (256)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chi^2(10)=30.404^{**}$
학력별	예	33.3		74.8		65.6		44.4		
	아니오	66.7		24.4		33.1		33.3		
	기타	-		0.7		1.3		22.2		
	계 (명)	100.0(3)		100.0(135)		100.0(154)		100.0(9)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chi^2(6)=5.391$
양육비 수준별	예	65.9		62.8		74.3		70.8		
	아니오	34.1		36.0		23.8		26.4		
	기타	-		1.2		2.0		2.8		
	계 (명)	100.0(44)		100.0(86)		100.0(101)		100.0(72)		

&lt;부표 8&gt; 계속

		200만원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이상	카이스퀘어검증
가구소득별	예	76.9	71.0	77.3	44.9	$\chi^2(6)=31.672^{***}$
	아니오	23.1	29.0	22.7	46.9	
	기타	-	-	-	8.2	
	계 (명)	100.0(91)	100.0(100)	100.0(44)	100.0(49)	
		100만원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이상	
생활비 수준별	예	75.0	76.0	64.8	56.5	$\chi^2(6)=22.165^{**}$
	아니오	25.0	23.1	35.2	34.8	
	기타	-	0.8	-	8.7	
	계 (명)	100.0(28)	100.0(121)	100.0(105)	100.0(4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부표 9> 직장을 포기하기 위한 자녀 1인당 양육수당 액수: 집단 간 비교 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20만원 이하	-	0.7	2.1	$\chi^2(12)=7.450$
	20~29만원	12.5	13.2	12.5	
	30~39만원	62.5	40.8	54.2	
	40~49만원	-	6.6	6.3	
	50~59만원	12.5	28.9	20.8	
	60~99만원	12.5	5.9	2.1	
	100만원 이상	-	3.9	2.1	
	계 (명)	100.0 (8)	100.0 (152)	100.0 (48)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chi^2(12)=29.555^{**}$
자녀 연령별	20만원 이하	-	-	5.9	
	20~29만원	10.3	14.7	11.8	
	30~39만원	37.9	42.2	64.7	
	40~49만원	5.2	6.0	8.8	
	50~59만원	29.3	31.0	5.9	
	60~99만원	10.3	4.3	-	
	100만원 이상	6.9	1.7	2.9	
	계 (명)	100.0 (58)	100.0 (116)	100.0 (34)	
		남아		여아	$\chi^2(6)=1.836$
자녀 성별	20만원 이하	0.8		1.1	
	20~29만원	13.3		12.5	
	30~39만원	46.7		42.0	
	40~49만원	5.8		6.8	
	50~59만원	25.0		28.4	
	60~99만원	4.2		6.8	
	100만원 이상	4.2		2.3	
	계 (명)	100.0 (120)		100.0 (88)	
		취업		비취업	$\chi^2(6)=9.834$
취업 유무별	20만원 이하	-		1.1	
	20~29만원	-		14.4	
	30~39만원	38.1		45.5	
	40~49만원	-		7.0	
	50~59만원	47.6		24.1	
	60~99만원	9.5		4.8	
	100만원 이상	4.8		3.2	
	계 (명)	100.0 (21)		100.0 (187)	

&lt;부표 9&gt; 계속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카이스퀘어검증
학력별	20만원 이하	-	-	2.0	-	$\chi^2(30)=22.177$
	20~29만원	-	13.0	11.9	25.0	
	30~39만원	100.0	50.0	40.6	25.0	
	40~49만원	-	6.0	6.9	-	
	50~59만원	-	26.0	26.7	25.0	
	60~99만원	-	4.0	5.9	25.0	
	100만원 이상	-	1.0	5.9	-	
	계 (명)	100.0(1)	100.0(100)	100.0(101)	100.0(4)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양육비 수준별	20만원 이하	3.4	1.9	-	-	$\chi^2(18)=30.631^*$
	20~29만원	31.0	13.2	12.0	3.9	
	30~39만원	48.3	52.8	42.7	37.3	
	40~49만원	6.9	1.9	9.3	5.9	
	50~59만원	10.3	24.5	25.3	39.2	
	60~99만원	-	1.9	6.7	9.8	
	100만원 이상	-	3.8	4.0	3.9	
	계 (명)	100.0(29)	100.0(53)	100.0(75)	100.0(51)	
		200만원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이상	
가구소득별	20만원 이하	-	1.4	-	-	$\chi^2(18)=21.451$
	20~29만원	14.5	16.9	5.9	4.5	
	30~39만원	47.8	40.8	55.9	27.3	
	40~49만원	7.2	5.6	5.9	4.5	
	50~59만원	24.6	25.4	23.5	45.5	
	60~99만원	4.3	8.5	-	9.1	
	100만원 이상	1.4	1.4	8.8	9.1	
	계 (명)	100.0(69)	100.0(71)	100.0(34)	100.0(22)	
		100만원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이상	
생활비 수준별	20만원 이하	-	1.1	1.5	-	$\chi^2(18)=22.242$
	20~29만원	19.0	15.4	10.3	3.8	
	30~39만원	38.1	47.3	48.5	30.8	
	40~49만원	4.8	7.7	5.9	3.8	
	50~59만원	28.6	25.3	20.6	46.2	
	60~99만원	9.5	2.2	8.8	3.8	
	100만원 이상	-	1.1	4.4	11.5	
	계 (명)	100.0(21)	100.0(91)	100.0(68)	100.0(2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10&gt; 양육수당 도입시 가정에서 양육 여부: 집단간 비교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양육	47.4		35.8		23.3				
	비양육	52.6		64.2		76.7				
	계 (명)	100.0 (57)		100.0 (570)		100.0 (90)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chi^2(2)$ =91.600***		
자녀 연령별	양육	59.5		33.2		18.6				
	비양육	40.5		66.8		81.4				
	계 (명)	100.0 (215)		100.0 (211)		100.0 (291)				
		남아			여아			$\chi^2(1)$ =0.314		
자녀 성별	양육	36.2			34.2					
	비양육	63.8			65.8					
	계 (명)	100.0 (354)			100.0 (363)					
		취업			비취업			$\chi^2(1)$ =22.653***		
취업 유무별	양육	22.2			40.7					
	비양육	77.8			59.3					
	계 (명)	100.0 (216)			100.0 (501)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chi^2(3)$ =1.529
학력별	양육	42.9		38.6		34.0		32.5		
	비양육	57.1		61.4		66.0		67.5		
	계 (명)	100.0 (70)		100.0 (184)		100.0 (485)		100.0 (40)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chi^2(3)$ =1.737
양육비 수준별	양육	33.8		32.4		36.3		38.2		
	비양육	66.2		67.6		63.7		61.8		
	계 (명)	100.0 (74)		100.0 (238)		100.0 (223)		100.0 (178)		
		200만원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이상		$\chi^2(3)$ =17.908***
가구 소득별	양육	37.3		41.8		37.7		21.1		
	비양육	62.7		58.2		62.3		78.9		
	계 (명)	100.0 (166)		100.0 (232)		100.0 (130)		100.0 (147)		
		100만원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이상		$\chi^2(3)$ =12.322**
생활비 수준별	양육	42.7		38.2		32.5		20.9		
	비양육	57.3		61.8		67.5		79.1		
	계 (명)	100.0 (110)		100.0 (319)		100.0 (191)		100.0 (8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11&gt; 양육수당 도입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유: 집단간 비교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 검증
모의 연령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37.0	42.6	28.6	$\chi^2(10)$ =9.237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25.9	34.3	42.9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25.9	9.8	19.0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3.7	2.5	-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7.4	9.8	9.5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	1.0	-	
	계 (명)	100.0 (27)	100.0 (204)	100.0 (21)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54.7	32.9	18.5	$\chi^2(10)$ =29.913***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25.0	38.6	50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9.4	15.7	14.8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3.9	-	1.9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7.0	11.4	13.0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	1.4	1.9	
	계 (명)	100.0 (128)	100.0 (70)	100.0 (54)	
		남아	여아		
자녀 성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44.5	37.1	$\chi^2(5)$ =4.525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2.8	35.5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11.7	12.9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1.6	3.2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7.8	11.3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1.6	-		
	계 (명)	100.0 (128)	100.0 (124)		
		취업	비취업		
취업 유무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45.8	39.7	$\chi^2(5)$ =3.370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25	36.3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14.6	11.8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4.2	2.0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10.4	9.3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	1.0		
	계 (명)	100.0 (48)	100.0 (204)		



&lt;부표 11&gt; 계속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카이스퀘어 검증
학력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33.3	36.6	43.6	30.8	$\chi^2(15)$ =16.014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	31.0	35.2	46.2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33.3	11.3	12.1	15.4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	1.4	3.0	-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33.3	18.3	5.5	7.7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	1.4	0.6	-	
	계 (명)	100.0(3)	100.0(71)	100.0(165)	100.0(13)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양육비 수준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36.0	39.0	44.4	39.7	$\chi^2(15)$ =30.514*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2.0	42.9	27.2	33.8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8.0	6.5	14.8	17.6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8.0	1.3	2.5	1.5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8.0	10.4	11.1	7.4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8.0	-	-	-	
	계 (명)	100.0(25)	100.0(77)	100.0(81)	100.0(68)	
		200만원 이하	201~300 만원	301~400 만원	401만원 이상	
가구소 득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40.3	36.1	53.1	35.5	$\chi^2(15)$ =16.264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5.5	36.1	28.6	41.9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11.3	11.3	8.2	16.1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1.6	1.0	4.1	6.5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11.3	13.4	6.1	-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	2.1	-	-	
	계 (명)	100.0(62)	100.0(97)	100.0(49)	100.0(31)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 만원	301만원	
생활비 수준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29.8	45.9	48.4	16.7	$\chi^2(15)$ =18.254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4.0	32.8	32.3	50.0	
	보육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19.1	9.8	8.1	22.2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	3.3	1.6	5.6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14.9	7.4	9.7	5.6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2.1	0.8	-	-	
	계 (명)	100.0(47)	100.0(122)	100.0(62)	100.0(18)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부표 12> 양육수당이 도입 되어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집단간 비교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		3.0	4.3	$\chi^2(6)=4.809$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56.7		63.7	65.2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40.0		28.1	29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3.3		5.2	1.4	
	계 (명)	100.0 (30)		100.0 (366)	100.0 (69)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4.6		2.1	3	$\chi^2(6)=4.792$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57.5		63.1	65.8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31.0		31.9	26.6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6.9		2.8	4.6	
	계 (명)	100.0 (87)		100.0 (141)	100.0 (237)	
		남아		여아		$\chi^2(3)=6.778^+$
자녀 성별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3.5		2.5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68.1		59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23.5		34.3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4.9		4.2		
	계 (명)	100.0 (226)		100.0 (239)		
		취업		비취업		$\chi^2(3)$ =93.262***
취업 유무별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1.2		4.0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39.3		77.1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56.0		13.8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3.6		5.1		
	계 (명)	100.0 (168)		100.0 (297)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chi^2(9)$ =12.524 <sup>+</sup>
학력별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	1.8	3.4	3.7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75.0	67.3	63.4	44.4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29.2	28.1	44.4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25.0	1.8	5.0	7.4	
	계 (명)	100.0(4)	100.0(113)	100.0(320)	100.0(27)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chi^2(9)=6.876$
양육비 수준별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4.1	3.7	2.8	1.8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67.3	65.8	62	60.0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20.4	26.1	32.4	32.7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8.2	4.3	2.8	5.5	
	계 (명)	100.0(49)	100.0(161)	100.0(142)	100.0(110)	

&lt;부표 12&gt; 계속

		200만원 이하	201~300 만원	301~400 만원	401만원 이상	카이스퀘어검증
가구 소득별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3.8	4.4	1.2	1.7	$\chi^2(9)$ =15.217 <sup>†</sup>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63.5	69.6	69.1	52.6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27.9	23.0	27.2	37.9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4.8	3.0	2.5	7.8	
	계 (명)	100.0(104)	100.0(135)	100.0(81)	100.0(116)	
생활비 수준별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 만원	301만원 이상	$\chi^2(9)$ =7.903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3.2	2.5	3.9	2.9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68.3	65.5	55.8	70.6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22.2	27.9	36.4	22.1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6.3	4.1	3.9	4.4	
	계 (명)	100.0(63)	100.0(197)	100.0(129)	100.0(68)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13&gt; 양육수당의 주 사용처: 집단간 비교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생활비의 일부	5.3	6.3	12.2	$\chi^2(4)$ =4.704
	아이의 양육을 위해	94.7	93.5	87.8	
	기타	-	0.2	-	
	계 (명)	100.0 (57)	100.0 (570)	100.0 (90)	
자녀 연령별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chi^2(4)$ =8.164 <sup>†</sup>
	생활비의 일부	3.7	7.1	9.3	
	아이의 양육을 위해	95.8	92.9	90.7	
	기타	0.5	-	-	
	계 (명)	100.0 (215)	100.0 (211)	100.0 (291)	
자녀 성별		남아		여아	$\chi^2(2)$ =3.792
	생활비의 일부	5.4		8.5	
	아이의 양육을 위해	94.6		91.2	
	기타	-		0.3	
	계 (명)	100.0 (354)		100.0 (363)	

&lt;부표 13&gt; 계속

		취업		비취업		카이스퀘어검증
취업 유무별	생활비의 일부	9.3		6.0		
	아이의 양육을 위해	90.7		93.8		
	기타	-		0.2		
	계 (명)	100.0 (216)		100.0 (501)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chi^2(6)=8.281$
학력별	생활비의 일부	28.6	7.1	6.4	7.5	
	아이의 양육을 위해	71.4	92.4	93.6	92.5	
	기타	-	0.5	-	-	
	계 (명)	100.0(7)	100.0(184)	100.0(485)	100.0(40)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chi^2(6)=13.352^*$
양육비 수준별	생활비의 일부	9.5	10.5	5.8	2.8	
	아이의 양육을 위해	90.5	89.5	94.2	96.6	
	기타	-	-	-	0.6	
	계 (명)	100.0(74)	100.0(238)	100.0(223)	100.0(178)	
		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chi^2(6)=13.948^*$
가구소득별	생활비의 일부	6.6	5.2	3.1	12.2	
	아이의 양육을 위해	92.8	94.8	96.9	87.8	
	기타	0.6	-	-	-	
	계 (명)	100.0(166)	100.0(232)	100.0(130)	100.0(147)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chi^2(6)=3.629$
생활비 수준별	생활비의 일부	5.5	6.3	7.9	10.5	
	아이의 양육을 위해	94.5	93.4	92.1	89.5	
	기타	-	0.3	-	-	
	계 (명)	100.0(110)	100.0(319)	100.0(191)	100.0(8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14&gt; 양육수당의 도움정도: 집단간 비교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매우 도움됨	22.8		19.6		14.4		$\chi^2(8)=10.209$		
	조금 도움됨	50.9		41.4		36.7				
	보통	15.8		19.6		28.9				
	별로 도움되지 않음	10.5		18.1		17.8				
	전혀 도움되지 않음	-		1.2		2.2				
	계 (명)	100.0 (57)		100.0 (570)		100.0 (90)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매우 도움됨	24.2		20.4		14.8		$\chi^2(8)=15.115^*$		
	조금 도움됨	45.1		37.9		41.6				
	보통	18.1		22.3		21.0				
	별로 도움되지 않음	11.6		18.0		21.3				
	전혀 도움되지 않음	0.9		1.4		1.4				
	계 (명)	100.0 (215)		100.0 (211)		100.0 (291)				
		남아			여아					
자녀 성별	매우 도움됨	18.9			19.6			$\chi^2(4)=0.455$		
	조금 도움됨	42.1			41.0					
	보통	19.8			21.2					
	별로 도움되지 않음	17.8			17.1					
	전혀 도움되지 않음	1.4			1.1					
	계 (명)	100.0 (354)			100.0 (363)					
		취업			비취업					
취업 유무별	매우 도움됨	19.4			19.2			$\chi^2(4)=13.784^{**}$		
	조금 도움됨	35.6			44.1					
	보통	18.5			21.4					
	별로 도움되지 않음	24.1			14.6					
	전혀 도움되지 않음	2.3			0.8					
	계 (명)	100.0 (216)			100.0 (501)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별	매우 도움됨	-		23.9		17.5		22.5		$\chi^2(12)=15.655$
	조금 도움됨	71.4		41.3		41.0		45.0		
	보통	28.6		20.1		21.6		7.5		
	별로 도움되지 않음	-		14.1		18.1		25.0		
	전혀 도움되지 않음	-		0.5		1.6		-		
	계 (명)	100.0(7)		100.0(184)		100.0(485)		100.0(40)		

&lt;부표 14&gt; 계속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카이스퀘어검증
양육비 수준별	매우 도움됨	23.0	18.5	19.7	18.5	$\chi^2(12)=11.064$
	조금 도움됨	40.5	43.3	43.5	37.1	
	보통	24.3	21.0	17.5	22.5	
	별로 도움되지 않음	10.8	16.8	18.4	19.1	
	전혀 도움되지 않음	1.4	0.4	0.9	2.8	
	계 (명)	100.0(74)	100.0(238)	100.0(223)	100.0(178)	
		200만원 이하	201~300 만원	301~400 만원	401만원 이상	$\chi^2(12)$ =28.369**
가구 소득별	매우 도움됨	23.5	18.5	22.3	15.0	
	조금 도움됨	46.4	45.3	39.2	35.4	
	보통	19.9	22.8	20.0	20.4	
	별로 도움되지 않음	9.6	12.9	17.7	26.5	
	전혀 도움되지 않음	0.6	0.4	0.8	2.7	
	계 (명)	100.0(166)	100.0(232)	100.0(130)	100.0(147)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 만원	301만원 이상	$\chi^2(12)=18.214$
생활비 수준별	매우 도움됨	17.3	21.6	17.3	16.3	
	조금 도움됨	44.5	42.3	43.5	33.7	
	보통	25.5	20.4	17.8	20.9	
	별로 도움되지 않음	10.9	15.4	19.4	26.7	
	전혀 도움되지 않음	1.8	0.3	2.1	2.3	
	계 (명)	100.0(110)	100.0(319)	100.0(191)	100.0(8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15&gt; 양육수당을 받은 후 더 좋은 양육 제공: 집단간 비교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매우 그렇다	22.8		35.6		30.0		$\chi^2(8)=12.169$
	그렇다	64.9		43.7		50.0		
	보통	10.5		17.7		15.6		
	그렇지 않다	1.8		2.5		4.4		
	매우 그렇지 않다	-		0.5		-		
	계 (명)	100.0 (57)		100.0 (570)		100.0 (90)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매우 그렇다	39.1		35.1		29.2		$\chi^2(8)=9.134$
	그렇다	44.2		44.5		48.8		
	보통	14.9		16.6		18.6		
	그렇지 않다	1.4		3.8		2.7		
	매우 그렇지 않다	0.5		-		0.7		
	계 (명)	100.0 (215)		100.0 (211)		100.0 (291)		
		남아			여아			
자녀 성별	매우 그렇다	34.5			33.3			$\chi^2(4)=9.271^*$
	그렇다	47.5			44.9			
	보통	16.7			17.1			
	그렇지 않다	0.8			4.4			
	매우 그렇지 않다	0.6			0.3			
	계 (명)	100.0 (354)			100.0 (363)			
		취업			비취업			
취업 유무별	매우 그렇다	35.6			33.1			$\chi^2(4)=8.156^*$
	그렇다	45.8			46.3			
	보통	14.8			17.8			
	그렇지 않다	2.3			2.8			
	매우 그렇지 않다	1.4			-			
	계 (명)	100.0 (216)			100.0 (501)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별	매우 그렇다	42.9	35.9	32.8	37.5		$\chi^2(12)=2.924$	
	그렇다	42.9	46.2	46.4	42.5			
	보통	14.3	15.2	17.5	17.5			
	그렇지 않다	-	2.7	2.7	2.5			
	매우 그렇지 않다	-	-	0.6	-			
	계 (명)	100.0(7)	100.0(184)	100.0(485)	100.0(40)			

&lt;부표 15&gt; 계속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카이스퀘어검증
양육비 수준별	매우 그렇다	33.8	31.5	35.0	35.4	$\chi^2(12)=12.413$
	그렇다	47.3	45.8	48.0	44.4	
	보통	18.9	19.7	12.6	17.4	
	그렇지 않다	-	2.9	4.0	1.7	
	매우 그렇지 않다	-	-	0.4	1.1	
	계 (명)	100.0(74)	100.0(238)	100.0(223)	100.0(178)	
		200만원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이상	$\chi^2(12)=13.784$
가구소득별	매우 그렇다	34.3	35.8	34.6	29.9	
	그렇다	45.8	48.3	42.3	48.3	
	보통	17.5	13.8	16.9	19.0	
	그렇지 않다	2.4	2.2	4.6	2.7	
	매우 그렇지 않다	-	-	1.5	-	
	계 (명)	100.0(166)	100.0(232)	100.0(130)	100.0(147)	
		100만원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이상	$\chi^2(12)=8.023$
생활비 수준별	매우 그렇다	35.5	34.2	33.0	33.7	
	그렇다	40.9	48.6	46.6	45.3	
	보통	20.9	14.7	16.8	16.3	
	그렇지 않다	2.7	2.5	2.6	3.5	
	매우 그렇지 않다	-	-	1.0	1.2	
	계 (명)	100.0(110)	100.0(319)	100.0(191)	100.0(8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16&gt; 양육수당 적정 액수: 집단간 비교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10만원	8.8	4.7	6.7	$\chi^2(10)$ =24.043**
	11~15만원	14.0	14.0	4.4	
	16~20만원	45.6	41.8	45.6	
	21~30만원	24.6	25.8	25.6	
	31만원 이상	7.0	13.7	15.6	
	기타	-		2.2	
	계 (명)	100.0 (57)	100.0 (570)	100.0 (90)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10만원	5.6	7.1	3.8	$\chi^2(10)$ =9.822
	11~15만원	14.9	12.8	11.3	
	16~20만원	39.1	43.1	44.7	
	21~30만원	26.0	26.5	24.7	
	31만원 이상	14.4	10.4	14.8	
	기타	-	-	0.7	
	계 (명)	100.0 (215)	100.0 (211)	100.0 (291)	
		남아	여아		
자녀 성별	10만원	5.6	5.0	$\chi^2(5)$ =6.584	
	11~15만원	11.0	14.6		
	16~20만원	41.5	43.5		
	21~30만원	26.3	25.1		
	31만원 이상	15.5	11.3		
	기타	-	0.6		
	계 (명)	100.0 (354)	100.0 (363)		
		취업	비취업		
취업 유무별	10만원	6.0	5.0	$\chi^2(5)$ =18.972*	
	11~15만원	9.7	14.2		
	16~20만원	36.1	45.3		
	21~30만원	26.9	25.1		
	31만원 이상	20.8	10.2		
	기타	0.5	0.2		
	계 (명)	100.0 (216)	100.0 (501)		

&lt;부표 16&gt; 계속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카이스퀘어검증
학력별	10만원	-	5.4	5.2	7.5	$\chi^2(15)=21.270$
	11~15만원	42.9	13.0	12.8	7.5	
	16~20만원	42.9	44.6	42.3	35.0	
	21~30만원	14.3	24.5	26.6	22.5	
	31만원 이상	-	11.4	13.2	27.5	
	기타	-	1.1	-	-	
	계 (명)	100.0(7)	100.0(184)	100.0(485)	100.0(40)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chi^2(15)=22.981^{\dagger}$
양육비 수준별	10만원	8.1	5.5	5.4	3.9	
	11~15만원	14.9	15.1	13.5	8.4	
	16~20만원	47.3	47.9	38.1	38.8	
	21~30만원	17.6	22.7	27.4	31.5	
	31만원 이상	12.2	8.4	15.2	17.4	
	기타	-	0.4	0.4	-	
	계 (명)	100.0(74)	100.0(238)	100.0(223)	100.0(178)	
		200만원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이상	$\chi^2(15)=35.252^*$
가구소득별	10만원	4.2	7.3	3.8	5.4	
	11~15만원	22.9	11.6	10.8	7.5	
	16~20만원	41.0	44.4	50.0	36.1	
	21~30만원	18.7	25.0	25.4	31.3	
	31만원 이상	12.7	11.2	10.0	19.7	
	기타	0.6	0.4	-	-	
	계 (명)	100.0(166)	100.0(232)	100.0(130)	100.0(147)	
		100만원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이상	$\chi^2(15)=18.344$
생활비 수준별	10만원	8.2	4.1	7.3	2.3	
	11~15만원	13.6	15.4	11.5	7.0	
	16~20만원	43.6	42.3	39.8	44.2	
	21~30만원	21.8	24.5	30.4	26.7	
	31만원 이상	12.7	13.2	11.0	19.8	
	기타	-	0.6	-	-	
	계 (명)	100.0(110)	100.0(319)	100.0(191)	100.0(8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17&gt; 취업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여부: 집단간 비교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52.6	65.4	64.4	$\chi^2(6)=7.262$
	양육수당을 박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5.8	11.9	16.7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22.8	18.8	15.6	
	기타	8.8	3.9	3.3	
	계 (명)	100.0 (57)	100.0 (570)	100.0 (90)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55.8	65.4	69.8	$\chi^2(6)=13.785^*$
	양육수당을 박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5.8	14.7	9.3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24.2	15.6	16.8	
	기타	4.2	4.3	4.1	
	계 (명)	100.0 (215)	100.0 (211)	100.0 (291)	
		남아		여아	
자녀 성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64.1		64.5	$\chi^2(3)=0.439$
	양육수당을 박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3.3		12.4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18.1		19.3	
	기타	4.5		3.9	
	계 (명)	100.0 (354)		100.0 (363)	
		취업		비취업	
취업 유무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71.8		61.1	$\chi^2(3)=37.776^{***}$
	양육수당을 박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3.7		16.8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24.1		16.4	
	기타	0.5		5.8	
	계 (명)	100.0 (216)		100.0 (501)	

&lt;부표 17&gt; 계속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카이스퀘어검증
학력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42.9	67.9	63.1	65.0	$\chi^2(9)$ =36.585***
	양육수당을 박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4.3	15.2	12.6	5.0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	15.8	19.6	25.0	
	기타	42.9	1.1	4.7	5.0	
	계 (명)	100.0(7)	100.0(184)	100.0(485)	100.0(40)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양육비 수준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59.5	66.4	65.0	62.4	$\chi^2(9)$ =13.566
	양육수당을 박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2.2	10.9	14.3	14.0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24.3	16.0	16.6	22.5	
	기타	4.1	6.7	4.0	1.1	
	계 (명)	100.0(74)	100.0(238)	100.0(223)	100.0(178)	
		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가구 소득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64.5	62.9	64.6	64.6	$\chi^2(9)$ =14.507
	양육수당을 박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5.1	15.9	14.6	6.1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14.5	17.2	17.7	25.2	
	기타	6.0	3.9	3.1	4.1	
	계 (명)	100.0(166)	100.0(232)	100.0(130)	100.0(147)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생활비 수준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63.6	64.9	66.5	58.1	$\chi^2(9)$ =11.156
	양육수당을 박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3.6	14.4	9.9	10.5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17.3	15.7	20.9	27.9	
	기타	5.5	5.0	2.6	3.5	
	계 (명)	100.0(110)	100.0(319)	100.0(191)	100.0(86)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18&gt; 희망 양육 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집단간 비교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취업을 포기하겠다	52.6		53.9		51.1		$\chi^2(4)=1.322$		
	취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45.6		43.5		47.8				
	기타	1.8		2.6		1.1				
	계 (명)	100.0 (57)		100.0 (570)		100.0 (90)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취업을 포기하겠다	60.0		56.9		46.0		$\chi^2(4)=11.165^{\dagger}$		
	취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38.1		40.8		51.2				
	기타	1.9		2.4		2.7				
	계 (명)	100.0 (215)		100.0 (211)		100.0 (291)				
		남아			여아					
자녀 성별	취업을 포기하겠다	52.8			54			$\chi^2(2)=0.161$		
	취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44.6			43.8					
	기타	2.5			2.2					
	계 (명)	100.0 (354)			100.0 (363)					
		취업			비취업					
취업 유무별	취업을 포기하겠다	42.1			58.3			$\chi^2(2)=27.746^{***}$		
	취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57.9			38.3					
	기타	-			3.4					
	계 (명)	100.0 (216)			100.0 (501)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별	취업을 포기하겠다	85.7		58.2		53.2		27.5		$\chi^2(6)=22.317^{***}$
	취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		40.8		44.3		67.5		
	기타	14.3		1.1		2.5		5.0		
	계 (명)	100.0 (7)		100.0 (184)		100.0 (485)		100.0 (40)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양육비 수준별	취업을 포기하겠다	40.5		50.0		56.1		61.2		$\chi^2(6)=14.222^*$
	취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56.8		46.2		41.7		38.2		
	기타	2.7		3.8		2.2		0.6		
	계 (명)	100.0 (74)		100.0 (238)		100.0 (223)		100.0 (178)		
		200만원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이상		
가구 소득별	취업을 포기하겠다	61.4		62.1		50.8		34.0		$\chi^2(6)=34.522^{***}$
	취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36.1		35.8		46.2		63.3		
	기타	2.4		2.2		3.1		2.7		
	계 (명)	100.0 (166)		100.0 (232)		100.0 (130)		100.0 (147)		
		100만원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이상		
생활비 수준별	취업을 포기하겠다	57.3		58.3		49.2		39.5		$\chi^2(6)=13.658^*$
	취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40.0		38.9		49.2		58.1		
	기타	2.7		2.8		1.6		2.3		
	계 (명)	100.0 (110)		100.0 (319)		100.0 (191)		100.0 (86)		

 $\dagger$  p<0.1, \*p<0.05, \*\*<0.01,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19&gt; 직장을 포기하기 위한 자녀 1인당 양육: 집단간 비교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중
모의 연령별	20만원 이하	10.0	2.3	4.3	$\chi^2(12)=11.768$
	20~29만원	3.3	10.4	8.7	
	30~39만원	23.3	31.6	34.8	
	40~49만원	16.7	8.1	4.3	
	50~59만원	26.7	28.0	30.4	
	60~99만원	6.7	7.5	8.7	
	100만원 이상	13.3	12.1	8.7	
	계 (명)	100.0 (30)	100.0 (307)	100.0 (46)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chi^2(12)=6.041$
자녀 연령별	20만원 이하	4.7	3.3	1.5	
	20~29만원	7.8	10.0	11.2	
	30~39만원	29.5	30.8	33.6	
	40~49만원	9.3	7.5	8.2	
	50~59만원	29.5	31.7	23.9	
	60~99만원	7.8	5.8	9.0	
	100만원 이상	11.6	10.8	12.7	
	계 (명)	100.0 (129)	100.0 (120)	100.0 (134)	
		남아		여아	$\chi^2(6)=4.176$
자녀 성별	20만원 이하	3.2		3.1	
	20~29만원	8.0		11.2	
	30~39만원	33.2		29.6	
	40~49만원	7.5		9.2	
	50~59만원	31.0		25.5	
	60~99만원	7.5		7.7	
	100만원 이상	9.6		13.8	
	계 (명)	100.0 (187)		100.0 (196)	
		취업		비취업	$\chi^2(6)=18.925^{**}$
취업 유무별	20만원 이하	-		4.1	
	20~29만원	4.4		11.3	
	30~39만원	24.2		33.6	
	40~49만원	11.0		7.5	
	50~59만원	29.7		27.7	
	60~99만원	13.2		5.8	
	100만원 이상	17.6		9.9	
	계 (명)	100.0 (91)		100.0 (292)	

&lt;부표 19&gt; 계속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chi^2(18)=22.492$
학력별	20만원 이하	-	5.6	2.3	-	
	20~29만원	50.0	6.5	10.5	-	
	30~39만원	33.3	32.7	29.8	45.5	
	40~49만원	-	7.5	8.9	9.1	
	50~59만원	16.7	29.0	28.3	27.3	
	60~99만원	-	10.3	7.0	-	
	100만원 이상	-	8.4	13.2	18.2	
	계 (명)	100.0(6)	100.0(107)	100.0(258)	100.0(11)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chi^2(18)=26.210^{\dagger}$
양유비 수준별	20만원 이하	3.3	3.4	2.4	3.7	
	20~29만원	16.7	15.1	8.0	3.7	
	30~39만원	26.7	33.6	37.6	22.9	
	40~49만원	10.0	5.9	8.0	11.0	
	50~59만원	36.7	26.9	23.2	33.0	
	60~99만원	3.3	6.7	8.8	8.3	
	100만원 이상	3.3	8.4	12.0	17.4	
	계 (명)	100.0(30)	100.0(119)	100.0(125)	100.0(109)	
		200만원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이상	$\chi^2(18)=33.981^*$
가구소득별	20만원 이하	2.9	2.8	6.1	2.0	
	20~29만원	11.8	11.8	4.5	4.0	
	30~39만원	39.2	29.2	30.3	22.0	
	40~49만원	10.8	9.7	6.1	2.0	
	50~59만원	22.5	29.9	30.3	32.0	
	60~99만원	6.9	7.6	7.6	8.0	
	100만원 이상	5.9	9.0	15.2	30.0	
	계 (명)	100.0(102)	100.0(144)	100.0(66)	100.0(50)	
		100만원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이상	$\chi^2(18)=25.442$
생활비 수준별	20만원 이하	1.6	3.8	2.1	5.9	
	20~29만원	12.7	11.3	5.3	5.9	
	30~39만원	46.0	28.0	29.8	26.5	
	40~49만원	1.6	11.3	8.5	5.9	
	50~59만원	19.0	30.1	29.8	29.4	
	60~99만원	4.8	7.5	10.6	5.9	
	100만원 이상	14.3	8.1	13.8	20.6	
	계 (명)	100.0(63)	100.0(186)	100.0(94)	100.0(34)	

 $\dagger$  p<0.1, \*p<0.05, \*\*<0.01,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20&gt; 보육료 무상지원 및 양육수당 부재시 양육 형태: 집단간 비교 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낸다	78.5		81.4		78.7		$\chi^2(2)=0.907$		
	그냥 집에서 키운다	21.5		18.6		21.3				
	계 (명)	100.0 (65)		100.0 (791)		100.0 (164)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chi^2(2)$ =23.648***		
자녀 연령별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낸다	74.3		78.5		88.8				
	그냥 집에서 키운다	25.7		21.5		11.2				
	계 (명)	100.0 (296)		100.0 (376)		100.0 (348)				
		남아			여아			$\chi^2(1)=0.126$		
자녀 성별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낸다	81.2			80.3					
	그냥 집에서 키운다	18.8			19.7					
	계 (명)	100.0 (532)			100.0 (488)					
		취업			비취업			$\chi^2(1)=4.393^*$		
취업 유무별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낸다	85.2			79.3					
	그냥 집에서 키운다	14.8			20.7					
	계 (명)	100.0 (263)			100.0 (757)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chi^2(5)=6.576$
학력별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낸다	70.0		79.9		81.5		81.6		
	그냥 집에서 키운다	30.0		20.1		18.5		18.4		
	계 (명)	100.0(10)		100.0(319)		100.0(639)		100.0(49)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chi^2(3)=2.451$
양육비 수준별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낸다	81.4		83.3		79.3		78.8		
	그냥 집에서 키운다	18.6		16.7		20.7		21.2		
	계 (명)	100.0(118)		100.0(324)		100.0(324)		100.0(250)		
		200만원 이하		201~300 만원		301~400 만원		401만원 이상		$\chi^2(3)=6.708^{\dagger}$
가구 소득별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낸다	83.3		82.5		74.7		83.7		
	그냥 집에서 키운다	16.7		17.6		25.3		16.3		
	계 (명)	100.0(257)		100.0(332)		100.0(174)		100.0(196)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 만원		301만원 이상		$\chi^2(3)=0.589$
생활비 수준별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낸다	81.9		80.9		79.7		82.6		
	그냥 집에서 키운다	18.1		19.1		20.3		17.4		
	계 (명)	100.0(138)		100.0(440)		100.0(296)		100.0(132)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부표 21> 보육료 무상지원 및 양육수당 부재시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집단 간 비교 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보육료가 무료니까	27.5		27.6	19.4	$\chi^2(8)=7.118$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어서	49.0		50.6	55.0	
	집에서 돌볼 수 없어서(직장일로)	21.6		16.6	19.4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2.0		5.0	5.4	
	기타	-		0.2	0.8	
	계 (명)	100.0 (51)		100.0 (644)	100.0 (129)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보육료가 무료니까	29.5		28.8	21.7	$\chi^2(8)=14.975^{\dagger}$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어서	44.5		49.8	57.3	
	집에서 돌볼 수 없어서(직장일로)	19.1		16.3	17.2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6.8		4.4	3.9	
	기타	-		0.7	-	
	계 (명)	100.0 (220)		100.0 (295)	100.0 (309)	
		남아		여아		
자녀 성별	보육료가 무료니까	27.8		24.7		$\chi^2(4)=8.179^{\dagger}$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어서	52.8		49.5		
	집에서 돌볼 수 없어서(직장일로)	14.4		20.7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5.1		4.6		
	기타	-		0.5		
	계 (명)	100.0 (432)		100.0 (392)		
		취업		비취업		
취업 유무별	보육료가 무료니까	16.1		30.2		$\chi^2(4)$ =119.137***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어서	40.2		55.3		
	집에서 돌볼 수 없어서(직장일로)	40.6		8.7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2.7		5.7		
	기타	0.4		0.2		
	계 (명)	100.0 (224)		100.0 (600)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별	보육료가 무료니까	28.6	34.5	22.8	20.0	$\chi^2(16)=29.238^*$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어서	28.6	48.2	52.8	52.5	
	집에서 돌볼 수 없어서(직장일로)	14.3	13.7	18.4	27.5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28.6	3.5	5.6	-	
	기타	-	-	0.4	-	
	계 (명)	100.0(7)	100.0(255)	100.0(521)	100.0(40)	

&lt;부표 21&gt; 계속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카이스퀘어검증
양육비 수준별	보육료가 무료니까	33.3	23.3	25.7	28.4	$\chi^2(12)$ =30.723**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어서	49.0	57.0	50.2	45.7	
	집에서 돌볼 수 없어서(직장일로)	8.3	15.2	20.2	20.3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7.3	4.4	3.9	5.6	
	기타	2.1	-	-	-	
	계 (명)	100.0(96)	100.0(270)	100.0(257)	100.0(197)	
		200만원 이하	201~300 만원	301~400 만원	401만원 이상	$\chi^2(12)$ =26.313*
가구 소득별	보육료가 무료니까	29.0	28.1	28.5	17.1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어서	52.3	52.2	48.5	50.6	
	집에서 돌볼 수 없어서(직장일로)	12.6	13.5	20.8	26.8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5.6	6.2	2.3	4.9	
	기타	0.5	-	-	0.6	
	계 (명)	100.0(214)	100.0(274)	100.0(130)	100.0(164)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 만원	301만원 이상	$\chi^2(12)$ =26.524**
생활비 수준별	보육료가 무료니까	26.5	27.5	24.6	24.8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어서	57.5	51.4	49.6	51.4	
	집에서 돌볼 수 없어서(직장일로)	11.5	16.9	22.9	11.9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3.5	4.2	3.0	11.0	
	기타	0.9	-	-	0.9	
	계 (명)	100.0(113)	100.0(356)	100.0(236)	100.0(109)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lt;부표 22&gt; 보육료 무상지원 및 양육수당 부재시 집에서 키우는 이유: 집단 간 비교 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42.9	49.7	37.1	$\chi^2(8)=5.628$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5.7	29.9	40.0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믿 을 수 없어서	21.4	17.7	14.3	
	집주변에 보낼만한 보육 시설이 없어서	-	2.0	5.7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 료를 내야 하니까	-	0.7	2.9	
	계 (명)	100.0 (14)	100.0 (147)	100.0 (35)	
			만0~만1세	만2~만3세	
자녀 연령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53.9	49.4	28.2	$\chi^2(8)=11.868$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0.3	27.2	46.2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믿 을 수 없어서	14.5	18.5	20.5	
	집주변에 보낼만한 보육 시설이 없어서	1.3	2.5	5.1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 료를 내야 하니까	-	2.5	-	
	계 (명)	100.0 (76)	100.0 (81)	100.0 (39)	
			남아	여아	
자녀 성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42.0	52.1		$\chi^2(4)=2.063$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5.0	29.2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믿 을 수 없어서	19.0	15.6		
	집주변에 보낼만한 보육 시설이 없어서	3.0	2.1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 료를 내야 하니까	1.0	1.0		
	계 (명)	100.0 (100)	100.0 (96)		

&lt;부표 22&gt; 계속

		취업		비취업		카이스퀘어검증
취업 유무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53.8		45.2		$\chi^2(4)=2.887$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23.1		34.4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믿 을 수 없어서	17.9		17.2		
	집주변에 보낼만한 보육 시설이 없어서	2.6		2.5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 료를 내야 하니까	2.6		0.6		
	계 (명)	100.0 (39)		100.0 (157)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학력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66.7	57.8	41.5	33.3	$\chi^2(20)=18.756$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3.3	23.4	37.3	22.2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믿 을 수 없어서	-	12.5	18.6	44.4	
	집주변에 보낼만한 보육 시설이 없어서	-	3.1	2.5	-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 료를 내야 하니까	-	3.1	-	-	
	계 (명)	100.0(3)	100.0(64)	100.0(118)	100.0(9)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양육비 수준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40.9	57.4	47.8	37.7	$\chi^2(12)=18.422$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40.9	35.2	20.9	39.6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믿 을 수 없어서	13.6	5.6	25.4	20.8	
	집주변에 보낼만한 보육 시설이 없어서	4.5	1.9	3.0	1.9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 료를 내야 하니까	-	-	3.0	-	
	계 (명)	100.0(22)	100.0(54)	100.0(67)	100.0(53)	

&lt;부표 22&gt; 계속

		200만원 이하	201~300 만원	301~400 만원	401만원 이상	카이스퀘어검증
가구 소득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60.5	41.4	38.6	40.6	$\chi^2(12)=11.931$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0.2	34.5	34.1	34.4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믿 을 수 없어서	4.7	20.7	25.0	21.9	
	집주변에 보낼만한 보육 시설이 없어서	4.7	1.7	2.3	3.1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 료를 내야 하니까	-	1.7	-	-	
	계 (명)	100.0(43)	100.0(58)	100.0(44)	100.0(32)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 만원	301만원 이상	
생활비 수준별	아이가 너무 어려서	44.0	45.2	55.0	39.1	$\chi^2(12)=25.755^*$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44.0	29.8	36.7	13.0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믿 을 수 없어서	4.0	20.2	8.3	43.5	
	집주변에 보낼만한 보육 시설이 없어서	4.0	3.6	-	4.3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 료를 내야 하니까	4.0	1.2	-	-	
	계 (명)	100.0(25)	100.0(84)	100.0(60)	100.0(23)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부표 23> 시설 이용 지원과 재가 양육 지원 정책간의 형평성: 집단 간 비교 분석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카이스퀘어검증
모의 연령별	매우 공평하지 않다	20.0	28.2	32.9	
	공평하지 않다	47.7	51.6	51.2	
	보통	29.2	16.2	13.4	
	공평하다	1.5	3.7	1.8	
	매우 공평하다	1.5	0.3	0.6	
	모름	-	0.1	-	
	계 (명)	100.0 (65)	100.0 (791)	100.0 (164)	
		만0~만1세	만2~만3세	만4세~만5세	
자녀 연령별	매우 공평하지 않다	27.0	30.9	27.0	$\chi^2(10)=11.640$
	공평하지 않다	51.7	48.4	54.0	
	보통	18.2	17.6	14.1	
	공평하다	2.4	3.2	4.0	
	매우 공평하다	0.3	-	0.9	
	모름	0.3	-	-	
	계 (명)	100.0 (296)	100.0 (376)	100.0 (348)	
		남아	여아		
자녀 성별	매우 공평하지 않다	30.3	26.4		$\chi^2(5)=6.367$
	공평하지 않다	49.1	53.7		
	보통	16.2	17.0		
	공평하다	4.1	2.3		
	매우 공평하다	0.4	0.4		
	모름	-	0.2		
	계 (명)	100.0 (532)	100.0 (488)		
		취업	비취업		
취업 유무별	매우 공평하지 않다	23.6	30.1		$\chi^2(5)=11.595^*$
	공평하지 않다	52.1	51.0		
	보통	17.9	16.1		
	공평하다	5.7	2.4		
	매우 공평하다	0.8	0.3		
	모름	-	0.1		
	계 (명)	100.0 (263)	100.0 (757)		

&lt;부표 23&gt; 계속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카이스퀘어검증
학력별	매우 공평하지 않다	10.0	25.1	30.4	28.6	$\chi^2(25)=39.004^*$
	공평하지 않다	50.0	54.5	50.4	42.9	
	보통	30.0	16.3	15.8	24.5	
	공평하다	-	3.4	3.1	4.1	
	매우 공평하다	10.0	0.3	0.3	-	
	모름	-	0.3	-	-	
	계 (명)	100.0(10)	100.0(319)	100.0(639)	100.0(49)	
		10만원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chi^2(15)=13.765$
양육비 수준별	매우 공평하지 않다	23.7	29.3	31.2	26.0	
	공평하지 않다	52.5	48.5	52.8	52.4	
	보통	18.6	17.3	13.6	18.4	
	공평하다	4.2	4.3	2.2	2.8	
	매우 공평하다	0.8	0.6	0.3	-	
	모름	-	-	-	0.4	
	계 (명)	100.0(118)	100.0(324)	100.0(324)	100.0(250)	
		200만원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이상	$\chi^2(15)=16.545$
가구소득별	매우 공평하지 않다	26.5	33.4	27.0	26.0	
	공평하지 않다	48.6	51.2	54.6	51.5	
	보통	20.6	11.7	14.9	18.9	
	공평하다	3.5	3.0	3.4	3.1	
	매우 공평하다	0.4	0.6	-	0.5	
	모름	0.4	-	-	-	
	계 (명)	100.0(257)	100.0(332)	100.0(174)	100.0(196)	
		100만원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이상	$\chi^2(15)=10.727$
생활비 수준별	매우 공평하지 않다	21.0	29.8	29.7	28.0	
	공평하지 않다	55.8	48.2	53.7	51.5	
	보통	19.6	18.0	13.5	16.7	
	공평하다	2.9	3.6	2.7	3.0	
	매우 공평하다	0.7	0.2	0.3	0.8	
	모름	-	0.2	-	-	
	계 (명)	100.0(137)	100.0(440)	100.0(296)	100.0(132)	

† p&lt;0.1, \*p&lt;0.05, \*\*&lt;0.01, \*\*\*&lt;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부록 2〉 양육 수당 정책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설문지

## 양육 수당 정책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육에 대한 지원은 보육 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보육 시설에 다니지 않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가에서는 양육 수당 정책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청에 따라 **“양육 수당 도입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향후 양육 수당 정책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바람직한 양육 수당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조사표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단지 통계적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조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1. 귀하께서는 만0~만5세(72개월)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중단
2. 귀하의 자녀는 현재 정부로부터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 받고 계십니까?  
☐① 예 --> 3으로 ☐② 아니오 --> 11로

※ **3~10번은 양육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3. 귀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②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③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믿을 수가 없어서  
☐④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⑤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⑥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⑦ 기타 ( )  
☐⑧ 비해당
4. 귀하의 자녀는 과거에 보육시설에 다녔습니까?  
☐① 예 --> 4-1과 4-2번으로  
☐② 아니오-->5번으로  
☐⑧ 비해당

- 4-1. 귀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보육료를 지원 받기 때문에  
☐② 시설에 보내는 것이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③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 생활 등의 이유로)  
☐④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⑤ 기타 ( )  
☐⑧ 비해당

- 4-2. 귀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시다가 안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니까  
☐②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③ 내가 키우는 것이 더 좋아서  
☐④ 보육시설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서  
☐⑤ 보육시설이 멀리 있어 다니기 힘들어서  
☐⑥ 기타 ( )  
☐⑧ 비해당

5. 양육 수당으로 받은 돈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식료품비, 주거비 등 생활비의 일부로 사용한다  
☐② 분유 혹은 기저귀 등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한다  
☐③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 (취미생활, 이미용 등)  
☐④ 기타 ( )  
☐⑧ 비해당

6. 양육 수당으로 받은 돈은 자녀 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⑧ 비해당

7. 양육 수당으로 자녀 1인당 월 평균 얼마를 받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만원  
☐② 11만원~15만원  
☐③ 16만원~20만원  
☐④ 21만원~30만원  
☐⑤ 31만원 이상  
☐⑥ 기타 ( )  
☐⑧ 비해당

8. 양육 수당을 받게 된 후 자녀에게 더 좋은 양육을 제공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⑧ 비해당

9. 만일 귀하가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긴다면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시겠습니까?

- ☐① 양육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②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  
☐③ 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시부모님 등)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④ 기타 (예: 직장에 다닐 생각이 아예 없다 \_\_\_\_\_)  
☐⑧ 비해당

10. 만일 귀하가 원하는 액수의 양육수당을 받는다면 직장을 포기하시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 그렇다면 월 양육수당으로 자녀 1인당 얼마를 받기 원하십니까? 자녀 1인당 월 (            )원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그렇다면 양육수당에 상관없이 직장을 다니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예: 직장에 다닐 생각이 아예 없다 _____)
<input type="checkbox"/> ⑧ 비해당

※ 다음은 11~17번은 양육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만0~만5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키울 경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각 가정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1. 양육수당 제도가 도입된다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키우시겠습니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키운다면 월 10만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예 ---> 11-1번  
☐② 아니오 ---> 11-2번  
☐⑧ 비해당

11-1.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②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③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믿을 수가 없어서  
☐④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⑤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⑥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⑦ 기타 (                      )  
☐⑧ 비 해당

11-2. 자녀를 집에서 키우지 않고 보육시설로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 받기 때문에  
☐ ② 시설에 보내는 것이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 ③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 생활 등의 이유로)  
☐ ④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 ⑤ 기타 ( )  
☐ ⑧ 비해당

12. 귀하께서 만일 양육수당을 받으신다면 양육 수당으로 받은 돈은 주로 어떤 용도로사용하시겠습니까?

- ☐① 식료품비, 주거비 등 생활비의 일부로 사용한다
- ☐② 분유 혹은 기저귀 등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한다
- ☐③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 (취미생활, 이미용 등)
- ☐④ 기타 ( )
- ☐⑧ 비해당

13. 이러한 양육 수당이 자녀 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조금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⑧ 비해당

14. 양육 수당으로 자녀 1인당 월 평균 얼마를 받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만원
- ☐② 11만원~15만원
- ☐③ 16만원~20만원
- ☐④ 21만원~30만원
- ☐⑤ 31만원 이상
- ☐⑥ 기타 ( )
- ☐⑧ 비해당

15.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면 받기 전과 비교하여 자녀에게 더 좋은 양육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⑧ 비해당

16. 만일 귀하가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긴다면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시겠습니까?

- ☐① 양육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②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  
☐③ 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시부모님 등)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④ 기타 (예: 직장에 다닐 생각이 아예 없다. \_\_\_\_\_)  
☐⑧ 비해당

17. 만일 귀하가 원하는 액수의 양육수당을 받는다면 직장을 포기하시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 그렇다면 월 양육수당으로 자녀 1인당 얼마를 받기 원하십니까? 자녀 1인당 월 (                      )원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그렇다면 양육수당에 상관없이 직장을 다니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예: 직장에 다닐 생각이 아예 없다 _____)
<input type="checkbox"/> ⑧ 비해당

※ 다음은 18~19번은 전체 응답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현행 보육제도를 개선하여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경우 전액 무료로 보낼 수 있으나,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18. 귀하의 경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시겠습니까?

- ☐①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낸다 --> 18-1번  
☐② 그냥 집에서 키운다 --> 18-2번

18-1.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보육료가 무료니까  
☐ ②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어서  
☐ ③ 집에서 돌볼 수가 없어서 (직장일 등으로)  
☐ ④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 ⑤ 기타 ( )  
☐ ⑧ 비해당

18-2.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②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③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믿을 수가 없어서  
☐④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⑤ 기타 ( )  
☐⑧ 비해당

19.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과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아무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정부정책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공평하지 않다  
☐② 공평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공평하다  
☐⑤ 매우 공평하다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는 몇 명이며 각각의 성별과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총 ( )명	출생 순위		성별		연령
	첫	째	<input type="checkbox"/> ①남아	<input type="checkbox"/> ②여아	만( )세
	둘	째	<input type="checkbox"/> ①남아	<input type="checkbox"/> ②여아	만( )세
	셋	째	<input type="checkbox"/> ①남아	<input type="checkbox"/> ②여아	만( )세
	넷	째	<input type="checkbox"/> ①남아	<input type="checkbox"/> ②여아	만( )세
	다	섯	<input type="checkbox"/> ①남아	<input type="checkbox"/> ②여아	만( )세
	여	섯	<input type="checkbox"/> ①남아	<input type="checkbox"/> ②여아	만( )세

2. 귀하는 자녀 양육비로 한 달 평균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 이때 양육비는 보육비와 교육비를 제외하고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의복비, 식품비, 의료비 등 의식주 비용의 총 합계를 말합니다)

한 달 평균 ( )원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4. 귀하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 ☐①예 ☐②아니오

5.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유배우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⑤ 기타( )

6.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 합산입니다.

월 평균 소득 ( )원
월 평균 생활비 ( )원

7.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대학 재학 중인 경우와 각 학력마다 중퇴인 경우는 전 학력으로 합니다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졸 ☐⑤ 기타